기본 | 24-04

조성철
홍사흠
신서경
김석윤
양승훈

# 저출산 현상의 지역별 격차와 요인 : 국토 불균형에 따른 주거·고용 불안정성을 중심으로

Regional Disparities in Low Birth Rates and Their Causes: Focusing on Housing and Employment Instability

KRIHS 국토연구원

기본 24-04

# 저출산 현상의 지역별 격차와 요인 : 국토 불균형에 따른 주거·고용 불안정성을 중심으로

Regional Disparities in Low Birth Rates and Their Causes: Focusing on Housing and Employment Instability

조성철, 홍사흠, 신서경, 김석윤, 양승훈

KRIHS 국토연구원

■ 저자

**조성철, 홍사흠, 신서경, 김석윤, 양승훈**

■ 연구진

조성철 국토연구원 산업입지연구센터장(연구책임)
홍사흠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신서경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
김석윤 국토연구원 전문연구원

■ 외부 연구진

양승훈 경남대학교 교수

■ 연구심의위원

김명수 국토연구원 부원장
류승한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남기찬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안소현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
이윤석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
장인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조계환 국토교통부 사무관

# 주요 내용 및 정책제안

FINDINGS & SUGGESTIONS

## 본 연구보고서의 주요 내용

1 국토 불균형에 따른 고용과 주거의 불안정이 저출산 현상의 강력한 원인이라는 가설을 수립하고 지역 및 개인 수준의 통계분석과 초점집단인터뷰를 통해 가설 검증

2 분석결과, 지역별 합계출산율의 영향요인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에서 상이하게 작용

- 수도권에서는 지역별 주거불안정 요소(아파트 매매·전세가 증가율 등)가 합계출산율 및 조출생률에 강한 영향을 보인 반면, 고용불안정 요소의 효과는 관찰되지 않음
- 비수도권에서는 출산율에 대한 주거불안정의 효과가 강하지 않았던 대신, 고용증가율 등 지역경제의 장기적인 일자리 전망이나 고용안정성의 문제가 강한 부정적 효과 기록

3 주거 및 고용안정성은 출산의향을 설명하는 개인 수준 통계분석에서도 유의한 효과 기록

- 청년패널조사를 통해 기대자녀 수에 대한 개인·지역 수준의 주거·고용 안정성 효과 검증
- 개인 수준에서는 고용안정(정규직 여부 등)과 주거안정(주거비 부담 비중 등) 효과가 모두 출산의향에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효과를 기록했고, 개인 수준의 영향을 통제한 가운데 지역 수준의 주거·고용 안정 관련 변수 역시 개인의 출산의향에 의미 있는 효과 기록

4 수도권 및 비수도권(부산·창원) 청년 18인에 대한 초점집단인터뷰를 통해 분석결과 심화

## 본 연구보고서의 정책제안

1 지방에서도 서울 이상의 가파른 속도로 합계출산율이 하락하는 지역들이 존재하며, 이들 지역이 공유하는 특징은 고용 및 산업기반의 급격한 악화에 있다는 점을 주목 필요

2 지방에서의 저출산 대책은 청년들에게 안정성과 잠재력을 가진 일자리를 제공하는 균형발전 정책과 함께 추진해야 하며, 동시에 여성 일자리 및 정주기반에 대한 고려가 필요

3 청년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양육 친화적인 주거환경 조성 및 주거지원 정책 대상의 범위 확대가 필요하며, 출산 이후 양육과정 전반을 포괄하는 저출산 대책이 요구됨

# 요 약
SUMMARY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국가적인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최근에는 수도권 과밀현상이 저출산의 원인이라는 문제제기와 함께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균형발전을 저출산의 문제와 관련짓는 논의가 등장
- 그러나 이를 뒷받침할 실증적 근거가 정교하게 구축되지는 못한 상태이며, 수도권·비수도권이라는 범주 내에서도 다양한 원인과 맥락이 존재하는 지역 간 격차에 주목한 연구가 부족
- 본 연구는 국토 불균형에 따른 고용과 주거의 불안정이 저출산 현상의 강력한 원인이라는 가설을 수립하고 실증분석과 인터뷰를 통해 단계적인 가설 검증
- 그간의 연구에서 주거·고용 상태의 불안정함이 대개 개인과 가구 수준의 문제로 다뤄졌던 것과 달리 본 연구에서는 지역의 문제로서 주거·고용안정과 저출산의 문제를 관찰하고자 했다는 점에 차별성 존재

## 2. 저출생과 균형발전의 이론적 관계

### □ 저출산의 원인에 대한 기존 논의 고찰

- 기존의 실증연구들은 인구학적 요인, 사회구조적 요인, 문화심리적 요인을 강조하며 저출산의 원인을 진단
- 그러나 개인·가구 수준의 영향요인과 지역 수준의 영향요인에 대한 구분이 부족했으며 저출산과 저출생의 문제가 섞여 논의되는 경향이 있었고 개인의 출산의향을 결정짓는 요인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부족했다는 한계 존재

### □ 주거불안정과 저출산의 문제

- 개인 수준에서의 주거불안정은 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 비중이나 자가소유 여부

같은 주거상태에 기준할 수도 있지만, 통근에 소요되는 평균시간이나 생활필수 시설과의 접근성처럼 주거환경의 측면에서도 정의 가능

- 지역 수준에서의 주거불안정은 부동산가격 상승률이나 주택공급 여건 같은 거시지표를 통해 측정되는 것이 기본이지만 종합적인 정주환경의 측면도 중요
- 인구밀도가 높은 수도권의 경우는 부동산의 가격 상승 같은 주거비용의 문제가 주거안정을 침해하는 주된 요소로 작동하겠으나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비수도권 다수 지역에서는 기본적인 정주환경의 수준이 주거안정을 크게 좌우
- 지역 유형에 따라 상이한 맥락을 가진 주거불안정의 문제는 청년가구가 결혼·출산을 준비하고 인생 계획을 수립하는 데 제약조건으로 작용하며 저출산 심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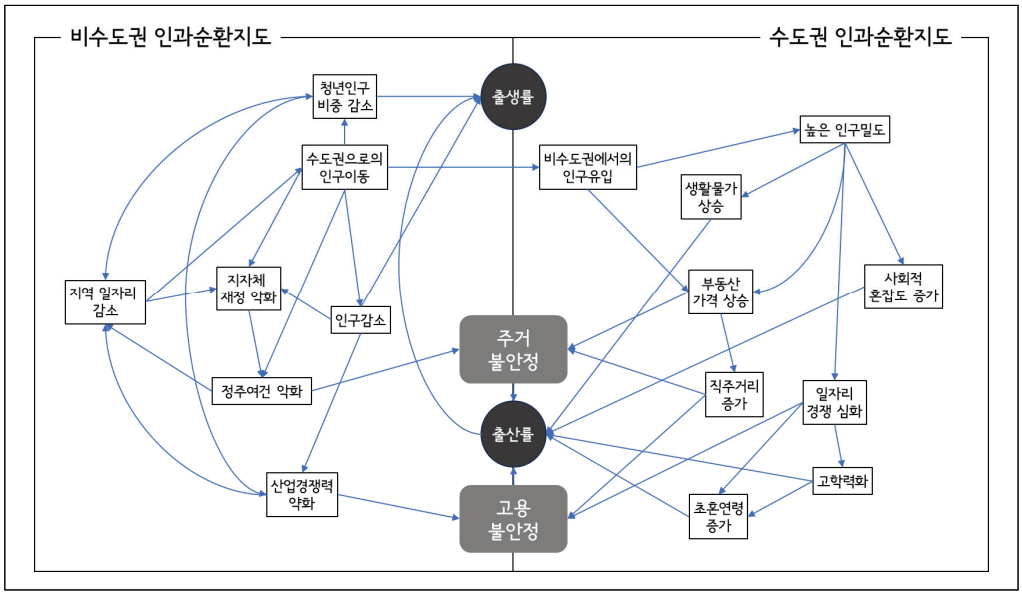
### □ 고용불안정과 저출산의 문제

- 개인 수준에서 정규직 여부 같은 고용상태나 장기근속 가능성 같은 고용전망은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의사결정뿐만 아니라 이행 시기에 영향
- 지역 수준에서는 노동시장의 중장기적인 전망이나 불확실성이 지역에 소속된 개인의 고용안정성을 결정짓는 요소로 작용하며 출산의향과 가족계획에도 영향

### □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호연계된 인과지도

- 지방을 떠나 몰려드는 인구 탓에 악화되는 수도권의 과밀환경은 부동산가격과 생활물가 상승으로 연쇄되고 직주거리와 사회적 혼잡도를 악화시켜 결과적으로 수도권 인구의 주거불안정을 야기
- 수도권 과밀환경의 지나친 경쟁은 청년들이 체감하는 고용안정성을 해칠 수 있고, 취업과 학업에 대한 준비 기간을 연장해 만혼·비혼 현상이 확대되는 데 기여하고 있음
- 한편, 비수도권에서 청년인구의 유출은 지역인구의 감소를 직접적으로 야기할 뿐만 아니라, 출생률 하락에 기여함으로써 자연적인 인구감소 추세를 가속화
- 동시에, 인구유출은 산업경쟁력 약화를 부추기며 지자체 재정기반을 축소시켜 교육·문화 시설 같은 정주기반 서비스의 질을 유지하기 어렵게 해 경쟁력 있는 인재를 지역으로 유치할 도시적인 역량을 약화시키는 결과 파급

**그림 1 | 수도권과 지방의 상호관계를 고려한 균형발전과 저출생의 인과지도**




자료: 연구진 작성.

## 3. 저출생 현상의 지역별 격차와 영향요인

- 3장에서는 시군구 단위 고정효과 패널자료분석을 통해 고용안정 및 주거안정과 관련된 지역 수준 변수들이 저출생 현상의 지역별 격차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
- 실증분석결과는 고용·주거 불안정의 효과가 지역마다 상이하게 나타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구분해 실증분석을 수행했을 때 주거안정 관련 변수와 고용안정 관련 변수의 효과가 엇갈리게 나타남
- 수도권에서는 주택매매가격이나 주택전세가격의 증가율과 같은 주거불안정 변수의 효과가 합계출산율·조출생률 모두를 설명하는 데 주요한 효과를 나타냄
- 반면, 비수도권에서는 주거안정과 관련된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못했거나 효과의 강도가 낮았던 데 비해 고용증가율과 같은 고용안정 관련 변수가 지역별 저출생 현상의 격차를 설명하는 데 높은 설명력을 나타냈음

- 이를 통해, 주거비 부담 비중이 높고 주택가격 상승 폭이 큰 수도권에서는 주거 상태의 불안정이 저출산을 심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반면, 비수도권에서는 지역노동시장의 고용불안정이 저출생 현상을 악화하는 데 중요하게 기여한다는 시사점 도출

## 4. 청년의 출산의향과 주거·고용 안정의 관계

- 4장에서는 청년패널조사를 활용해 개인의 출산의향(기대 자녀 수)를 개인 및 지역 수준의 영향요인을 통해 설명하는 회귀분석 수행
- 시군구 단위에서 총량화된 지표의 상관관계를 밝히는 3장의 분석과 달리, 개인의 출산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가구·지역의 속성을 보다 직접적으로 규명하고자 했음
- 분석결과, 개인 수준에서는 가구의 주거비 부담 비중이나 정규직 여부 같은 개인 수준의 주거·고용 안정 속성들이 출산의향을 설명하는 데 의미 있게 기여했음
- 또한 개인 수준의 제반 특징을 통제했을 때에도, 아파트 평균매매가격이나 고용증가율 같은 지역 수준의 주거·고용 안정 변수들이 3장의 분석결과와 일관되게 개인의 출산의향을 설명하는 데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는 점을 실증하였음

## 5. 심층면접조사를 통한 저출산의 영향요인 탐구

- 5장에서는 수도권 청년 10인과 비수도권(부산·창원) 청년 8인에 대한 초점 집단인터뷰를 통해 고용·주거 안정과 출산의향에 대한 본 연구의 이론적 가설 및 실증분석결과를 정성적으로 확인·심화하고자 했음
- 수도권 응답자에게서는 주거비용과 출산의향의 관계에 대한 다양한 맥락에서의 논의가 이어졌던 반면, 비수도권 응답자들에게서는 지역의 장기적인 일자리 전망 속에서 자신의 삶의 경로와 가족계획을 고민하는 청년들의 경험이 관찰
- 즉, 수도권 인터뷰 참여자 다수가 고용불안정보다는 주거불안정의 요소가 출산의향 및 가족계획을 제약하는 데 중요하다고 응답한 반면, 비수도권 인터뷰 참여자들은 지역 일자리의 장기적인 미래와 안정성에 대해 불안감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음

- 특히 비수도권에서는 제조업뿐만 아니라 유아교육, 방송콘텐츠 제작업, 음악강사 등 다양한 서비스 직종에 종사하는 응답자들 역시 지역의 인구감소가 야기하게 될 일자리 위기를 체감하며 새로운 소득원을 찾아 이직이나 이주를 고민하고 있는 모습이 관찰
- 인터뷰 내용 중 일부는 이론적 논의 및 실증분석에서 다루지 못했던 이슈들을 환기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수도권에서는 주거의 불안정이 단순히 비용의 문제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환경이 양육친화적이지 못한 탓에 기인하는 측면도 강하다는 점을 청취할 수 있었음
- 또한 비수도권에서는 도시 외곽으로만 나가도 소아청소년과를 찾아보기 어려운 정주환경의 문제가 반복해서 제기되었고, 실증분석에서 계량화하기 어려웠던 문화적인 활력과 다양성의 문제 역시 청년들의 지역유출을 가속화하는 요인의 하나로 지적되었음
- 수도권 인터뷰에서 강조되었던 주거복지의 대상 자격 문제나 초등학교 이후 단계에서 찾을 수 있는 사회적 돌봄체계의 문제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며, 비수도권 인터뷰에서 제기되었던 여성 일자리의 공백 문제나 청년이 선호하는 커리어 패스가 부재하다는 이슈에 대해서도 정책적인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 6.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 본 연구의 결과물은 저출산 현상이 국토공간의 불균형과 얽혀 있는 문제임을 강하게 시사
- 수도권으로 쏠린 일자리와 인구의 불균형은 주거비와 사회적 경쟁 수준을 증가시켜 수도권 청년들의 출산의향을 좌절시키는 반면, 비수도권 다수 지역에서는 일자리와 인구의 이탈로 인해 경제기반과 정주환경이 부실해지면서 청년들이 미래를 꿈꾸며 안정적인 가정을 꾸릴 수 있는 기반이 좁아지고 있는 상황
- 따라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거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촘촘한 복지체계를 구축하는 노력과 동시에, 비수도권의 안정적인 고용기반과 정주환경을 강화하기 위한 균형발전 정책의 종합적인 추진이 국가적 저출산 추세 완화를 위해 필요

# 차 례

CONTENTS

**주요 내용 및 정책제안** ····· iii
**요 약** ····· v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 3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 5
3. 연구의 틀 및 주요 개념 ····· 9

제2장 저출생과 균형발전의 이론적 관계

1. 이론적 논의의 기본 전제 ····· 15
2. 저출생 영향요인에 대한 이론적 고찰 ····· 18
3. 국토 불균형과 저출생의 관계 ····· 26
4. 수도권과 지방의 상호관계를 고려한 인과지도 ····· 34

제3장 저출생 현상의 지역별 격차와 영향요인

1. 저출생 현상의 지역별·시점별 실태 분석 ····· 39
2. 저출생의 지역별 영향요인 ····· 47
3. 분석결과의 종합 ····· 63

제4장 청년의 출산의향과 주거·고용 안정의 관계

1. 개인 수준 분석의 필요성 ····· 67
2. 청년의 기대 자녀 수를 설명하는 분석모형 ····· 68
3. 개인 수준 회귀분석의 주요 결과 ····· 73
4. 소결 및 향후 연구방향 ····· 77

제5장 심층면접조사를 통한 저출산의 영향요인 탐구

1. 저출산 관련 정성적 연구문헌 고찰 ····· 81
2. 심층면접조사의 추진방법 및 조사내용 ····· 84
3. 수도권 청년 대상 인터뷰 결과 ····· 87
4. 비수도권 청년가구 대상 인터뷰 결과 ····· 96
5. 심층 인터뷰 결과의 종합 및 시사점 ····· 109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 주요 분석결과의 요약 ····· 115
2. 저출산 정책에 대한 시사점 ····· 118
3. 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시사점 ····· 122
4. 연구의 성과와 향후 연구방향 ····· 125

**참고문헌** ····· 129

**SUMMARY** ····· 135

# 표차례

LIST OF TABLES

〈표 1-1〉 선행연구 요약 및 차별성 ····· 8

〈표 2-1〉 주거안정성의 국가별 평가요소 ····· 23

〈표 3-1〉 시도별 합계출산율(2012~2022) ····· 40
〈표 3-2〉 시도별 조출생률(2012~2022) ····· 41
〈표 3-3〉 시군구 합계출산율(TFR) 분포(2012~2022) ····· 42
〈표 3-4〉 시군구 조출생률(CBR) 분포(2012~2022) ····· 43
〈표 3-5〉 지역 수준 패널자료분석에 포함된 변수의 설명 ····· 51
〈표 3-6〉 지역별 합계출산율·조출생률을 설명하는 고정효과모형 분석결과 비교 ····· 55
〈표 3-7〉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구분한 합계출산율 영향요인의 고정효과모형 분석결과 ··· 57
〈표 3-8〉 조출생률을 설명하는 고정효과모형 분석결과의 수도권·비수도권 비교 ····· 60
〈표 3-9〉 청년인구 순유입률을 설명하는 고정효과모형 분석결과의 수도권·비수도권 비교 ··· 62

〈표 4-1〉 희망하는 자녀 숫자에 대한 개인 수준 영향요인의 회귀분석결과 ····· 74
〈표 4-2〉 희망하는 자녀 숫자에 대한 개인·지역 수준 영향요인의 회귀분석결과 ····· 76

〈표 5-1〉 조성호, 이지나, 김근태(2021)의 심층면접조사 질의사항 개요 ····· 83
〈표 5-2〉 심층면접조사의 주요 질의 내용 ····· 86
〈표 5-3〉 수도권 청년가구 대상 인터뷰의 응답자 특징 ····· 88
〈표 5-4〉 비수도권 청년가구 대상 인터뷰의 응답자 특징 ····· 97

# 그림차례

LIST OF FIGURES

〈그림 1-1〉 연구의 흐름도 ····· 9

〈그림 2-1〉 광역시·도별 인구밀도와 부동산 가격 변동률의 비교 ····· 29
〈그림 2-2〉 거제시의 연도별 합계출산율 및 출생아 수 변화 추이 ····· 31
〈그림 2-3〉 광역권별 인구증감률 요인분해 결과(좌측) 및
전체 인구변동 중 청년이동의 기여도(우측) ····· 33
〈그림 2-4〉 수도권과 지방의 상호관계를 고려한 균형발전과 저출생의 인과지도 ····· 36

〈그림 3-1〉 시군구별 합계출산율 및 조출생률 분포(2022년 기준) ····· 44
〈그림 3-2〉 시군구별 합계출산율(TFR)과 조출생률(CBR)의 산포도 ····· 45
〈그림 3-3〉 합계출산율(TFR)과 조출생률(CBR)의 지역별 상관계수 및 산포도 ····· 46

CHAPTER 1

#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 3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 5
3. 연구의 틀 및 주요 개념 ····· 9

# 01 서론

본 장은 균형발전의 관점에서 저출산의 문제를 조명해야 하는 맥락과 필요성을 서술하였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빠르게 악화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는 국토공간의 불균형 문제와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다. 기존 연구는 인구학적, 사회구조적, 경제적 측면에서 저출산의 요인을 조명한 바 있다. 그러나 저출산의 영향요인을 지역환경의 관점에서 규명한 연구사례는 여전히 부족하다. 본 연구는 저출산 현상의 원인을 지역수준의 고용 주거 불안정과 관련해 논의하는 동시에, 저출산 현상의 결과가 국토의 균형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고 있다.

##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한국 사회의 합계출산율은 2023년 2분기 기준 0.7명 수준으로 국제적인 초저출산 기준(1.3명)을 크게 하회하고 있다. 보다 심각한 문제는 국제사회의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저출산 기록을 갱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이 하락하는 속도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2012년 1.24명의 고점을 기록한 이래 합계출산율 추이는 매년 가파른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다. 2005년에서 2015년까지는 유배우 출산율(혼인한 여성의 기대출산율)이 꾸준히 증가했으나, 2016년부터는 이마저 빠르게 하락하고 있어 출산의향이 없는 무자녀 혼인가구 비중이 확대되는 추세다.

한 가지 특기할 사항은 출산율의 지역 간 격차가 매우 크다는 점이다. 특히 기록적인 저출산 경향은 서울 시내 행정구에 집중되어 있고, 서울특별시와 세종특별자치시의 합

계출산율은 시점에 따라 2배 이상 차이가 발생하는 등 무시하기 어려운 지역격차를 드러내고 있다. 이 때문에 최근 논의에서는 서울 등 대도시 중심으로 심화되고 있는 저출산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담론이 확대되고 있는데, 인구과밀이 저출산의 원인이라는 조영태(2021) 등의 저작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감사원(2021)의 최근 분석 역시 지역별 인구밀도와 합계출산율의 부정적인 상관관계를 실증함으로써 수도권·대도시 지역의 인구과밀로 인한 과도한 경쟁과 압력이 저출산의 근원적인 영향이라는 담론을 확산시키는 데 기여했다.

그러나 지역별 저출산의 원인은 인구밀도에 대한 사회생태학적 설명만으로 해소되기 어려운 복합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 다면적인 요인의 영향을 통제하는 인과적 추론이 필요하다. 질 좋은 일자리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비수도권 청년들의 수도권 유입이 지속되고 있으나, 수도권의 높은 생활비용과 주거비용, 과도한 사회문화적 압박이 복합적으로 맞물려 저출산의 과정을 심화하는 현 상황에 대한 구조적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균형발전과 연계한 저출산 대책의 필요성을 역설해왔으나 구체적인 대안 제시는 미흡한 상태다.

### 2) 연구의 목적

상기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국가적인 저출산 현상과 균형발전의 관계에 대한 실증적 근거와 함께 정책적인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연구목적을 갖는다. 구체적인 목적은 크게 셋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지역별 저출산 현상의 실태와 추세를 국토 불균형의 관점에서 조망하는 것이고, 둘째는 지역 수준의 출산 관련 지표나 개인 수준에서의 출산의향·출산이행의 영향요인을 설명하는 통계분석을 단계적으로 수행해 관련 정책의 추진을 위한 실증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셋째, 분석결과의 종합을 통해 균형발전의 관점에서 저출산 문제에 접근하기 위한 공간 정책의 기본방향과 원칙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본 연구의 궁극적인 지향점이 있다.

##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 1) 연구의 내용적 범위

**(지역별 합계출산율 추세분석)** 지역별 출산율의 시계열 추세분석 및 하위집단에 대한 출산율 비교를 시도하였다. 이를 통해 지역별 저출산·인구감소 패턴을 유형화하고 지역유형에 따른 추세를 논의하였다.

**(패널자료분석)** 시군구 혹은 읍면동 단위 패널자료분석을 통해 지역 간 출산율 격차의 영향요인을 탐색하였다. 박관태, 전희경(2020)은 시군구 단위에서 가용한 다양한 변수를 테스트한 바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지역별 산업구조 변동, 일자리 및 기타 정책변수 등의 영향을 복합적으로 검정하였다.

**(개인 수준 분석)** 지역 수준 변수와 개인 수준 변수를 결합한 다층자료에 기초해 회귀분석을 수행하고 출산의향에 대한 영향요인을 고찰하였다. 예를 들어, 지역 수준 요인이 주택공급량이라면 가구 수준에서는 주거비 부담 비중 등의 변수가 출산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점에서 개인자료와 지역수준 자료를 결합한 통계분석이 기존 연구의 결과를 확장할 수 있다고 전제하였다. 분석자료는 청년패널조사 자료(YP2007)를 기본으로 활용했으며 2020년도 조사자료에 기준하였다.

### 2) 연구의 공간적·시간적 범위

**(공간적 범위)**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국토 전체를 대상으로 하며, 공간분석의 단위는 기초지자체 수준에 해당하는 시군구 단위를 활용하였다. 지역 간 출산율 격차의 탐색이나 출산율 격차에 대한 요인분석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되,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대한 분석을 구분해 수행하고 그 결과를 비교함으로써 저출산과 관련한 영향요인이 어떻게 상이한지를 해석한다. 2023년 기준 전국 시군구는 227개 지역이나, 전라남도 신안군, 인천광역시 옹진군 등 3개의 기초지자체는 핵심변수인 주거안정성 변수(아파트 실거래가 등)를 포함해 다수 변수의 집계가 어려워 최종적인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시간적 범위)** 본 연구에서 수행하는 분석의 기본적인 시간적인 범위는 2012년부터 2022년이다. 국가적인 합계출산율 추세는 2002년까지 하락하며 저점을 찍은 후 완만한 등락세를 유지하다가 2012년 이후 다시금 가파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 같은 자료의 추세 및 가용자료의 확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본 연구는 2012년부터의 지역별 합계출산율 추세를 분석하였다. 다만, 청년 개인 수준의 출산의향을 설명하는 본 연구 4장의 분석에서는 가용자료의 상황 등을 고려해 2020년 횡단면자료의 분석을 수행하였다.

### 3) 연구의 주요 방법

#### (1) 정량적 연구방법

인과관계 추론을 위한 정량적 분석방법의 기본 틀은 2012년부터 2022년까지의 시군구 단위 패널자료에 기초하는 고정효과(fixed-effects) 모형이다. 패널자료는 관측 가능한 변수로 통제하기 어려운 지역 간의 이질성(unobserved heterogeneity)을 고려해 누락변수 편의(omitted variable bias)를 줄일 수 있다는 강점을 갖는다. 횡단분석의 경우 지역특징의 정적인 관계만을 비교할 수 있는 반면, 패널자료 분석에서는 지역 수준의 특징을 고정시킨 상태에서 시점 간의 차이로 인한 종속변수값의 영향을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적극적인 인과적 추론이 가능하다. 또한 횡단자료 혹은 시계열자료에 비해서 훨씬 풍부한 변수의 변이량(variability)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양한 패널자료 분석기법 중에서 본 장의 분석은 기본적으로 고정효과모형을 사용한다. 고정효과모형에서는 종속변수의 총오차를 개체특성($u_i$)과 고유오차($e_{it}$)의 합으로 구분하고, 고유오차는 모형으로부터 외생적이라 가정하게 된다. 고정효과 모형의 핵심은 모형에 포함된 독립변수들과 상관되어 있는 개체특성($u_i$)을 모형으로부터 제거하거나 직접 추정함으로써 모형이 갖는 내생성의 문제를 해결하고 독립변수 효과에 대한 불편향(unbiased) 추정치를 획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개체특성을 통계적

으로 제거하는 First-Difference 추정방식, Within-Group 추정방식과 개체특성을 직접적으로 추정하는 LSDV(Least Squares Dummy Variable) 추정방식이 적용 가능한데, 본 연구에서는 Within-Group 추정방식을 적용하였다.

### (2) 정성적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 주제로 다루는 출산의향이나 고용·주거 측면의 안정성과 같은 변수는 기본적으로 주관적이고 심리적인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량적인 지표만으로 객관화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통계분석을 통해 인과관계를 파악했다고 하더라도 실제 청년가구의 의견을 수집해 지역환경이 출산의향이나 출산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인과경로를 파악하는 정성적인 연구방법이 보완되어야 한다.

이 점에서 본 연구의 5장에서는 청년집단을 유형별로 구분해 1시간 가량의 초점집단 인터뷰를 수행하는 정성연구를 추진한다. 특히 유년기부터 수도권 혹은 비수도권에 거주한 청년집단, 대학 진학이나 취직을 위해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거처를 옮긴 청년집단,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거처와 근무지를 옮긴 청년집단 등으로 조사 대상의 유형을 구분하고 각 집단의 출산의향 수준과 그 변화의 맥락적 요인을 심층적으로 탐구하기로 한다.

### (3) 기존 문헌과 본 연구의 차별성

저출산의 영향요인 및 정책적 해법에 대한 기존 연구는 다수 축적되어 있는 상태다. 그러나 거주 혹은 근로하고 있는 지역의 환경적인 맥락이나 균형발전 정책과의 연계성에 무게를 싣고 저출산의 문제를 논의한 연구는 아직까지 부족하다. 본 연구는 개인과 지역 수준에서 고용안정과 주거안정의 문제가 청년들의 출산의향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정성적 분석방법을 통해 탐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된 방법론을 지향하고 있다.

**표 1-1 | 선행연구 요약 및 차별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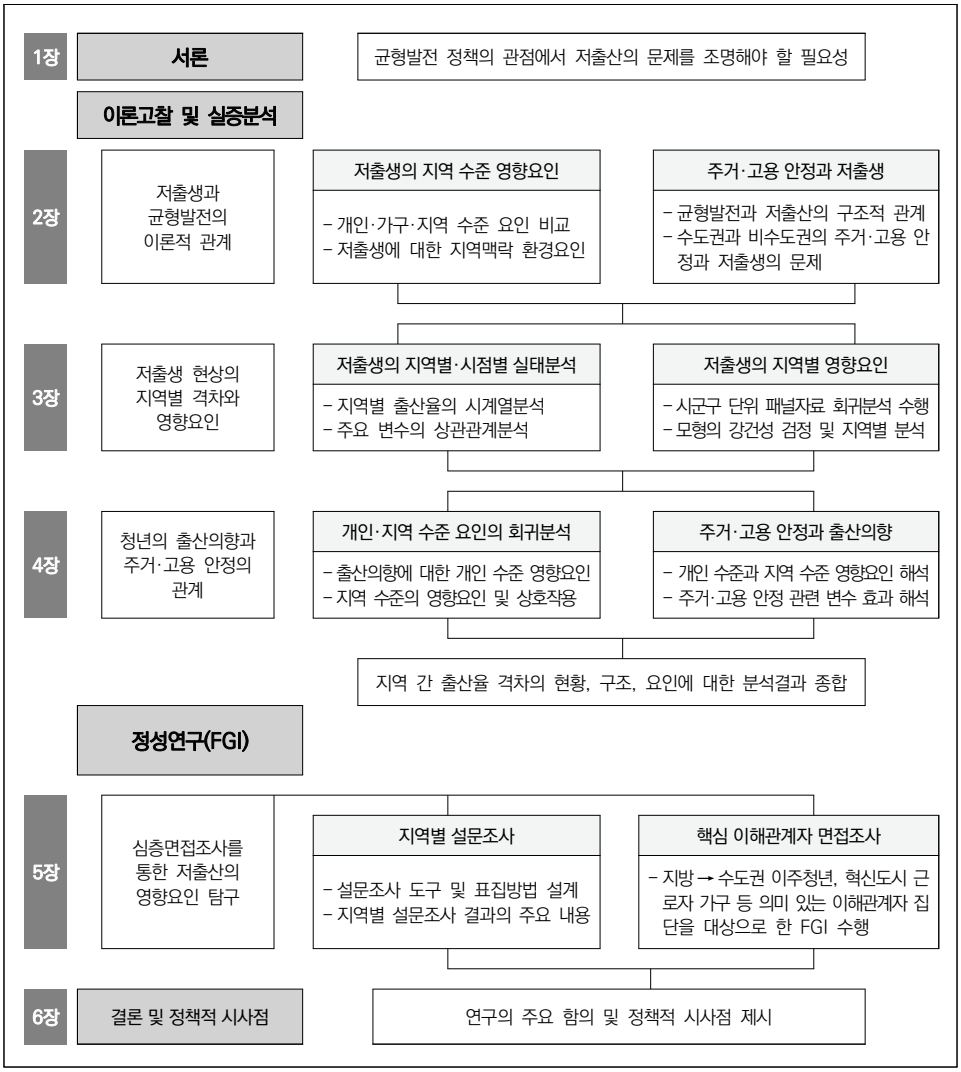
| 구분 | |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 | |
|---|---|---|---|---|
| | | 연구목적 | 연구방법 | 주요 연구내용 |
| 주요 선행 연구 | 1 | • 감사원(2021), 인구구조변화 대응실태 I (지역)<br>• 청년층 수도권 집중 및 저출산 실태에 대한 실증분석과 정책 권고 | • 지각된 인구밀도 및 사회적 경쟁에 대한 구조방정식 분석<br>• 공무원 인터뷰 및 설문조사 등 | • 지역인구 불균형과 저출산 문제의 주요 실태분석<br>• 저출산 및 지역인구 불균형 완화대책 경과와 보완 방향 |
| | 2 | • 이삼식·이지혜(2014), 초저출산현상 지속의 원인과 정책과제<br>• 초저출산현상의 사회경제적 요인 진단 및 정책적 시사점 도출 | • 회귀분석 등 인과적 추론을 위한 통계분석<br>• 시계열 통계자료 추세분석 | • 합계출산율에 대한 사회경제적 요인의 영향 분석<br>• 초저출산 현상의 탈피를 위한 향후 정책과제 |
| | 3 | • 안홍기(2020), 균형발전과 지역일자리 창출 대안으로서 사회적경제와 과제 | • 제도 현황 분석<br>• 이론적 고찰 및 해외 동향 조사<br>• 국내사례 연구 | • 저출산, 고령화 동향과 국가균형발전 현황 분석<br>• 기존 지역일자리 정책의 한계와 전환 필요성<br>• 사회적경제를 통한 일자리창출 과제 |
| 본 연구 | | • 저출산 현상의 지역별 격차와 요인: 국토 불균형에 따른 주거·고용 불안정성을 중심으로 | • 패널자료분석<br>• 개인 수준 회귀분석<br>• 초점집단인터뷰 | • 지역별 합계출산율 및 조출생률 격차의 영향요인 분석<br>• 개인 수준 출산의향의 설명요인 분석<br>• 청년가구 대상 집단인터뷰를 통한 저출산 제약조건 및 정책수요 파악 |

자료: 연구진 작성.

# 3. 연구의 틀 및 주요 개념

## 1) 연구의 틀

**그림 1-1 | 연구의 흐름도**




자료: 연구진 작성.

## 2) 주요 개념

### (1) 합계출산율

합계출산율(Total Fertilty Rate: TFR)은 여성 1인이 가임 기간(15~49세)에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의 평균을 추정한 지표로써, 국가별 출산력의 수준을 비교하는 지표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합계출산율은 1970년(합계출산율 4.53) 이래 출생통계의 핵심지표 중 하나로 작성되고 있는데 2016년 이래 매년 역대 최저치를 갱신하고 있는 상황이다. 기본적으로 합계출산율의 산식은 가임 기간(15~49세) 여성인구의 연령별 출산율(Age-Specific Fertility Rate: ASFR)을 합산하는 것이다. 즉, 합계출산율은 현시점에서 측정된 15세에서 49세까지의 연령대별 출산율이 향후 35년 동안에도 지속되리라 가정하고 추정되는 모의 결과라 할 수 있다. 이 같은 산식의 특성 탓에 합계출산율은 해당 지역·국가의 연령구조에 영향을 받지 않고 평균적인 출산경향을 비교할 수 있는 지표로 활용이 가능하다. 반면, 연령대별 인구구성이 상이한 지역 간의 실제 출생아 수를 비교·예견하는 데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실제로 지역별 합계출산율은 해당 지역의 출생아 수 혹은 자연적 인구증가율과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상관관계를 갖지 않으며, 가임기 여성인구 규모가 적은 지역에서 높은 값을 나타내는 특징이 있다(장인수, 우해봉, 박종서, 정진우 2021).

### (2) 조출생률

조출생률(Crude Birth Rate)은 인구 천 명당 출생아 수를 의미하는 지표로써 출생통계 중에서 측정방법이 가장 간단하다. 합계출산율과 달리, 지역의 인구규모나 연령대별 인구구성을 배제하지 않기 때문에 이 같은 특징이 상이한 지역 간의 출생률을 비교하는 데 유용성이 높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합계출산율과 함께 조출생률을 핵심적인 변수로 분석하되, 이들의 속성을 보완할 수 있는 자연인구증가율, 출생아 수, 청년인구 순유입률 등의 지표를 분석에 포함한다.

### (3) 저출산·초저출산

한 사회의 합계출산율이 2.1명에 미치지 못할 때 저출산 상태라 분류한다. 합계출산율이 2.1명 수준을 유지해야 자연적인 인구대체와 재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인구학에서는 합계출산율 2.1명을 대체출산율(replacement level of fertility)이라 칭하기도 한다. 반면, 1.3명 미만의 합계출산율을 기록하는 사회는 초저출산사회로 분류한다(이삼식, 이지혜 2014).

CHAPTER 2

# 저출생과 균형발전의 이론적 관계

1. 이론적 논의의 기본 전제 ····· 15
2. 저출생 영향요인에 대한 이론적 고찰 ····· 18
3. 국토 불균형과 저출생의 관계 ····· 26
4. 수도권과 지방의 상호관계를 고려한 인과지도 ····· 34

# 02 저출생과 균형발전의 이론적 관계

본 장은 국토공간의 불균형이 저출생 현상에 미치는 인과관계를 이론적으로 논의한다. 국토 불균형이란 수도권에 대한 인구·자원의 쏠림을 의미한다. 수도권으로의 인구집중으로 인한 지가 상승과 일자리 경쟁은 청년가구의 주거·고용 불안을 야기함으로써 만혼·비혼 현상과 맞물린 초저출산 경향을 고착시키고 있다. 반면, 비수도권에서는 지속적인 청년인구 유출로 인한 가임기 여성인구 감소가 저출생 현상을 통한 자연인구 감소를 가속화하는 상태다. 이처럼 수도권과 비수도권에서의 저출생 문제는 상이한 메커니즘을 갖고 있으며, 지역 간의 순환적인 인과관계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총체적인 이해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단계적이고 구조적인 실증분석의 설계가 필요하다.

## 1. 이론적 논의의 기본 전제

### 1) 기존 연구의 정형화된 사실

출산행위의 영향요인을 설명하는 기존 연구는 인구학, 사회학, 경제학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방대한 문헌체계를 이루고 있다. 이로부터 도출된 우리나라 출산율 하락의 정형화된 사실(stylized facts)은 크게 **인구학적 요인, 사회구조적 요인, 문화심리적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인구학적 측면에서는 가임기, 특히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여성의 인구 비중이 빠르게 감소하면서 해당 연령대의 출생아 수가 감소했다는 점이 우선적인 영향요인으로 꼽힌다. 또한 법률적인 혼인관계 테두리 안에서의 출산이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는 우리나라 맥락에서는 비혼가구의 비중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는 추세 역시 출생아 수 감소에 기여했다. 한편, 여성의 노동시장 참가와 맞벌이 부부관계가

보편화되고 고학력화가 진행되면서 초혼연령·초산연령이 빠르게 상승했다는 점도 인구학적 측면에서 자녀 수 감소에 기여한 중요한 요인이다(우해봉, 장인수 2019).

반면, 사회구조적 측면에서는 고용형태와 소득 수준 측면에서 일자리의 안정성이 낮아지고 있다는 점이 혼인율과 출산경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보고가 축적되어 있다(배호중, 강시온, 한창근 2020). 또한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주거비용의 증가가 혼인비용 증가로 이어져 비혼·만혼을 부추기고 있고, 혼인가구의 무자녀율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보고가 있다(강동익, 송경호 2021). 여성 근로자의 고학력화로 인해 출산행위의 기회비용이 증가했다는 점, 그리고 여전히 출산에 따른 경력단절과 노동시장에서의 패널티가 여성 근로자에게 가혹하게 전가되고 있다는 점 역시 맞벌이 가정의 출산의향을 제약하고 있는 요소다.

한편, 가치관의 변화와 같은 문화심리적 요소 역시 저출산 추세를 지속시키는 중요한 맥락으로 꼽힌다. 박종서, 임지영, 김은정, 변수정 외(2023)의 '2021년도 가족과 출산조사'에 따르면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응답은 남성의 경우 12.1%, 여성의 경우 4.7%에 불과했다. 또한 동 조사에서 자녀가 꼭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서도 남성의 23.2%, 여성의 31.6%는 없어도 무관하다는 응답을 나타냈는데, 혼인과 출산에 대한 의향은 조사연도마다 조금씩 낮아지는 추세에 있다. 이처럼 출산을 절대적인 사회규범이 아니라 개인이 선택해야 할 문제로 받아들이는 가치관의 변화는 저출산의 문제를 경제적·제도적 인센티브의 확대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시사점을 주고 있다.

### 2) 본 연구의 이론적 관점

이처럼 다양한 차원의 영향인자 중에서 본 연구가 주목하는 차원은 삶의 안정성이라는 변수다. 출산에 대한 의사결정은 개인이나 가구가 체감하는 삶의 안정성에 크게 좌우될 수 있다. 여기서 삶의 안정성이란 단기적·장기적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부터 객관적·주관적으로 자유로운 정도를 의미한다. 그런데 출산과 관련한 삶의 안정에 있어 무

엇보다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주거와 고용의 안정일 것이다. 즉, 가족과 함께 할 미래를 안정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일자리와 주거의 조건을 조건 혹은 전망이 확보될 수 있는지의 여부가 개인·가구의 출산행위를 좌우하는 핵심적인 변인이라는 것이 본 연구의 전제다. 이어지는 논의에서는 수도권으로의 과도한 인구 쏠림이 비수도권뿐만 아니라 수도권 청년가구의 주거와 고용의 안정성을 침식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가설을 논의할 것이다.

이처럼 균형발전의 관점에서 출산의 문제를 탐구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측면에서 기존 연구의 일반적인 경향과 구분되는 접근방식이 필요할 수 있다. 첫째, **개인·가구 수준의 영향요인과 지역 수준의 영향요인을 구분해 생각**함이 필요하다. 개인적인 고용상태가 안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지역산업의 경기나 전망이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면 해당 가구는 일자리 측면에서의 삶의 안정성을 긍정적으로 체감하기 어려울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지역 수준에서의 주거비용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면, 자가를 안정적으로 보유하지 못했거나 주거비 부담 비중이 높은 가구일수록 삶의 안정이 취약해질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이처럼 주거·고용의 안정은 가구 수준에서의 지표만으로 이해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라, 미시적 층위와 거시적 층위 간의 상호관계 속에서 조명되어야 할 현상이라는 것이 본 연구의 관점이다.

둘째, **저출산과 저출생의 문제를 구분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 저출산 현상은 비혼과 무자녀 비율의 증가로 인한 출산경향의 하락세를 의미한다면, 저출생 현상은 실질적인 출생아 수의 감소를 의미한다. 따라서 개념적으로 저출산은 저출생으로 이어질 수 있지만, 저출생의 원인이 반드시 저출산일 필요는 없다. 이를 구분함이 중요한 까닭은 출산율이 상대적으로 낮지 않음에도 인구유출과 청년 비중 감소로 인해 저출생이 심화되고 있는 지역이 특히 비수도권에서 다수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토 전체의 다양성을 포착하기 위해서는 저출산과 저출생의 인과관계를 종합적으로 조망하는 이론적 관점과 실증모형의 틀을 설계함이 중요하다.

셋째, **출산행위와 함께 출산의향을 구분해 탐구**할 필요가 있다. 기존 연구 중에는 혼인사실 자체를 잠재적인 출산의향이라 전제하고 이것이 실제 출산으로 이어지는 것

을 제약하는 조건이 무엇인지 탐구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았다. 예컨대, 자녀양육에 친화적인 직장문화를 조성하거나 주거환경의 안정성을 뒷받침하는 것이 저출산 문제의 해법이라 여겨졌다. 그러나 최근에는 무자녀 혼인가구의 비율이 점증하고 있고,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의향 자체가 낮아지는 추세가 뚜렷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럼에도 우해봉, 장인수(2019)를 비롯한 일부 연구를 제외하면, 출산의향의 영향요인을 탐구한 기존 연구사례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지역 수준에서의 영향요인을 탐구한 실증문헌들은 통계청에서 고시하는 행정구역 단위의 출산이력 변수를 활용하는 경우가 다수였고, 지역별 출산의향의 차이나 출산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환경의 영향을 실증한 사례는 전무했다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한계를 고려해 본 장에서는 출산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 수준 고용·주거 안정성의 역할을 논의하고, 이어지는 연구의 4장에서 개인·지역 수준 자료를 교차하는 다층모형을 통해 지역별 출산의향의 변량을 설명하는 실증분석을 시도한다.

## 2. 저출생 영향요인에 대한 이론적 고찰

### 1) 출산과 고용안정

#### (1) 고용안정의 개념과 측정지표

고용안정에 대한 기존 문헌의 논의는 **안정성(stability)과 안전성(security)의 차원을 구분**하는 경우가 많다(Erlinghagen 2006). 전자인 안정성이 고용상태의 장기적인 지속성과 관련된 개념이라면, 안전성은 계약상태 및 법·제도적 요건에 의해 근로자의 고용신분이 얼마나 보호될 수 있는지를 의미하는 개념이다. 안정성과 안전성의 상태는 함께 가는 경우가 많을 수 있겠으나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예를 들어, 장기근속 등의 측면에서 안정적인 고용이 유지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적절한 안전장치가 없어 한 순간에 고용상실 위험에 처할 수 있다면 고용안정의 상태라 할 수 없을 것이다.

고용안정과 관련한 기존 실증문헌들은 개별 근로자 수준에서의 접근을 취하는 경우가 많았다. 근로자 수준의 고용안정지표는 전술한 안정성과 안전성의 기준에서 정의될 수 있다. 근속연수 등으로 측정되는 고용유지 기간이나 고용유지율이 안정성 측면의 지표를 대표한다면, 정규직 여부나 사회보험(4대 보험) 가입 여부 등은 안전성 측면에서의 지표다. 한편, 기존 연구 중에는 근로자의 임금 수준 혹은 소득 수준 역시 고용의 안정성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의 하나로 포함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이승윤(2019)은 노동의 불안정성에 대해 논의함에 있어 비정규직 여부, 4대보험 가입 여부와 함께 중위임금 3분의 2 이상의 소득을 확보하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요소로 활용하였다. 이승윤(2019)은 세 가지 요소가 모두 만족된 경우만 안정된 노동자로 분류했으며 한 가지 지표라도 만족되지 못하면 불안정 노동으로 분류하고 있다.

고용안정의 문제는 지역노동시장과 같은 거시적인 차원에서도 평가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Dasgupta(2001)는 고용의 안전성(employment security)이 미시적(micro), 중간(meso), 거시적(macro) 차원에서 각각 정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거시적 수준의 지표에는 고용지속 기간의 평균값이나 이직률이 제안된 바 있다. 그러나 지역 단위에서의 고용안정은 단순히 미시적인 가구 수준의 지표를 집계한 것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는 관점 역시 필요하다. 특히 지역경제의 특징은 거기 소속된 근로자들이 향후 자신의 고용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낙관할 것인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어, **지역경제의 성장 추세나 단기적 전망 혹은 구조적인 취약성과 같은 특징들은 고용에 대한 근로자의 주관적인 안정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을 충분히 검토 가능하다. 거시적인 불안정성의 영향력은 모든 근로자에게 동질적으로 미치기보다는 현재 불안정한 고용상태를 갖고 있는 근로자에게 더 직접적으로 작용하리라는 가설 역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개별 근로자 수준에서의 연구사례와 비교할 때, 지역경제 혹은 지역노동시장 단위에서 고용안정의 문제를 실증한 사례는 상대적으로 희소한 상태다.

### (2) 고용안정과 출산의 관계

출산의향이나 이력을 설명하는 노동경제학·가족사회학 문헌의 분석모형에는 비정규직 여부 같은 고용안정지표가 반영된 사례가 많다. 예를 들어, 청년패널조사를 활용해 청년의 출산의향 영향요인을 탐구한 김영아, 곽은혜, 김근태(2022)의 분석에서는 비정규직 여부나 근로시간 형태 같은 고용안정 관련 지표의 효과가 검증된 바 있다. 그러나 두 변수 모두 출산의향에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효과를 기록하지 못했으며, 주관적인 고용안정성을 대변한다고 할 수 있는 '현 직장의 고용안정에 대한 만족도 수준' 역시 출산의향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갖지 않았다.

이 밖의 연구에서도 고용의 불안정성은 출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관찰되고 있으나 일관성 있는 실증적 합의가 이뤄져 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특히 고용안정지표를 남편과 아내 중 누구의 일자리에 기준해 측정할 것인지에 따라 출산에 대한 영향이 상이한 경우가 많았다. 또한 첫째 자녀에 대한 설명모델과 둘째 이후 자녀에 대한 설명모델에서 효과가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일관되지 못한 결과는 고용형태와 가용시간의 대체관계에서 비롯되었을 수 있다. 즉, 프리랜서 같은 불안정한 고용형태가 자녀출산·양육을 위해 유연한 고용상태를 취하려는 가구행태에 관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된 연구로서, 조성호, 문승현, 김종훈(2020)은 종합적인 고용안전성 지표를 추정해 출산의향 및 출산이행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자녀 출산의향에 대한 분석에서는 남편과 아내의 비정규직 여부와 같은 고용불안정 요소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다만, 둘째 자녀 출산의향에 대해서는 오히려 여성의 비정규직 여부가 긍정적인 효과를 기록하였는데, 연구진은 이를 비정규직 고용에 따른 시간적 여유가 출산의향에 기여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어서 출산이행에 대한 분석에서는 남편 직장의 소득 수준과 4대보험 가입 여부가 긍정적으로 기여했다. 또한 아내 직장이 시간제 임시·일용직이거나 5인 미만 소기업에 근무할 경우 출산이행 확률이 감소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지역 수준에서 고용안정과 출산의 관계를 본격적으로 탐구한 연구사례는 가구 수준 연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드물다. 또한 지역경제 혹은 노동시장 차원에서의 일자리 안정의 문제를 개념화한 연구보다는 단순히 개인 수준의 고용안정지표를 총량화한 값을 대입한 사례가 지배적이다. 그럼에도 일부 연구에서는 고용안정성의 효과를 간접적으로나마 추정할 수 있는 실증결과가 제시된 바 있다. 대표적으로 원숙연, 최윤희(2018)는 2010년부터 2017년까지의 광역시·도 단위 패널자료 분석을 통해 지역별 합계출산율의 영향요인을 분석했다. 이들의 분석에서는 해당 지역의 실업률과 비정규직 비율이 높을수록 합계출산율이 감소한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다만, 분석 단위가 광역시·도이기 때문에 하위 지역의 다양성이 모형에 반영되지 못했고 적극적인 인과적 추론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또 다른 사례로서 박관태, 전희정(2020)의 분석에서는 직접적인 고용안정의 지표라 여기기는 어렵지만 시군구 단위의 취업률이 합계출산율을 높이는 데 통계적으로 의미 있게 기여함을 관찰하였다. 특히 취업률의 효과는 기초자치단체의 유형을 대도시·중소도시·농촌으로 각각 구분해 검정했을 때에도 일관되게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정(+)의 효과를 기록했다.

반면, **지역 수준의 일자리 안정성과 장래전망이 출산에 미치는 효과에 이론적·실증적 관심을 조명한 연구사례는 부족**하다. 직접적으로 해당하는 연구사례는 아니지만, 강동우, 고영우, 김현지, 남수연 외(2018)는 시군구 단위 공간자기회귀모형(SAR)을 통해 합계출산율과 지방소멸위험지수 간의 통계적 상관성을 탐구했는데 합계출산율이 낮은 지역일수록 소멸위험 가능성도 높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 2) 출산과 주거안정

### (1) 주거안정의 측정지표

주거안정성은 다면적인 속성을 갖는 개념이기 때문에 하나의 기준으로 측정하거나 정의되기 어렵다. 예를 들어, 주거비용이 저렴하다고 하더라도 주거시설의 질과 규모가 최저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면 주거안정상태라 인정하기 어려울 것이다. 혹은 비용

과 수준이 모두 합리적이라 하더라도, 주변 정주환경이 열악하거나 직장 등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외진 입지를 갖고 있다면 안정된 주거환경이라 평가될 수 없다. 따라서 주거안정의 상태는 주거비용부터 시설과 환경의 적절성 등 복합적인 지표가 종합된 결과로서 평가되어야 한다.

이용만, 김현영, 이현진(2015)은 국가별 주거복지 평가체계에 반영되었던 주거안정성의 평가요소를 **부담가능성(affordability), 시설적절성(adequacy), 환경적절성(amenity), 거주·이동의 자유(stability), 규모적정성(suitability), 차별로부터의 자유, 가용성(accessibiltiy)** 등의 7개 항목으로 비교한 바 있다. 이 중에서 우리나라 「주택법」에 반영된 주거안정성의 평가요소는 네 가지 항목이다(이용만, 김현영, 이현진 2015, 11). 먼저 부담가능성은 경제적 측면에서 주거비용이 가구의 총소득과 비교해 얼마나 부담할 만한 수준인지를 측정하는 개념이다. 이어서 시설적절성과 규모적정성은 물리적인 주택환경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에 무리가 없는 질과 규모를 갖고 있는지 평가한다. 세 번째로 환경적절성 혹은 어메니티(amenity)는 주거의 지리적 반경을 물리적 건축물에서 생활권 단위까지 확장해 종합적인 정주 여건의 질을 평가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이용만, 김현영, 이현진 2015).

이 밖에도 주거 정착·이동의 안정성 개념은 많은 국가에서 채택되고 있는 평가항목은 아니지만, 가구의 주거안정을 정의함에 있어 비중 있게 고려되어야 할 항목이다. 이는 가구의 의지대로 주거 기간을 정하거나 주거의 위치를 옮길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정의된다. 뉴질랜드 정부의 경우 가구가 원하는 만큼 주택에 거주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측정하는 '거주안정성(tenure security)'을 뉴질랜드 통계청의 '주거적절성(housing adequacy)' 평가요소로 반영하고 있다.

**표 2-1 | 주거안정성의 국가별 평가요소**

| 평가요소 | 뉴질랜드 | 캐나다 | 미국·영국 | UN 해비타트 | 한국 | |
|---|---|---|---|---|---|---|
| | | | | | 주택법 | 최저주거 기준 |
| 부담가능성 (affordability) | ○ | ○ | ○ | △ | △ | |
| 시설적절성 (adequacy, habitability) | ○ | ○ | ○ | | ○ | ○ |
| 규모적정성 (suitability, crowding) | ○ | ○ | ○ | ○ | ○ | ○ |
| 환경적절성 (amenity) | ○ | | | | ○ | |
| 안정성·안전성 (stabiltiy, security) | ○ | | | ○ | | |
| 차별로부터의 자유 (non-discrimination) | ○ | | | | | |
| 가용성 (accessibility) | | | | ○ | | |

자료: 이용만, 김현영, 이현진(2015, 11)의 〈표 2〉를 일부 수정하여 인용.

가구 수준에서 주거안정성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지표는 **부담가능성**이라 할 수 있는데, 이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에는 **전체 소득에서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활용**되어 왔다. 널리 쓰이는 지표로써 소득 대비 주택임대료 비율(Rent to Income Ratio: RIR, 이하 RIR)은 임차가구 입장에서의 주거비 부담가능성을 측정하는 지표이고,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Price to Income Ratio: PIR, 이하 PIR)은 자가소유자의 주거비 부담가능성을 측정하는 지표로써 사용된다. 거주·이동의 안정성 역시 다수 문헌에서 주거안정성의 측정 기준으로 포함되고 있는데, 이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의 '주거실태조사' 등에서 조사하고 있는 자가소유 여부나 평균 거주 기간을 지표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지역 단위에서의 주거안정성 평가는 개별가구 단위의 지표를 단순히 총량화하는 접근을 취할 수도 있지만, 개별 주거시설의 범위를 넘어서는 지역사회의 환경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확장하는 접근 역시 가능하다. 예를 들어, 지역 단위에서 PIR·RIR 등의 부담가능성 지표를 측정하거나 노후주택 비율 등의 시설적정성 지표를 산정하는 경우가 전자에 해당하는 접근이라 할 수 있다. 반면, <표 2-1>에 비교된 지표 중 **환경적절성(amenity)은 가구 단위보다는 지역 단위에서 측정**되어야 한다. 가구가 원하는 시점과 입지에 적절한 주거 서비스를 확보할 수 있는지를 의미하는 주택시장의 가용성(accessibility) 지표 역시 가구 단위보다는 지역 단위에서 측정됨이 적절하다.

### (2) 주거안정과 출산의 관계

주거안정과 출산의향 혹은 출산이력과의 관계는 다양한 문헌을 통해 탐구된 바 있다(천현숙, 이길제, 김준형, 윤창원 2016). 설문조사를 통해 주거행태와 출산의향의 관계를 탐구했던 이삼식, 최효진(2012)의 분석에서는 주택마련 비용에 대한 고려가 최종적인 자녀 수 결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고 조사되었다. 또한 이삼식, 최효진(2012)의 다중회귀 분석결과는 주택에 장기 거주할수록, 전세임차보다는 자가를 소유할수록, 넓은 면적에 거주할수록, 아파트보다는 단독주택에 거주할수록 최종적인 자녀수 결정에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했다. 최근 연구인 임병인, 서혜림(2021)의 분석에서도 자가를 소유한 가구는 그렇지 않은 가구에 비해 출산의향이 통계적으로 의미 있게 높았다. 배호중, 한창근(2016)은 한국노동패널조사를 통해 신혼부부 가구를 추출해 출산이력에 대한 사회경제적 조건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신혼 초기 자가를 소유한 가구일수록 자녀출산이 빨랐으며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가치 역시 출산이행에 긍정적으로 기여함이 관찰되었다.

주거안정과 관련된 정책효과를 탐구한 연구의 사례도 있다. 최근 사례 중 이훈, 성진욱(2022)은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실태조사'를 활용해서 공공임대주택 거주 여부가 신혼부부의 출산간격(birth interval)에 미치는 효과를 탐구했다. 분석결과, 공공임대주택 입주는 첫째 이후 추가적인 출산이행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쳤으며 공공임대주택 입주가 지연될수록 첫째·둘째 자녀 모두의 출산이행 역시 지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첫째 자녀 출산은 오히려 공공임대주택 미입주 상태에서 이행이 빨라지는 혼합적인 결과가 관찰되었는데, 연구진은 이를 자녀출산 여부가 임대주택 자격요건에서 중요한 가점으로 작용하는 제도적 맥락이 반영된 결과라 해석하고 있다. 반면, 국토교통부의 전국 주거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한 한지혜, 남진(2023)의 연구에서는 상이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들의 분석에서는 공공임대주택 거주 여부가 출산 결정확률을 1.919배 증가시킨다는 결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도출되었다. 반면, 주거환경에 대한 가구의 만족도 수준이나 자가소유 여부는 출산확률에 의미있는 효과를 기록하지 못하였다.

지역 단위의 출산지표를 설명한 연구 중에도 주거안정의 영향에 주목한 사례가 존재한다. 먼저 박진백, 권건우(2023)는 광역시·도 단위의 패널자료분석을 통해 주택가격과 사교육비가 지역별 합계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했다. 분석결과, 주택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의 상승 폭이 큰 지역일수록 합계출산율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쳤다. 다만, 부동산가격 변화의 영향은 둘째·셋째 자녀보다는 첫째 자녀의 출산에 더 강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방보다는 수도권에서 영향력이 컸다.

이어서 박관태, 전희정(2020)은 시군구 단위의 회귀분석을 통해 지역별 합계출산율과 조출생률의 영향요인을 탐구했다. 분석결과, 주택매매가격은 합계출산율을 낮추는 요소로 작용했지만 조출생률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를 미치지 않았다. 또한 합계출산율에 대한 주택매매가격의 효과는 대도시보다 중소도시에서 크게 나타났고, 농촌지역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들의 분석모형에는 지역별 공공임대주택 비중의 효과도 포함되었는데, 이는 대도시 합계출산율에만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부(−)의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김동현, 전희정(2021)은 공간패널분석을 통해 지역별 출산율의 영향요인을 탐구했다. 분석결과, 인접한 기초자치단체의 합계출산율 간에는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공간적 상호의존성이 존재했다. 이 같은 구조를 고려한 공간패널 분석모형 결과에서는 아파트의 평균전세가격이 높을수록 출산율이 낮아지는 추세가 관찰되었다. 다만, 아파트

평균매매가격의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는데, 연구진은 이를 소득 수준이 낮은 신혼부부가 자가소유보다는 전세계약을 통해 주거를 확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가구 단위에서의 조절요인을 모형에 반영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 같은 해석을 실증적으로 확인하기는 어려웠다. 예를 들어, 이 같은 가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소득 수준이 낮거나 자가를 보유하지 못한 가구일수록 지역 수준 전세가격 상승에 따라 출산을 미루게 될 확률이 높아진다는 다층적 가설을 검정해야 할 것이다. 이 같은 문제는 다층모형을 통해 출산의향의 가구·지역 수준 영향요인을 탐구하는 본 연구 4장의 논의로 연결된다.

## 3. 국토 불균형과 저출생의 관계

### 1) 수도권 과밀화와 저출산의 관계

국토의 균형(均衡)발전은 균등(均等)발전과는 상이한 개념으로서, 모든 지역이 동질화되는 것을 의미함이 아니라 특정 부문으로의 과도한 쏠림을 지양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국토공간의 균형은 도시와 농촌, 경부축과 비경부축, 광역시와 광역도의 격차 같은 부문 간의 쏠림 문제를 다루게 된다. 우리나라에서 인구와 자원의 쏠림을 가장 극명하게 관찰할 수 있는 공간 단위는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이기 때문에, 국내적 맥락에서의 국토 불균형은 기본적으로 수도권과 지방의 문제를 전제하고 있다. 2020년 수도권의 인구가 역대 최초로 과반을 넘어가면서 다시 점화된 균형발전 담론 역시 사회경제적으로 고착된 수도권 일극체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의 자립기반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에 논의를 집중하고 있다.

**최근 균형발전 담론의 차별성이 있다면 수도권 쏠림의 사회적 비용을 저출산의 문제와 연결**짓고 있다는 점이다. 2012년 이후 급격한 속도로 심화되고 있는 국가적 저출산의 추세는 확연하게 서울과 수도권이 주도하고 있다. 2023년 2분기 기준 국가 전체의

합계출산율은 0.70명이었으나, 서울특별시의 합계출산율은 0.53명으로 국가 평균에 한참 미치지 못했다. 조영태(2021)를 위시한 최근의 인구학 문헌들은 수도권의 지나치게 높은 인구밀도가 합계출산율 하락을 가속화하는 결정적인 요인이라 주장한다. 조영태(2021)에 따르면 서울 청년들의 낮은 출산의향은 주택가격 같은 경제적 요인으로만 설명될 수 없다. 초저출산을 야기한 근본적 원인은 지나치게 과밀한 경쟁환경 속에서 청년들이 체감하고 있는 스트레스와 생존본능이라는 주장이다. 이들의 주장은 사실 지나친 인구팽창이 출산율·혼인율의 감소와 사망률의 증가를 야기하리라는 맬서스(2011)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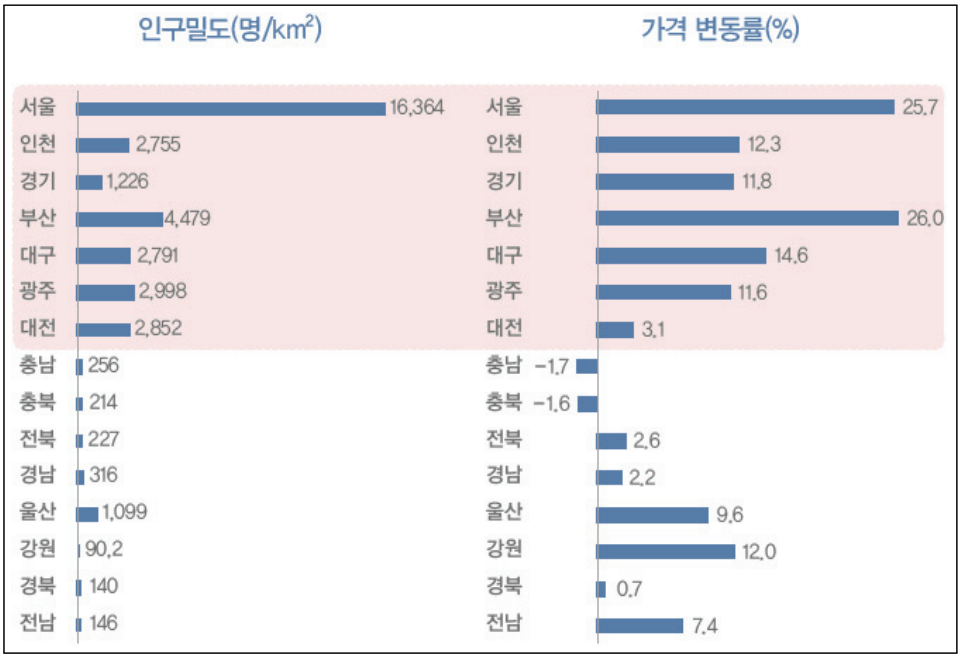
합계출산율의 결정요인으로 지역별 인구밀도를 강조하는 인구학자들의 주장은 실제 인구통계의 추세와도 잘 맞아떨어진다. 특히 고우림(2021)은 인구밀도와 출산율의 관계를 국가 간 통계분석과 국내 지역 간 통계분석을 통해 실증한 최근의 연구다. 먼저 2018년 기준 합계출산율이 2.0 미만인 55개 국가를 대상으로 한 패널자료 회귀분석에서는 국가 수준의 인구밀도가 합계출산율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의 효과를 기록했다. 특기할 만한 점은 국가별 인구밀도 외에도 수위도시에 대한 인구편중의 효과를 추가적으로 통제했을 때에도 양자 변수 모두가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부정적 효과를 기록했다는 점이다. 이어서 우리나라 지역별 합계출산율을 설명함에 있어서도 인구밀도를 대변하는 1인당 주거·상업·공업 면적 변수는 각각 해당 지역의 합계출산율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정적 효과를 기록했다. 고우림(2021)의 연구에서 인구밀도와 합계출산율의 관계는 광역시·도 단위와 시군구 단위 모두에서 유의했다. 다만, 광역시·도 단위에서는 패널자료분석이 수행된 것과 달리 시군구 단위에서는 횡단자료를 활용한 회귀분석만이 수행되었기 때문에 적극적인 인과적 추론에는 한계가 있었다.

## 2) 수도권의 인구과밀과 주거·고용 불안정

고우림(2021)의 연구는 분명 실증적 의의를 갖고 있으나, 인구밀도와 합계출산율의 인과관계를 규명함에 있어서는 여전히 많은 과제를 남긴다. 실증분석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인구밀도는 청년들의 출산의향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일 수 있다. 그러나 고우림(2021)의 분석결과는 인구밀도가 청년들의 생존본능을 위협하는 심리적·환경적 메커니즘을 통해 출산율을 하락시킨다는 조영태(2021) 등의 가설을 직접적으로 검증하지는 않는다. 인구밀도는 경쟁환경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현상의 기저를 이루는 변수이기 때문에 합계출산율과의 상관관계만으로는 인구밀도의 효과가 구현되는 원리를 특정한 방향으로 해석하기 어렵다.

인구밀도는 앞 소절에서 논의했던 주거안정성과 고용안정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변수다. 그리고 이 같은 경로를 통해서 출산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먼저 수도권의 높은 인구밀도는 부동산 전세·매매 가격의 증가를 부추김으로써 주거 안정성을 저해한다. <그림 2-1>에 표현된 조영광(2018)을 비롯해, 다수의 문헌은 **지역별 인구밀도가 부동산가격의 변화율을 설명하는 가장 강력한 요소의 하나임을 보고**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전국 시군구 주택시장의 매매·전세 가격 변동률을 분석했던 이진성, 이창현(2014)의 분석에서 인구밀도 변수는 토지거래면적 등과 함께 지역별 부동산가격에 주요한 영향을 미쳤다. 인구밀도와 부동산가격의 상관관계는 해외 문헌에서도 일관되게 드러난다. Florida(2017)는 미국에서 급격한 지가 상승을 경험했던 도시들의 대다수가 샌프란시스코, 뉴욕처럼 자연지형적인 조건 탓에 외부로의 주거지 확장이 어려워 도심 내 인구밀도가 급증했던 도시들이었다고 설명한다. 반면, 인구가 크게 증가했더라도 외곽으로의 주거지역 확장이 용이했던 까닭에 인구밀도의 증가를 최소화할 수 있었던 오스틴, 라스베이거스, 애틀랜타 등의 도시는 상대적으로 주택가격의 변화가 미미할 수 있었다.

**그림 2-1 | 광역시·도별 인구밀도와 부동산가격 변동률의 비교**




주: 인구밀도는 2015년 기준 통계이며, 부동산가격 변동률은 2015년에서 2017년도 사이의 변화율 적용.
자료: 조영광(2018, 71)의 〈그림 2〉.

인구과밀이 주거불안정에 미치는 효과는 단지 부동산가격의 상승만으로 말미암지 않는다. 수도권의 높은 인구밀도는 직장과 주거지의 거리를 연장시켜 근로자들에게 높은 통근비용을 부담하게 한다. 통계청(2021)의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표본 집계 결과(인구 특성항목)'에 따르면, 서울특별시의 평균적인 통근·통학 소요시간은 37.2분으로 전국 광역시·도 중에서 가장 높았다. 국토교통부(2023)의 '2022년 대도시권 광역교통조사' 결과에서는 광역 간 통근시간 역시 수도권에서만 유일하게 2시간을 넘는 평균값을 기록해 여타 지역보다 높은 값을 기록한 바 있다. 직장과 가까운 곳에서 지불가능한 주택을 확보하기 어려운 여건은 가구의 주거불안정을 가중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긴 통근시간은 근로자가 자녀보육 및 가사활동에 투입할 수 있는 가용시간을 줄임으로써 출산의향과 추가적인 자녀계획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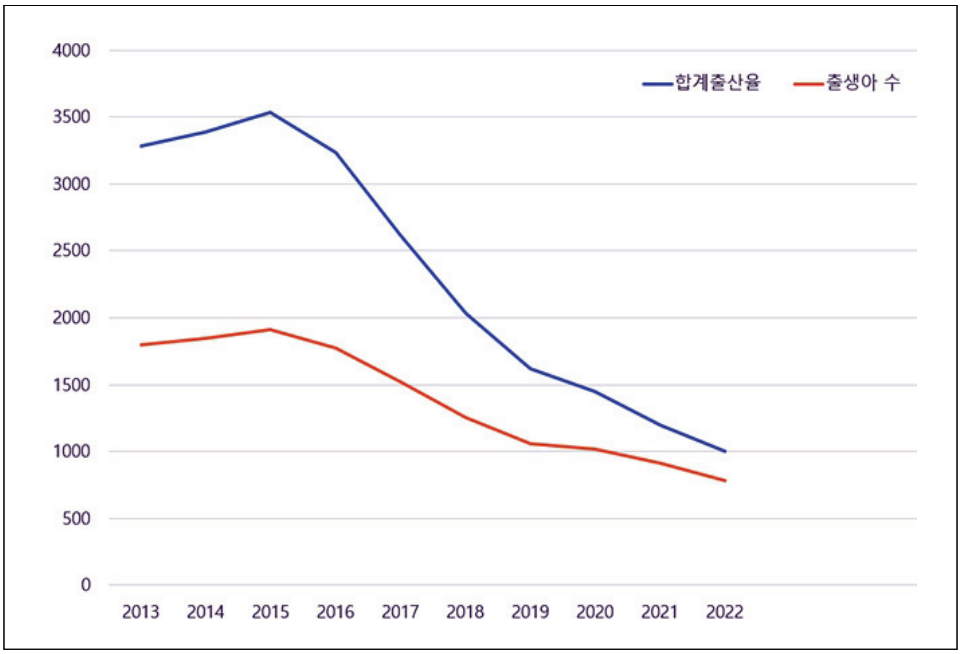
수도권의 높은 통근시간은 근로자가 체감하는 심리적 고용안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대졸 신규 입직자 8,46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한 배호중, 양은모(2023)에 따르면, 높은 통근시간은 근로자의 이직률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주된 요인의 하나다. 특히 90분 이상 통근에 시간을 할애하는 근로자들은 20분 미만으로 통근하는 근로자보다 평균적으로 2배 이상 이직 의사가 높았다. 이 밖에도 수도권의 높은 인구밀도는 고용불안정에 간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겠으나, 주거안정과의 관계만큼 명확한 인과관계를 짚기는 어렵다. 2020년 기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실업률은 각각 4.5%와 3.3%로서 수도권에서 높은 값이 오랜 기간 유지되고 있다. 반면, 비정규직 비율은 수도권이 34.9%, 비수도권이 37.9%로서 2009년 이래 비수도권에서 소폭 높은 값이 관찰되는 추세다.

### 3) 비수도권의 인구유출과 주거·고용 불안정

인구가 점진적으로 유출되고 있는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수도권과 다른 양상으로 주거·고용의 안정성이 흔들릴 수 있다. 비수도권의 주거환경은 적어도 지불 가능성 측면에서는 수도권에 비해 양호하다. 그러나 **수도권의 높은 인구밀도가 지가 상승을 부추겨 가구가 체감하는 주거안정을 위협한다면, 비수도권의 인구유출은 지역 수준의 정주기반을 침식시키는 형태로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협**할 수 있다. 인구감소는 지자체가 확보하는 세원을 감소시킨다. 따라서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에서는 상하수도 같은 기반시설을 포함해 문화·체육·교육 시설 등 다양한 공공 서비스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 도시적 역량도 축소될 수밖에 없다. 구형수(2018)에 따르면, 지방의 인구감소도시들은 그렇지 않은 도시들에 비해 필수적인 생활SOC에 대한 접근성이 불량한 상태다. 이들 축소도시에는 대규모 생활SOC 시설을 유지할 재정 여건이 부족해 적자를 감수하고 있는 지자체가 대거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인구감소가 지속될 경우 추가적인 정주환경의 악화가 예상되고 있다(구형수 2018).

인구감소 상황에서 비수도권의 지역들이 더 직접적으로 맞이하고 있는 위협은 사실 주거안정보다는 고용안정이라 할 수 있다. **인구유출은 지역산업의 장기적인 경쟁력을 침식하는 요소**다. 특히 수도권에 비해 비수도권의 인구전출은 청년·고학력 인구에 편중된 형태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정민수, 김의정, 이현서, 홍성주 2023) 지역산업 경쟁력에 더욱 큰 부담을 안길 수 있다. 시군구 단위에서 고용지표를 설명하는 동태적 패널회귀분석을 수행한 정민수 외(2023)에 따르면 **청년인구의 순유출은 해당 지역의 실업률을 상승시키고 고용률을 하락시키는 등 전반적인 노동시장의 고용불안정을 초래**한다. 또한 순유출은 지역경제의 성장률을 대변하는 1인당 소득증가율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는데, 고학력 집단의 청년인구 유출일수록 통계적으로 유의도가 높은 부(−)의 효과를 야기한다고 관찰되었다.

**그림 2-2 | 거제시의 연도별 합계출산율 및 출생아 수 변화 추이**




자료: 거제저널(2023.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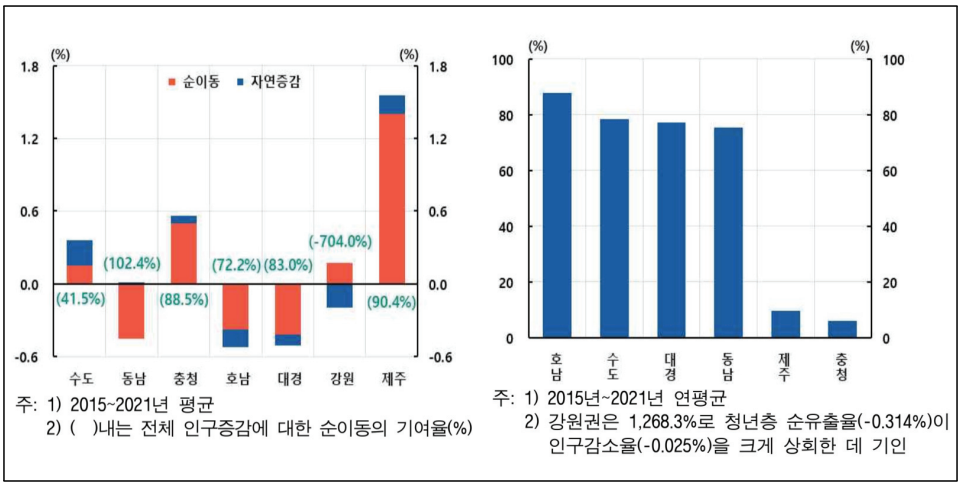
청년들의 출산의향과 관련해 지역노동시장의 단기적인 고용지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장기적인 고용전망이다. 즉, **자신이 종사하고 있는 지역산업의 생태계가 앞으로 10년 뒤에도 건재한 위상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인식**은 근로자 가구가 체감하는 삶의 안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지역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국면에서는 자신의 소득과 경력도 장기적으로 지역과 함께 발전해나갈 수 있다는 긍정적인 전망을 가질 수 있고, 이로부터 말미암는 안정감과 예측 가능성이 결혼이나 출산의향을 비롯한 가족계획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나 지방 산업도시 다수가 경험하고 있는 인구유출과 기업 이탈의 상황은 장기적인 고용안정을 꿈꾸기 어렵게 만들 뿐만 아니라 당장의 생계와 고용유지를 불안하게 함으로써 출산의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예를 들어, 경상남도의 거제시의 경우 조선업이 호황이었던 2014년까지는 합계출산율이 가장 높은 지역 중 하나였으나, 지역 내 앵커기업이 이탈하고 고용기반의 안정성이 급격히 흔들리면서 2023년 현재는 경남권 지자체 중 합계출산율이 가장 낮은 지역으로 변모했다.

### 4) 비수도권의 인구유출과 저출생의 문제

전술한 바와 같이, 비수도권의 인구감소는 정주환경 악화로 인한 주거불안정과 산업경쟁력 저하를 통한 고용불안정을 심화하며 청년가구의 출산의향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정을 수립할 수 있다. 그러나 비수도권의 맥락에서 더욱 중요한 것은 출산율의 문제라기보다는 **청년 혹은 가임기 여성인구의 절대적인 감소로 인한 저출생의 문제**라 할 수 있다. 수도권에 비해 지방의 합계출산율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다. 그러나 청년인구의 절대적인 규모와 비중이 작고 지속적인 청년인구 중심의 순유출이 이어지고 있는 사정 탓에 인구 대비 출생률은 수도권보다 크게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장인수, 우해봉, 박종서, 정진우(2021)는 지역별 합계출산율과 실제 출생아 수의 상관관계가 높지 않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에 따르면 출생아의 숫자는 15세에서 49세까지 여성인구의 순이동 추세에 더 강하게 상관되어 있다.

기존 연구들은 **지방 중소도시의 인구감소는 자연적 인구감소보다 사회적 인구이동에서 기인**한다고 보고한다. 다음의 <그림 2-3>에 묘사된 정민수, 김의정, 이현서, 홍성주 외(2023)의 분석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인구가 감소한 호남권(72.2%), 동남권(102.4%), 대경권(83.0%) 인구감소의 절대적 비중은 자연증감이 아니라 인구 순유출 탓에 발생했다. 문제는 지역을 떠나는 인구의 높은 비중이 출산에 잠재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청년·여성 집단에 쏠려 있다는 점이다. 홍석철(2023)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전라남도의 인구 순유출 중 78%는 10세에서 39세까지의 젊은 인구집단에서 발생했는데, 이들 유출인구의 56.2%는 수도권으로 이동했음이 관찰되었다. 특히 젊은 여성인구의 지방이탈이 두드러졌는데, 2020년 기준 전남을 떠난 10~39세 인구집단 중에서 여성의 비율은 절반을 넘는 57%였으며 여성 이탈자의 80%는 20대로 구성되었다(홍석철 2023). 다시 정민수 외(2023)의 분석에서는 최근 호남권 인구감소(2015~2023)의 약 87.8%가 청년인구의 순유출로부터 기인한다는 결과가 도출된 바 있다(<그림 2-3> 우측 참조).

**그림 2-3 | 광역권별 인구증감률 요인분해 결과(좌측) 및 전체 인구변동 중 청년이동의 기여도(우측)**




자료: 정민수, 김의정, 이현서, 홍성주, 이동렬(2023, 6-7)

## 4. 수도권과 지방의 상호관계를 고려한 인과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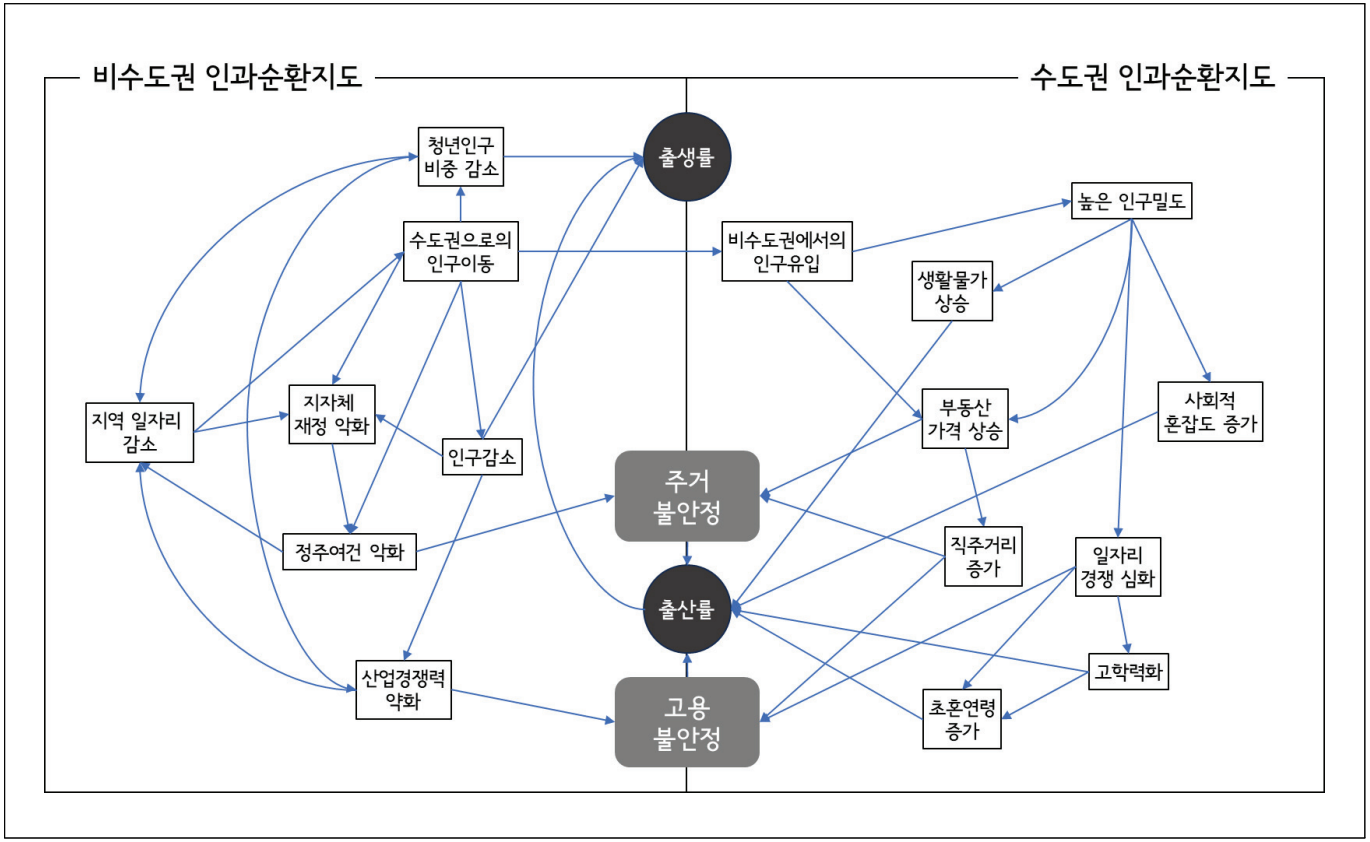
본 장에서 설명한 균형발전과 저출생의 인과관계를 순환지도 형태로 표현하면 <그림 2-4>와 같다. 좌측에 표현된 비수도권의 순환지도와 우측에 표현된 수도권의 순환지도는 상호 연관된 시스템적 구조를 이루고 있다. 본 연구의 이론적 관점에 따라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주된 요인은 주거불안정과 고용불안정의 두 가지 요소로 단순화했다. 그러나 앞서 설명되었듯, 수도권과 비수도권에서 고용과 주거의 불안정이 의미하는 바는 상이할 수 있다.

전체 시스템의 인과관계 루프를 가속화하는 기본적인 동인은 수도권으로의 지방인구 유출이다. 지방을 떠나 몰려드는 인구 탓에 악화되는 수도권의 과밀환경은 부동산가격과 생활물가 상승으로 연쇄되고 직주거리와 사회적 혼잡도를 악화시켜 결과적으로 수도권 인구의 주거불안정을 야기한다. 또한 과밀환경 속에서의 지나친 경쟁은 청년들이 체감하는 고용 안정성을 해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고, 취업과 학업에 대한 준비기간을 연장해 만혼·비혼 현상이 확대되는 데 기여하기도 한다.

한편, 비수도권에서 청년인구의 유출은 지역인구의 감소를 직접적으로 야기할 뿐만 아니라, 출생률 하락에 기여함으로써 자연적인 인구감소 추세를 가속화하는 이중적인 효과를 갖고 있다. 동시에, 앞 소절에서 설명한 바 같이 인구유출은 산업경쟁력이나 정주 여건의 약화를 부추기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고용이나 주거불안정에 기여함으로써 지역의 출산율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처럼 청년인구의 유출은 지역의 장기적인 성장동력을 갉아먹는 악순환의 고리를 연쇄한다. 한편으로는 부족한 일자리가 청년인구의 유출을 야기함으로써 지역산업의 경쟁력과 고용전망을 더욱 악화시키는 악순환의 루프가 작동한다. 산업 부문의 경쟁력 약화는 지자체의 재정기반을 축소시켜 교육·문화 시설 같은 정주기반 서비스의 질을 유지하기 어렵게 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인재들을 지역으로 유치하거나 붙잡아 둘 수 있는 도시적인 역량을 약화시키는 효과를 빚는다.

이처럼 저출생과 균형발전의 관계는 단선적인 인과관계로 압축되기 어려운 순환적인 구조를 갖고 있다. 따라서 양자의 관계를 실증하기 위해서는 <그림 2-4>에서 묘사된 다양한 차원의 인과관계를 단계적으로 검증하는 접근이 구사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다음의 3장에서는 전국 시군구 단위에서 출산율, 출생률, 청년인구 유출 같은 인구학적 현상의 지역 간 격차와 영향요인을 탐색하는 단계적인 실증분석을 시도한다. 이어지는 4장에서는 개인의 출산의향에 대한 개인 수준과 지역 수준의 영향요인을 규명하는 통계분석을 추정한다. 특히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이주했거나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주한 그룹 등의 유형을 구분해 출산의향에 설명요인에 대한 분석결과를 비교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5장에서는 양적인 방법론을 통해 충분히 설명되기 어려운 사회심리적 메커니즘을 규명하기 위해 청년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초점집단인터뷰를 시도하기로 한다.

그림 2-4 | 수도권과 지방의 상호관계를 고려한 균형발전과 저출생의 인과지도




자료: 연구진 작성.

CHAPTER 3

# 저출생 현상의 지역별 격차와 영향요인

1. 저출생 현상의 지역별·시점별 실태 분석 ····· 39
2. 저출생의 지역별 영향요인 ····· 47
3. 분석결과의 종합 ····· 63

# 03 저출생 현상의 지역별 격차와 영향요인

본 장에서는 전국적인 저출생 현상의 지역별 격차와 시점 간 추세를 탐색하였고, 이를 설명하기 위한 시군구 수준의 고정효과모형을 추정하였다. 합계출산율은 수도권에서 전국 평균보다 낮은 값이 지속되는 추세가 뚜렷했으나, 조출생률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내부에서도 지역 간 편차가 컸다. 특히 시군구 단위에서 저출생지표의 추세를 탐색했을 때, 비수도권 지역 중에서도 가파른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는 지역을 다수 관찰할 수 있었다. 각 지역의 추세를 설명하기 위해 시군구 단위에서 구축한 패널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용안정성 관련 변수(고용증가율, 이직률, 구인율)와 주거안정성 관련 변수(아파트 매매·전세 평균가격)가 합계출산율과 조출생률, 그리고 비수도권에서는 청년인구 순유출까지 의미 있게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실증되었다.

## 1. 저출생 현상의 지역별·시점별 실태 분석

### 1) 저출생 현상의 지역별 추세 비교

#### (1) 시도별 합계출산율 및 조출생률

2022년 기준 전국의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2012년 1.30명에 비해 40.0%가량 감소한 상태이다(연평균 4.0% 감소). 시도별 합계출산율은 시기별·지역별로 다소 차이는 있으나, 최근 10년간에는 거의 유사하게 감소하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서울특별시는 2022년 합계출산율이 0.59명으로 최근 10년간 지속적으로 17개 시도 중 최하위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 세종특별자치시는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최근 10년간 합계출산율이 1명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표 3-1 | 시도별 합계출산율(2012~2022)**

(단위: 명)

| 시도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10년 평균 | 10년간 변화율 |
|---|---|---|---|---|---|---|---|---|---|---|---|---|---|
| 전국 | 1.297 | 1.187 | 1.205 | 1.239 | 1.172 | 1.052 | 0.977 | 0.918 | 0.837 | 0.808 | 0.778 | 1.017 | -40.0 |
| 서울 | 1.059 | 0.968 | 0.983 | 1.001 | 0.940 | 0.836 | 0.761 | 0.717 | 0.642 | 0.626 | 0.593 | 0.807 | -44.0 |
| 부산 | 1.135 | 1.049 | 1.090 | 1.139 | 1.095 | 0.976 | 0.899 | 0.827 | 0.747 | 0.728 | 0.723 | 0.927 | -36.3 |
| 대구 | 1.217 | 1.127 | 1.169 | 1.216 | 1.186 | 1.067 | 0.987 | 0.932 | 0.807 | 0.785 | 0.757 | 1.003 | -37.8 |
| 인천 | 1.301 | 1.195 | 1.212 | 1.216 | 1.144 | 1.007 | 1.006 | 0.940 | 0.829 | 0.778 | 0.747 | 1.007 | -42.6 |
| 광주 | 1.295 | 1.170 | 1.199 | 1.207 | 1.168 | 1.053 | 0.972 | 0.913 | 0.811 | 0.896 | 0.844 | 1.023 | -34.8 |
| 대전 | 1.315 | 1.234 | 1.250 | 1.277 | 1.192 | 1.075 | 0.952 | 0.883 | 0.805 | 0.810 | 0.842 | 1.032 | -36.0 |
| 울산 | 1.481 | 1.391 | 1.437 | 1.486 | 1.418 | 1.261 | 1.131 | 1.084 | 0.984 | 0.940 | 0.848 | 1.198 | -42.7 |
| 세종 | 1.597 | 1.435 | 1.354 | 1.893 | 1.821 | 1.668 | 1.566 | 1.472 | 1.277 | 1.277 | 1.121 | 1.488 | -29.8 |
| 경기 | 1.355 | 1.226 | 1.241 | 1.272 | 1.194 | 1.069 | 1.002 | 0.943 | 0.878 | 0.853 | 0.839 | 1.052 | -38.1 |
| 강원 | 1.374 | 1.249 | 1.248 | 1.311 | 1.237 | 1.123 | 1.067 | 1.082 | 1.036 | 0.979 | 0.968 | 1.130 | -29.5 |
| 충북 | 1.485 | 1.365 | 1.363 | 1.414 | 1.358 | 1.235 | 1.172 | 1.050 | 0.983 | 0.949 | 0.871 | 1.176 | -41.3 |
| 충남 | 1.571 | 1.442 | 1.421 | 1.480 | 1.395 | 1.276 | 1.186 | 1.112 | 1.029 | 0.963 | 0.909 | 1.221 | -42.1 |
| 전북 | 1.440 | 1.320 | 1.329 | 1.352 | 1.251 | 1.151 | 1.044 | 0.971 | 0.909 | 0.850 | 0.817 | 1.099 | -43.3 |
| 전남 | 1.642 | 1.518 | 1.497 | 1.549 | 1.466 | 1.325 | 1.240 | 1.234 | 1.145 | 1.017 | 0.969 | 1.296 | -41.0 |
| 경북 | 1.489 | 1.379 | 1.408 | 1.464 | 1.396 | 1.256 | 1.167 | 1.089 | 1.003 | 0.966 | 0.930 | 1.206 | -37.5 |
| 경남 | 1.503 | 1.367 | 1.409 | 1.437 | 1.358 | 1.227 | 1.122 | 1.046 | 0.945 | 0.903 | 0.838 | 1.165 | -44.2 |
| 제주 | 1.598 | 1.427 | 1.481 | 1.477 | 1.432 | 1.305 | 1.220 | 1.145 | 1.021 | 0.951 | 0.919 | 1.238 | -42.5 |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https://kosis.kr)의 인구동향조사 자료(2023.11.10. 조회)를 기초로 재정리.

2022년 기준으로 전국적인 조출생률은 4.86명이다. 이는 2012년 9.62명에 비교해 절반 수준인 49.5%가량 감소한 결과다(연평균 4.9% 감소). 시도별 조출생률은 합계출산율과 거의 유사한 패턴으로 최근 10년간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젊은 인구의 유입이 많았던 세종특별자치시는 2014년 이후 17개 시도 중 최상위 수준의 조출생률을 유지하고 있으나, 감소 추세는 타 시도와 거의 유사하다.

**표 3-2 | 시도별 조출생률(2012~2022)**

(단위: 명)

| 시도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10년 평균 | 10년간 변화율 |
|---|---|---|---|---|---|---|---|---|---|---|---|---|---|
| 전국 | 9.625 | 8.633 | 8.578 | 8.605 | 7.948 | 6.984 | 6.371 | 5.896 | 5.304 | 5.076 | 4.861 | 6.825 | -49.5 |
| 서울 | 9.333 | 8.396 | 8.395 | 8.378 | 7.699 | 6.724 | 6.022 | 5.603 | 4.977 | 4.816 | 4.542 | 6.555 | -51.3 |
| 부산 | 8.184 | 7.395 | 7.514 | 7.659 | 7.183 | 6.234 | 5.603 | 5.029 | 4.473 | 4.321 | 4.261 | 5.967 | -47.9 |
| 대구 | 8.641 | 7.789 | 7.814 | 7.866 | 7.419 | 6.481 | 5.879 | 5.443 | 4.644 | 4.465 | 4.286 | 6.209 | -50.4 |
| 인천 | 9.945 | 9.022 | 9.005 | 8.831 | 8.125 | 7.010 | 6.872 | 6.327 | 5.489 | 5.116 | 4.920 | 7.072 | -50.5 |
| 광주 | 9.878 | 8.708 | 8.686 | 8.492 | 7.923 | 6.944 | 6.269 | 5.773 | 5.066 | 5.529 | 5.202 | 6.859 | -47.3 |
| 대전 | 10.129 | 9.292 | 9.177 | 9.095 | 8.261 | 7.247 | 6.286 | 5.714 | 5.127 | 5.114 | 5.320 | 7.063 | -47.5 |
| 울산 | 10.722 | 9.896 | 10.007 | 10.085 | 9.354 | 8.071 | 7.060 | 6.580 | 5.824 | 5.451 | 4.853 | 7.718 | -54.7 |
| 세종 | 10.195 | 9.516 | 9.720 | 14.829 | 14.589 | 13.449 | 12.508 | 11.706 | 9.992 | 9.837 | 8.512 | 11.466 | -16.5 |
| 경기 | 10.473 | 9.297 | 9.197 | 9.199 | 8.445 | 7.419 | 6.856 | 6.378 | 5.880 | 5.682 | 5.578 | 7.393 | -46.7 |
| 강원 | 8.156 | 7.193 | 6.970 | 7.127 | 6.547 | 5.829 | 5.447 | 5.418 | 5.125 | 4.807 | 4.753 | 5.922 | -41.7 |
| 충북 | 9.764 | 8.762 | 8.537 | 8.633 | 8.079 | 7.200 | 6.672 | 5.872 | 5.412 | 5.147 | 4.684 | 6.900 | -52.0 |
| 충남 | 10.188 | 9.202 | 8.917 | 9.049 | 8.348 | 7.489 | 6.824 | 6.267 | 5.669 | 5.208 | 4.835 | 7.181 | -52.5 |
| 전북 | 8.726 | 7.823 | 7.651 | 7.580 | 6.846 | 6.142 | 5.454 | 4.940 | 4.536 | 4.185 | 3.968 | 5.913 | -54.5 |
| 전남 | 8.952 | 8.128 | 7.827 | 7.951 | 7.385 | 6.546 | 5.987 | 5.813 | 5.270 | 4.599 | 4.334 | 6.384 | -51.6 |
| 경북 | 9.191 | 8.283 | 8.225 | 8.312 | 7.683 | 6.705 | 6.029 | 5.453 | 4.884 | 4.598 | 4.342 | 6.451 | -52.8 |
| 경남 | 10.089 | 8.928 | 8.962 | 8.852 | 8.105 | 7.106 | 6.322 | 5.749 | 5.049 | 4.700 | 4.266 | 6.804 | -57.7 |
| 제주 | 10.421 | 9.122 | 9.270 | 9.160 | 8.748 | 7.821 | 7.281 | 6.782 | 5.978 | 5.556 | 5.342 | 7.506 | -48.7 |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https://kosis.kr)의 인구동향조사 자료(2023.11.10. 조회)를 기초로 재정리.

### (2) 시군구별 합계출산율 및 조출생률

시도 단위에서는 합계출산율과 조출생률의 격차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시군구 단위에서는 그 격차가 보다 현저하게 드러나고 있다. 전국 229개 기초지자체 중 합계출산율이 1명 이하인 지역은 2015년 18개(7.9%)에서 2022년 182개(79.5%)까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2022년 기준으로 합계출산율이 0.5명 이하로 극히 낮은 지역은 서울(관악, 광진, 종로, 강북, 강남)과 대구(서구, 중구, 남구) 8개 지역이며, 1.5명을 초과하는 지역은 전북 임실과 전남 영광의 2곳에 불과하다. 특히, 229개 기초시 중 2012년 이후 2022년까지 최근 10년간 합계출산율이 증가한 지역은 0.6%가 증가한 경북 의성이 유일하며, 29개(12.7%) 지역은 합계출산율이 10년 전과 비교해 절반 아래로 감소했다.[1)]

**표 3-3 | 시군구 합계출산율(TFR) 분포(2012~2022)**

(단위: 개)

| 시도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
| 합계 | 229 | 229 | 229 | 229 | 229 | 229 | 229 | 229 | 229 | 229 | 229 |
| TFR ≦ 0.5 | - (-) | - (-) | - (-) | - (-) | - (-) | - (-) | - (-) | - (-) | 3 (1.3%) | 3 (1.3%) | 8 (3.5%) |
| 0.5 〈 TFR ≦ 1 | 15 (6.6%) | 34 (14.8%) | 24 (10.5%) | 18 (7.9%) | 36 (15.7%) | 65 (28.4%) | 88 (38.4%) | 108 (47.2%) | 139 (60.7%) | 165 (72.1%) | 174 (76.0%) |
| 1 〈 TFR ≦ 1.5 | 136 (59.4%) | 155 (67.7%) | 159 (69.4%) | 156 (68.1%) | 150 (65.5%) | 133 (58.1%) | 120 (52.4%) | 105 (45.9%) | 78 (34.1%) | 56 (24.5%) | 45 (19.7%) |
| 1.5 〈 TFR ≦ 2 | 69 (30.1%) | 38 (16.6%) | 44 (19.2%) | 51 (22.3%) | 41 (17.9%) | 30 (13.1%) | 21 (9.2%) | 15 (6.6%) | 8 (3.5%) | 5 (2.2%) | 2 (0.9%) |
| 2 〈 TFR | 9 (3.9%) | 2 (0.9%) | 2 (0.9%) | 4 (1.7%) | 2 (0.9%) | 1 (0.4%) | - (-) | 1 (0.4%) | 1 (0.4%) | - (-) | - (-) |

주: 229개 기초지자체는 광역시를 제외한 일반시의 경우 구 단위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산정된 개수임(예를 들어, 수원시의 경우 4개 구로 구분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수원시로만 집계함).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https://kosis.kr)의 인구동향조사 자료(2023.11.10. 조회)를 기초로 재정리.

1) 절반 이상의 급격한 감소세를 보인 지역에는 전남 곡성·보성·장성·함평·해남·강진·영암·목포·화순, 전북 완주, 경북 칠곡·영양, 경남 거제·고성·산청·통영·함안·함양, 충북 음성, 부산 사상·중구, 울산 동구, 대구 서구, 서울 강북·관악·광진, 인천 계양·남동, 경기 오산 등이 포함된다.

한편, 최근 10년간 합계출산율 변화율이 10% 이하로 큰 변동이 없었던 지역은 경북 청도·의성, 경남 남해, 전남 영광, 인천 강화 5개 지역뿐이었다. 이들 5개 지역 중에서는 전남 영광과 경북 의성만이 최근 10년간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합계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다.

전국 229개 기초지자체 중 조출생률이 5명 이하인 지역은 2012년 7개(3.1%)에 불과했으나, 2022년에는 165개(72.1%)로 급격히 증가하였다. 2022년 기준으로 조출생률이 2명 이하로 극히 낮은 지역은 전남 곡성, 경남 산청, 경남 고성, 경북 영양의 4개 지역이고, 8명을 초과하는 지역은 세종과 부산 강서의 2개 지역에 불과하다. 229개 기초지자체 중 2012년 이후 2022년까지 최근 10년간 조출생률이 증가한 지역은 없으며, 절반 이상인 133개(58.1%) 지역에서는 조출생률이 50~80%가량까지 급격히 감소하는 추세가 관찰된다. 조출생률이 가장 많이 감소한 지역은 경남 고성으로 지난 10년 동안 77.2%가 감소하였다. 최근 10년간 조출생률 변화율이 10% 이하로 큰 변동이 없었던 지역은 경기도 과천이 유일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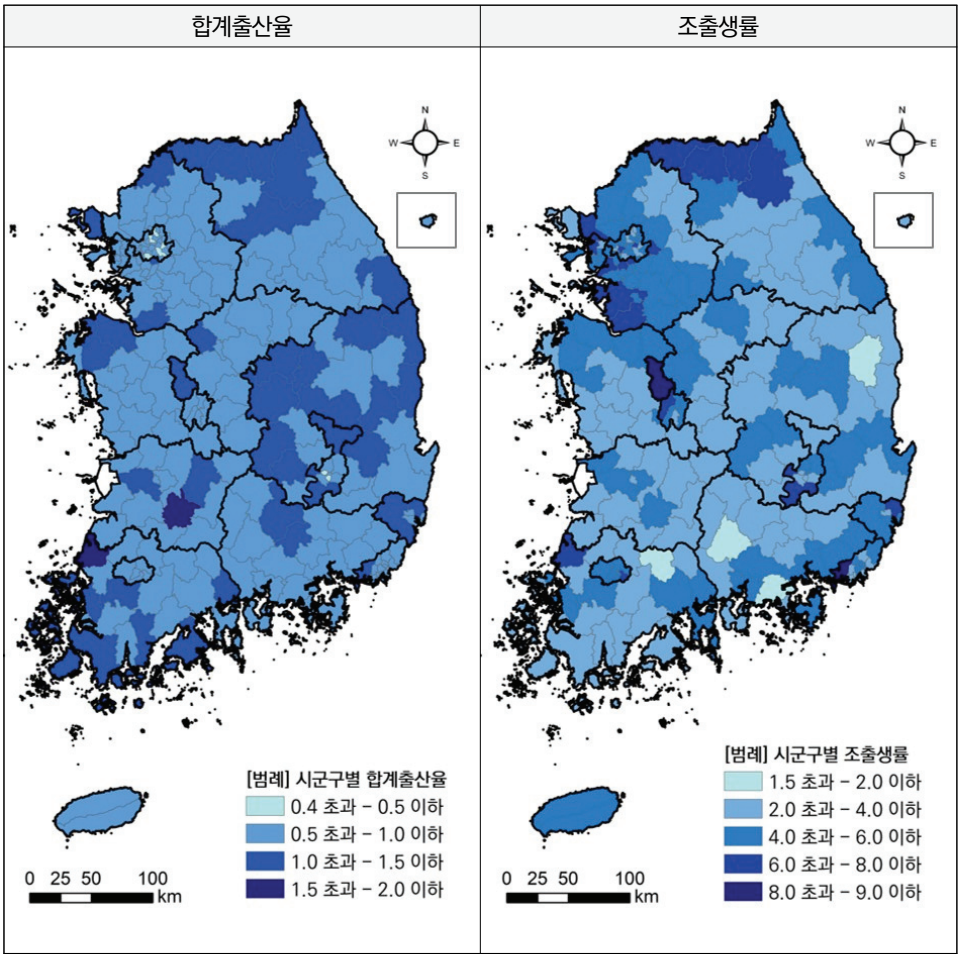
**표 3-4 | 시군구 조출생률(CBR) 분포(2012~2022)**

(단위: 개)

| 시도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
| 합계 | 229 | 229 | 229 | 229 | 229 | 229 | 229 | 229 | 229 | 229 | 229 |
| CBR ≦ 5 | 7 (3.1%) | 16 (7.0%) | 21 (9.2%) | 23 (10.0%) | 36 (15.7%) | 56 (24.5%) | 77 (33.6%) | 96 (41.9%) | 128 (55.9%) | 152 (66.4%) | 165 (72.1%) |
| 5 〈 CBR ≦ 10 | 161 (70.3%) | 184 (80.3%) | 180 (78.6%) | 176 (76.9%) | 175 (76.4%) | 166 (72.5%) | 149 (65.1%) | 129 (56.3%) | 100 (43.7%) | 77 (33.6%) | 64 (27.9%) |
| 10 〈 CBR | 61 (26.6%) | 29 (12.7%) | 28 (12.2%) | 30 (13.1%) | 18 (7.9%) | 7 (3.1%) | 3 (1.3%) | 4 (1.7%) | 1 (0.4%) | - ( - ) | - ( - ) |

주: 229개 기초지자체는 광역시를 제외한 일반시의 경우 구 단위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산정된 개수임(예를 들어, 수원시의 경우 4개 구로 구분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수원시로만 집계함).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https://kosis.kr)의 인구동향조사 자료(2023.11.10. 조회)를 기초로 재정리.

그림 3-1 | 시군구별 합계출산율 및 조출생률 분포(2022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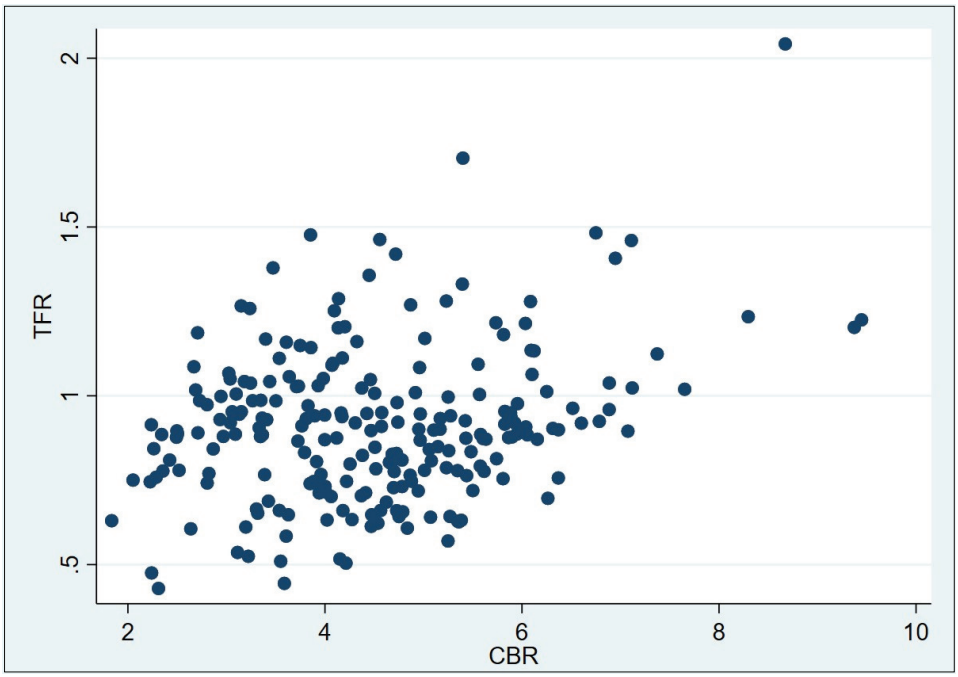



주: 독도 등 일부 도서지역은 상기 이미지에서 제외되었으며, 일반시의 경우 구 단위를 구분하지 않음.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https://kosis.kr)의 인구동향조사 자료(2023.11.10. 조회)를 기초로 연구진 작성.

## 2) 합계출산율과 조출생률의 상관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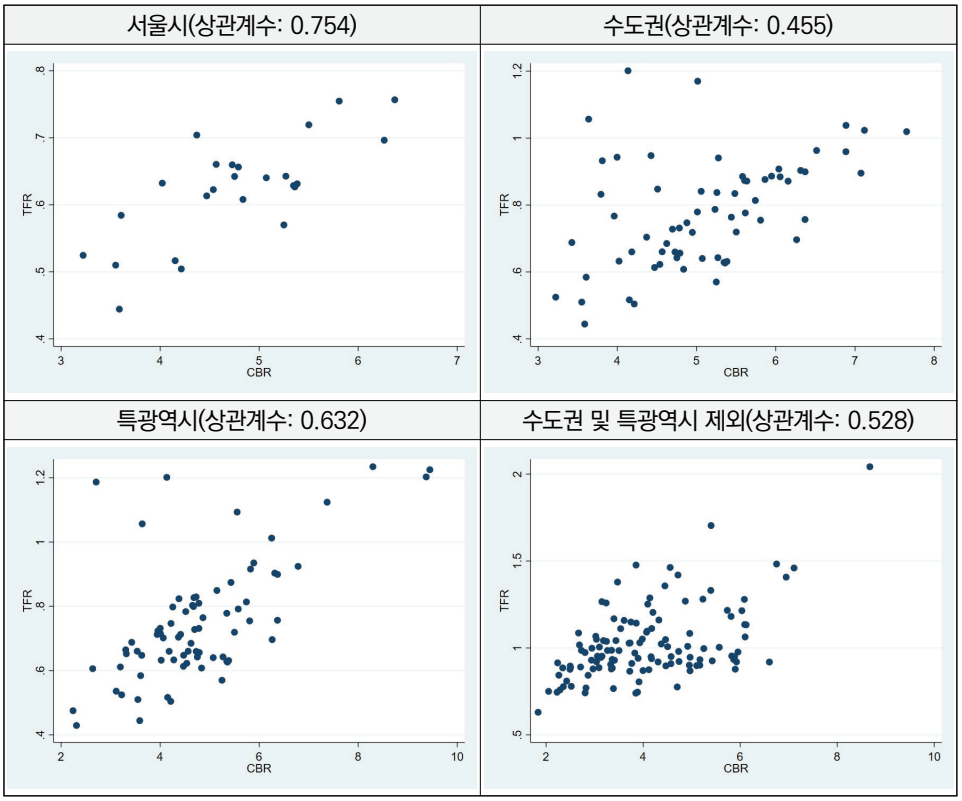
합계출산율(TFR)과 조출생률(CBR)의 최근 3년(2020~2022) 평균값에 대한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상관계수는 0.289로서 두 지표 사이의 연관성이 크게 높지는 않다는 점이 드러났다. 단,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을 세분화할 경우 합계출산율과 조출생률의 상관관계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의 경우 시군구별 합계출산율과 조출생률의 상관계수는 0.754로 연관성이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서울시를 포함한 특광역시의 경우에도 상관계수가 0.632를 기록해 비교적 높은 값을 기록하고 있다. 한편, 수도권 또는 수도권 및 특광역시를 제외한 일반 시군으로 지역을 한정하여 상관관계를 분석하였을 경우에도 상관관계가 낮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2 | 시군구별 합계출산율(TFR)과 조출생률(CBR)의 산포도**




주: 합계출산율과 조출생률은 최근 3년(2020~2022) 평균값을 산출하여 적용함.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https://kosis.kr)의 인구동향조사 자료(2023.11.10. 조회)를 기초로 연구진 작성.

**그림 3-3 | 합계출산율(TFR)과 조출생률(CBR)의 지역별 상관계수 및 산포도**




주: 합계출산율과 조출생률은 최근 3년(2020~2022) 평균값을 산출하여 적용함.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https://kosis.kr)의 인구동향조사 자료(2023.11.10. 조회)를 기초로 연구진 작성.

전국 단위에서 합계출산율과 조출생률의 상관관계가 뚜렷하지 않은 까닭은 실제 출생아 수를 반영하는 조출생률이 평균적인 출산율뿐만 아니라 혼인비율 및 청년인구 비중 같은 인구학적 특징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특히 청년인구 순유출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이 다수인 비수도권에서는 합계출산율이 높다고 하더라도 가임기 여성인구의 절대적인 규모와 비중이 감소하고 있는 탓에 실제 출생되는 아이의 숫자 역시 줄어들고 있는 양상이 관찰되고 있다.

## 2. 저출생의 지역별 영향요인

### 1) 분석 자료 및 변수 구성

이제 본 소절에서는 지역별 합계출산율과 조출생률의 영향요인을 설명하기 위한 실증분석을 수행한다. 분석의 시간적인 범위는 2012년부터 2022년이다. 국가적인 합계출산율 추세는 2002년까지 하락하며 저점을 찍은 후 완만한 등락세를 유지하다가 2012년 이후 다시금 가파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 같은 자료의 추세 및 가용자료의 시기 등을 고려해 본 연구는 2012년부터의 지역별 합계출산율 추세를 분석하였다. 분석의 공간적 단위는 기초지자체 단위인 전국의 시군구로 설정되었는데, 이는 2023년 기준으로 227개 지역에 해당한다. 그러나 전라남도 신안군, 인천광역시 옹진군 등 3개의 기초지자체는 핵심변수인 주거안정성 변수(아파트 실거래가 등)를 포함해 다수 변수의 집계가 어려워 최종적인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인구 부문 지표의 구성)** 본 연구의 이론적 가설과 관련된 주거·고용 안정성 변수를 논의하기에 앞서서, 본 장의 분석모형에는 기초지자체의 인구학적 특징을 반영하는 인구 부문 지표가 통제된다. 이에 해당하는 지표는 인구밀도, 청년인구 비중, 청년인구 순유입률이다. 먼저 인구밀도는 합계출산율과 뚜렷한 양자 간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 변수로서 최근의 저출산 담론에서 수도권 초저출산 현상의 주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변수이기도 하다. 특히 조영태(2021), 감사원(2021), 고우림(2021) 등 최근의 실증연구에서 지역별 합계출산율을 설명하는 핵심요소로 보고된 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본적으로 인구밀도가 주거불안정 등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쳐 합계출산율에 상관된다고 가정하는 가운데 분석모형의 통제변수로 포함시켰다. 인구밀도와 출산율의 관계를 실증한 최근의 연구들과 달리, 본 연구는 광역지자체가 아닌 기초지자체 단위의 패널자료 분석을 통해 인과적 추론을 시도한다는 데 차이점이 있다. 인구밀도의 추정은 고우림(2021)을 따라 1인당 주거·상업·공업 지역 면적의 합계로 정의하였다.

다음으로 청년인구 비중이나 청년인구의 순유입률은 합계출산율뿐만 아니라 조출생률을 설명하는 데 중요한 변수로서 가정되어 모형에 포함된다. 특히 비수도권의 조출생률 저하는 합계출산율의 하락보다는 가임기 청년인구의 감소에서 기인하는 바가 더 클 수 있다는 점에서 해당 변수의 효과를 검정할 필요가 있다.

**(고용안정성 지표의 구성)**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본 장의 실증분석이 검정할 주요 가설은 지역 수준의 고용안정과 주거안정의 수준이 출산변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리라는 것이다. 지역별 고용안정성 수준을 조작화하기 위해 총 다섯 개의 변수를 검토했는데, 우선 **지역노동시장의 중장기 고용전망과 관련한 변수로서 직전 3개년 간의 고용증가율**을 모형에 포함시켰다. 지역산업의 경쟁력 약화나 앵커기업 이탈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급격한 고용감소는 지역노동시장 전반의 안정성을 크게 위협하는 요소다. 울산광역시 동구의 경우, 2016년부터 2019년까지 3년 동안 지역 전체 고용이 21.17% 감소했는데 해당 기간 합계출산율은 1.583명에서 1.076명으로 가파르게 추락했다(-32%). 비슷하게 2015년부터 2018년까지 19.51%의 지역 고용이 감소한 거제시에서는 동 기간 합계출산율이 1.911명에서 1.255명으로 34% 이상 하락했다.

다음은 **지역노동시장의 비어 있는 일자리 비중을 대변하는 지표로서 구인율(job opening rates)**을 모형에 포함했다. 구인율은 지역 내 비어 있는 일자리의 숫자를 전체 근로자 수와 비어 있는 일자리의 합계로 나눈 값이다. 여기서 비어 있는 일자리란 현재 구인 중이거나 1개월 안에 신규 채용이 가능한 일자리를 뜻한다. 지역의 구인율이 높다는 것은 기업이 필요로 하는 만큼의 인력을 수급하기가 빡빡하다는 것을 의미하는데(김지운 2017), 노동시장에 처음 진입하려는 청년구직자 입장에서는 취업 기회가 많다는 점에서 낮은 진입장벽을 의미할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구인율과 실업률은 음(-)의 상관관계를 갖는데 이를 베버리지 곡선(Beveridge Curve)이라 하는데, 구직·구인 간의 미스매치가 심화될 경우 실업률과 구인율이 동시에 증가하기도 한다. 이를 감안하면 구인율을 실업률로 나누는 유효구인배율이 구직자 대비 일자리가 얼마나 풍부한지를 더 적절하게 대변할 수 있다. 그러나 기초지자체 단위에서 실업률을 장기 시계열

로 추적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한 사정을 고려해 본 장의 분석에서는 유사한 의미를 갖는 구인율을 모형에 포함하도록 한다. 해당 지표는 연도별 사업체노동력조사를 활용해 추정하였다.

다음으로 **노동시장의 안정성을 간접적으로 대변하는 지표로서 이직률**을 추정하였다. 지역노동시장 수준에서의 높은 이직률은 근로자 수준의 고용안정지표인 고용유지기간(employee tenure)이나 고용유지율(retention rates)과 부정적인 상관관계를 이룬다(Auer & Cazes 2000).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는 국면에서의 높은 이직률은 지역노동시장의 역동성을 의미할 수도 있다. 그러나 본 장의 분석에 사용된 시계열 자료에서 높은 이직률을 기록한 기초지자체는 대부분 지방 중소도시로 구성되어 있다. **지방 중소도시에서 이직률이 높은 까닭은 청년 근로자가 장기적인 커리어를 개발할 수 있는 대기업·공기업 등의 안정적인 일자리와 표준화된 취업 경로가 수도권에 비해 극히 제한적이기**기 때문이다(양승훈 2021). 이러한 이유로 다수의 청년이 플랫폼 노동 같은 비정형 노동에 참여하거나 장기고용을 담보하기 어려운 중소기업 일자리를 전전하게 되는 사정이 높은 이직률에 반영되어 있다. 이 같은 맥락을 반영하기 위해 연도별 사업체노동력조사를 활용해 각 시군구의 이직률을 추정하였다.

마지막으로 고용안정성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변수로서 지역노동시장의 **상용직 비중과 공공일자리 비중**을 추정해 모형에 포함하였다. 개인 근로자 수준에서 상용직·정규직 여부나 공공일자리 취업 여부가 출산의향과 출산이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다수의 국내문헌을 통해 실증된 바 있다(조성호, 문승현, 김종훈 2020). 다만, 지역 수준에서의 설명변수로 이들 변수의 효과를 검증한 사례는 드문데, 개인 수준의 분석처럼 근로자의 고용안정에 대한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는 없기 때문에 상관성이 뚜렷하지는 않으리라 예상된다. 그러나 지역 내 고용이 안정화되어 있는 상용직·공공 부문 종사자가 많다는 것 자체가 출산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데 간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에서 이들 변수를 모형에 포함시키기로 한다.

**(주거안정성 지표의 구성)** 앞 장의 이론적 고찰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주거안정성을 의미하는 지표는 주거비에 대한 부담가능성(affordability)을 기준으로 함이 대표적이지만 그 외에도 주거 서비스의 안정성이나 주변 지역의 정주환경과 같은 다면적인 지표를 활용해 측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국내적인 맥락에서 가구의 출산결정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변수는 부동산가격의 상승이라 예상된다. 이 점에서 본 장의 분석에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원시자료를 통해 각 시군구의 **단위면적당 아파트 평균거래가격과 아파트 평균전세가격**을 추정하고 모형의 주요 설명변수로 포함시켰다. 지역의 부동산가격 상승은 출산비용과 보육비용을 동시에 증가시켜 출산율 저하나 만혼비율의 증가를 야기한다는 사실은 국내외 다수문헌을 통해 주장된 바 있다(Simon and Tamura 2009; Yi and Zhang 2010; Hui et al. 2012; Liu and Clark 2016; 김민영, 황진영 2016; 김동현, 전희정 2021). 자료분포의 편차를 줄여 정규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에서 부동산가격 변수에는 각각 로그값을 취한다.

이 밖에도 주거환경의 적절성(amenity) 측면에서 주거안정을 조작화하기 위해서는 **시군구 단위의 정주환경 수준을 계량화**하는 접근이 가능하다(류승한, 조성철, 남기찬 2022). 특히, 류승한, 조성철, 남기찬(2022)은 시군구 단위의 정주환경 수준이 지역 청년고용의 비중이나 변화율에 긍정적으로 상관된다는 점을 실증한 바 있다. 한편, 지역 총주택 대비 **공공임대주택의 비중**을 추정하거나 인구주택총조사 표본 등을 활용해 시군구 수준의 **자가점유비율**을 추정하는 것도 의미 있는 시도가 될 수 있다.

**표 3-5 | 지역 수준 패널자료분석에 포함된 변수의 설명**

| 변수명 | | 정의 | 자료 |
|---|---|---|---|
| 종속변수 | 합계출산율 | 지역 내 한 여성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의 수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
| | 조출생률 | 인구 천 명당 출생아 수 | 주민등록연앙인구 |
| 인구 부문 관련 변수 | 인구밀도 | 주민등록인구 1인당 주거·상업·공업 지역 면적(㎡) | 통계청, LH 도시계획현황 |
| | 청년인구 비중 | 총인구 대비 19세~34세까지의 청년인구 비중 | 통계청 주민등록인구현황 |
| | 청년인구 순유입률 | 청년인구 전입률 - 청년인구 전출률 |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 주민등록인구현황 |
| 고용안정 관련 변수 | 직전 3개년 고용증가율 | 3년 전 대비 지역 총고용 변화율 | 전국사업체조사 |
| | 구인율 | 빈 일자리 수 / (빈 일자리 수+근로자 수)×100 | 사업체노동력조사 |
| | 이직률 | 기준연도 12개월 이직자 합계 / (기준연도 근로자 합계)×100 | 사업체노동력조사 |
| | 상용직 비중 | 지역고용 중 상용직 일자리의 비중 | 사업체노동력조사 |
| | 공공일자리 비중 | 총고용 대비 공공 부문 근로자 비중 (세부업종 기준 정의) | 전국사업체조사 |
| 주거안정 관련 변수 | 아파트 평균매매가격(로그값) | 단위면적당(㎡) 아파트 실거래가격의 평균 |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
| | 아파트 평균전세가격(로그값) | 단위면적당(㎡) 아파트 전세보증금 평균 |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
| 기타 통제변수 | 재정자립도 | {지방세+세외수입} / {자치단체예산 규모} ×100 | 행정안전부(재정정책과) 공표자료 |
| | 사회복지예산비율 | 지자체 총예산 중 사회복지 부문 예산 비중(%)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365 |
| | 지역내총생산(로그값) | 지역경제 주체가 생산한 재화·서비스 가치의 총계 | 통계청 지역계정 |

자료: 연구진 작성.

**(기타 통제변수의 구성)** 추가적인 통제변수로서는 먼저 기초지자체의 재정적인 역량을 대변하는 지표로서 연도별 재정자립도 변수를 포함하였다. 재정기반이 양호한 지자체는 출산장려를 위한 공적인 역할을 강화하거나 양질의 정주환경을 유지하는 데 유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재정자립도는 통제변수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다만, 김동현, 전희정(2021)의 공간패널회귀분석에서는 재정자립도가 시군구 합계출산율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의 효과를 갖는다고 보고된 바 있다.

이어서 지역의 보육환경과 관련한 지역 공공 서비스의 투자 수준을 간접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지자체의 사회복지예산비율 변수를 통제하였다. 이와 관련해 박관태, 전희정(2020)은 횡단면 시군구 회귀분석에서 사회복지예산 비중이 중소도시의 합계출산율에 긍정적으로 상관되지만, 대도시·농촌 지역에서는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상관관계를 기록하지 못함을 보고한 바 있다.

마지막으로 지역경제의 절대적인 규모 차이를 반영하기 위한 통제변수로서 지역내총생산(GRDP)의 로그값이 모형에 포함되었다. 출산행위에 대한 가구의 의사결정이 대략 1년의 시차를 갖게 된다는 점을 고려해 분석모형에 사용된 설명변수는 직전 3개년 변화율을 적용한 고용증가율을 제외하면 모두 1개년 과거의 값을 사용하였다.

## 2) 분석모형

분석모형의 기본 틀은 2012년부터 2022년까지의 시군구 단위 패널자료를 통해 출생지표를 설명하는 고정효과(fixed-effects)모형이다. 지역의 개체정보와 시간정보를 동시에 포함하는 패널자료는 관측 가능한 변수로 통제하기 어려운 지역 간의 이질성(unobserved heterogeneity)을 고려해 누락변수 편의(omitted variable bias)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강점을 갖고 있다. 횡단자료를 대상으로 하는 OLS 등의 분석은 지역 특징의 정적인 관계만을 비교할 수 있는 반면, 패널자료분석에서는 지역 수준의 특징을 고정시킨 상태에서 시점 간의 차이로 인한 종속변수값의 영향을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적극적인 인과적 추론이 가능하다. 또한 횡단자료 혹은 시계열자료에 비해서 훨씬 풍부한 변수의 변이량(variability)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한치록 2013).

$$y_{it} = \alpha + \beta x_{it} + u_i + e_{it} \qquad (1)$$

다양한 패널자료분석 기법의 갈래 중에서 본 장의 분석은 기본적으로 고정효과모형을 사용한다. 위 식 (1)과 같이 고정효과모형에서는 종속변수의 총오차를 개체특성($u_i$)과 고유오차($e_{it}$)의 합으로 구분하고, 고유오차는 모형으로부터 외생적이라 가정하게 된다. 고정효과모형의 핵심은 모형에 포함된 독립변수들과 상관되어 있는 개체특성($u_i$)을 모형으로부터 제거하거나 직접 추정함으로써 모형이 갖는 내생성의 문제를 해결하고 독립변수효과에 대한 불편향(unbiased) 추정치를 획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개체특성을 통계적으로 제거하는 First-Difference 추정방식, Within-Group 추정방식과 개체특성을 직접적으로 추정하는 LSDV(Least Squares Dummy Variable) 추정방식이 적용 가능한데, 본 연구에서는 Within-Group 추정방식을 적용하였다.

$$y_{it} = \alpha + \beta x_{it} + u_i + e_{it} \qquad (2)$$

$$\bar{y}_i = \alpha + \beta \bar{x}_i + u_i + \bar{e}_i \qquad (3)$$

$$(y_{it} - \bar{y}_i) = \beta(x_{it} - \bar{x}_i) + (e_{it} - \bar{e}_i) \qquad (2)-(3)$$

고정효과를 Within-Group 추정방식으로 제거하는 방법을 간단한 수식으로 표현하면 위와 같다. 수식에 표현된 바와 같이, 시군구 단위에서 관측되지 않는 개체특성인 $u_i$의 효과는 여전히 통제되어 있지만, 차분을 통해 모형에서 그 영향을 제거함으로써 다른 독립변수와의 상관성으로 인한 내생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u_i$가 제거되기 때문에 $u_i$와 독립변수 간의 공변량이 0이 아니라 하더라도 합동OLS 방식으로 계수에 대한 일치추정량 획득이 가능하다. 다만, 이 같은 추정방식의 구조 탓에 고정효과모형에서는 시간불변 변수들의 효과가 $u_i$와 함께 제거되기 때문에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지역특성의 효과만을 추정할 수 있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본 연구의 맥락에서는 특·광역시 여부나 성장관리·과밀억제권역 여부처럼 분석 기간(2012~2022년)에 변화량이 없는 변수는 고정효과모형에 포함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다.

### 3) 분석결과

#### (1) 전국 대상 분석결과

먼저 인구밀도의 효과는 모형의 설명변수가 추가된 이후에도 합계출산율과 조출생률 모두를 설명함에 있어 통계적 유의도를 유지했다. 다만, 인구 부문 관련 변수 중에서 설명력이 가장 높았던 변수는 청년인구 비중과 청년인구 순유입률이었다. 특히 청년인구 비중은 합계출산율·조출생률에 대한 모형 모두에서 여타 변수보다 월등하게 높은 설명력을 가진 변수임이 확인되었다. 청년인구 순유입률 역시 신뢰수준 99% 구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효과를 기록하고 있다. 이를 종합하면, 인구구조 측면에서 진단했을 때 **지역의 인구밀도가 낮을수록, 청년인구 비중이 높고 청년인구의 순유입이 많을수록 합계출산율과 조출생률이 높아진다는 추세**가 관찰된다.

고용안정과 관련된 변수 중에는 구인율과 이직률이 종속변수에 대한 높은 설명력을 기록했고, 상용직 비중과 공공일자리 비중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를 기록하지 못했다. 직전 3개년 고용증가율 변수는 조출생률을 설명하는 모형에서만 높은 유의도를 나타냈고 합계출산율 설명모형에서는 신뢰수준 90% 구간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를 해석하면, **합계출산율과 조출생률은 진입 가능한 일자리가 풍부하고 이직률이 낮은 지역노동시장이 존재할 때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한편, 지역 내 신생아 수의 증가에는 일자리 증가추세 역시 중요하게 기여한다는 점도 확인되었다. 반면, 개인근로자 수준의 선행연구에서 출산행위와의 상관관계가 확인된 바 있는 상용직·공공일자리 여부는 지역 수준의 총량화된 지표에서는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상관관계를 이루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주거안정과 관련한 변수에서는 합계출산율의 경우 아파트 평균전세가격의 로그값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했고, 조출생률에는 매매가격과 전세가격 모두가 높은 유의도를 기록했다. 인과관계의 방향은 모두 가정된 바와 같이 부(−)의 기울기를 가리키고 있어, **지역의 부동산가격이 증가할수록 출산율과 출생률의 하락이 이어진다는 본 연구의 가설을 지지**하고 있다. 다만,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합계출산율의 설명에 있어서는 아파

트 매매가격 증가의 효과가 유의하지 못했는데, 이는 해당변수의 효과가 서울·수도권 등 일부 지역에서만 유의했던 탓인 것으로 짐작된다.

**표 3-6 | 지역별 합계출산율·조출생률을 설명하는 고정효과모형 분석결과 비교**

| 변수명 | | 종속변수: 합계출산율 | 종속변수: 조출생률 |
|---|---|---|---|
| 인구 부문 관련 변수 | 인구밀도 | -0.188***<br>(0.040) | -1.333***<br>(0.271) |
| | 청년인구 비중 | 0.091***<br>(0.004) | 0.834***<br>(0.028) |
| | 청년인구 순유입률 | 0.024***<br>(0.004) | 0.138***<br>(0.027) |
| 고용안정 관련 변수 | 직전 3개년 고용증가율 | 0.001*<br>(0.000) | 0.009***<br>(0.002) |
| | 구인율 | 0.098***<br>(0.008) | 0.535***<br>(0.057) |
| | 이직률 | -0.008***<br>(0.002) | -0.054***<br>(0.015) |
| | 상용직 비중 | -0.001<br>(0.001) | -0.005<br>(0.008) |
| | 공공일자리 비중 | -0.002<br>(0.004) | -0.001<br>(0.028) |
| 주거안정 관련 변수 | 아파트 평균매매가격(로그값) | -0.008<br>(0.006) | -0.078**<br>(0.040) |
| | 아파트 평균전세가격(로그값) | -0.024***<br>(0.006) | -0.165***<br>(0.043) |
| 기타 통제변수 | 재정자립도 | 0.003***<br>(0.001) | 0.052***<br>(0.007) |
| | 사회복지예산비율 | -0.001<br>(0.001) | -0.013*<br>(0.008) |
| | 지역내총생산(로그값) | -3.443***<br>(0.467) | -24.571***<br>(3.148) |
| 지역 수 | | 224 | 224 |
| 관측점 | | 1,843 | 1,843 |
| F-test | | 194.64*** | 291.32*** |

주: 1) 괄호 안의 값은 표준오차 의미
2) 고용증가율(직전 3개년)을 제외한 모든 설명변수는 종속변수의 전년도 값을 사용
자료: 시군구 단위의 통계청 자료를 활용해 연구진 직접 분석.

(2) 수도권·비수도권을 구분한 분석결과

**(합계출산율에 대한 지역 간 분석결과 비교)** 이어지는 <표 3-8>에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기초지자체를 각각 구분해 동일한 모형명세의 고정효과모형을 추정하였다. 우선, 인구밀도 변수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의 효과를 가졌고 효과의 강도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청년인구 비중이나 청년인구 순유입률 역시 마찬가지로 양 지역 모두에서 통계적인 유의도가 높게 유지되고 있다. 다만, 특기할 점은 청년인구 순유입률의 표준화된 효과가 수도권보다는 비수도권에서 2배 이상 높았다는 점이다. 비수도권 지역 중에는 청년인구 순유입보다는 순유출을 경험하고 있는 지역이 다수를 차지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는 지방에서는 청년인구가 지역을 떠날수록 출산율 역시 저하되고 있는 효과가 지속되고 있다는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고용안정성과 관련해서, 양 지역 간의 모형결과가 크게 엇갈리는 지점은 '직전 3개년 고용증가율'의 효과다. 수도권의 경우 해당 변수의 계수는 통계적인 유의도에서 거리가 멀었던 반면, 비수도권에서는 신뢰수준 95% 구간에서 뚜렷하게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를 기록하였다. 즉, **고용증가는 비수도권 지역에서만 출산율 상승에 기여**한다. 역으로는, 지역 일자리 규모의 급격한 감소가 합계출산율의 하락에 기여했다는 해석도 가능한데 앞서 언급했던 거제시나 울산광역시 동구 등의 추세가 고용감소 이후 출산율 하락이 이어졌던 사례라 할 수 있겠다.

지역노동시장의 불안정 요소와 관련된 지표인 '이직률' 역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추정결과가 엇갈렸다. 수도권에서는 해당 변수의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못했던 반면, 비수도권에서는 신뢰수준 99% 구간에서 높은 강도의 부(-)의 효과를 기록했다. 이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에서 이직률이 갖는 의미가 상이할 수 있다는 본 연구의 가설과 방향성을 일치**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지방에서는 장기적인 경력개발을 꿈꿀 만한 안정적인 일자리가 제한적이고 영세한 사업장이나 플랫폼 형태의 일자리가 다수를 이루는 상황 탓에 높은 이직률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로 인한 고용불안정이 출산율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리라는 가설이 적어도 변수 간의 방향성 측면에서는 지지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지역노동시장의 진입 가능한 일자리

규모를 대변하는 구인율 변수는 양 지역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했고 높은 설명력을 드러냈다. 그러나 전국 단위 분석과 마찬가지로 상용직 비중이나 공공일자리 비중은 일관되게 유의도를 기록하지 못했다.

**표 3-7 |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구분한 합계출산율 영향요인의 고정효과모형 분석결과**

| 변수명 | | 수도권 | 비수도권 |
|---|---|---|---|
| 인구 부문 관련 변수 | 인구밀도 | -0.256*** (0.046) | -0.223*** (0.058) |
| | 청년인구 비중 | 0.082*** (0.006) | 0.088*** (0.005) |
| | 청년인구 순유입률 | 0.014*** (0.005) | 0.034*** (0.005) |
| 고용안정 관련 변수 | 직전 3개년 고용증가율 | -0.000 (0.001) | 0.001** (0.000) |
| | 구인율 | 0.090*** (0.013) | 0.097*** (0.011) |
| | 이직률 | 0.001 (0.005) | -0.009*** (0.003) |
| | 상용직 비중 | 0.001 (0.002) | -0.001 (0.002) |
| | 공공일자리 비중 | -0.011 (0.009) | -0.003 (0.005) |
| 주거안정 관련 변수 | 아파트 평균매매가격(로그값) | -0.020** (0.008) | 0.007 (0.008) |
| | 아파트 평균전세가격(로그값) | -0.110*** (0.016) | -0.017** (0.007) |
| 기타 통제변수 | 재정자립도 | 0.000 (0.001) | 0.002 (0.002) |
| | 사회복지예산비율 | 0.001 (0.001) | -0.002 (0.002) |
| | 지역내총생산(로그값) | -5.974*** (0.709) | -1.962*** (0.591) |
| 지역 수 | | 65 | 159 |
| 관측점 | | 585 | 1,258 |
| F-test | | 107.65*** | 125.33*** |

주: 1) 괄호 안의 값은 표준오차 의미
2) 고용증가율(직전 3개년)을 제외한 모든 설명변수는 종속변수의 전년도 값을 사용
자료: 시군구 단위의 통계청 자료를 활용해 연구진 직접 분석.

주거안정성에 대한 효과 역시 양 지역에서의 분석결과가 크게 엇갈렸다. 수도권에서는 아파트 평균매매가격의 로그값이나 평균전세가격의 로그값 변화가 합계출산율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함이 통계적으로 의미 있게 확인되었다. 즉, **수도권에서는 아파트 매매가격이나 전세가격이 증가하는 지역일수록 합계출산율도 낮은 값을 기록**한다는 가설이 제반 요인을 통제한 고정효과모형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비수도권에서는 아파트 평균매매가격의 효과가 유의하지 못했고, 평균전세가격만이 신뢰수준 95% 구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의 효과를 기록하였다. 평균전세가격의 효과는 뚜렷하게 유의하기는 했지만, 이 역시 수도권과 비교할 때는 효과의 강도나 통계적 유의도 측면 모두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드러냈다.

**양 지역 모두 아파트 매매가격보다는 전세가격 상승의 효과가 출산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은 추가적으로 논의할 여지가 있다. 일단 이 같은 결과는 비슷한 연구의 실증결과와도 일관되는 것이다. 전국 시군구를 대상으로 분석했던 김동현, 전희정(2021)의 분석에서도 아파트 매매가격은 합계출산율에 유의한 효과를 기록하지 못했고 전세가격의 효과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광역시도 단위의 패널자료분석을 수행한 김민영, 황진영(2016)에서는 주택매매가격과 주택전세가격의 효과가 합계출산율을 설명하는 데 모두 유의했으나, 매매가격 효과는 신뢰수준 90% 구간에서만 유의했고 효과의 강도가 상대적으로 약했다. 반면 주택전세가격의 효과는 신뢰수준 99% 구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했으며 합계출산율에 대해 훨씬 큰 설명력을 기록했다. 이처럼 출산율에 대해 전세가격의 효과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다는 사실은 혼인이나 출산을 고려하는 청년기 가구에는 매매가격 이상으로 전세가격의 상승이 민감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동시에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가파른 집값 상승이 출산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하는 수도권과는 달리, 인구감소와 미분양 적체를 겪고 있는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집값 상승요인의 중요도가 높지 않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수도권에서는 주거안정성의 측면이 출산율 저하에 지배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비수도권에서는 고용안정성의 효과가 뚜렷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고용안정성 관련 변수는 수도권에서 일관된 효과를 기록하지 못한 반면, 주거

안정성 관련 변수는 비수도권에서 효과의 정도나 유의도 모두가 상대적으로 저조했다. 이처럼 수도권과 지방의 엇갈리는 분석결과는 앞서 2장에서 논의했던 이론적 가설과 방향성을 일치하고 있다.

**(조출생률에 대한 지역 간 분석결과 비교)** <표 3-9>는 동일한 모형명세로 조출생률을 설명하는 분석결과를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걸쳐 비교하고 있다. 대체로 각 요인의 효과나 계수의 방향성은 합계출산율을 설명하는 모형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인구 부문에서는 여전히 모든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가운데, 청년인구 순유입률의 효과가 수도권보다는 지방에서 강하게 나타나는 추세가 반복되고 있다. 고용안정 부문에서는 합계출산율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비수도권에서만 고용증가율과 이직율의 효과가 통계적 유의도를 획득했고 수도권에서는 구인율의 효과만이 유의한 효과를 기록하고 있다. 주거안정 부문에서 아파트 매매가격의 상승은 수도권 지자체의 조출생률을 저하시키는 강력한 요인이었으나 비수도권에서는 통계적 유의도를 획득하지 못했다. 전세가격 상승효과는 양 지역 모두 유의했지만, 합계출산율의 경우와 비슷하게 수도권에서 종속변수에 대한 부(-)의 효과가 더 뚜렷하게 드러났다.

이처럼 **합계출산율과 조출생률의 지역 수준 설명요인이 비슷했다는 점은 유사한 틀을 가진 선행연구인 박관태, 전희정(2020)과 차별**되는 결과다. 박관태, 전희정(2020)은 전국 시군구를 대도시·중소도시·농촌으로 구분한 뒤 각 지역의 유형별로 합계출산율과 조출생률을 설명하는 횡단면 회귀분석(종속변수는 2017년 기준)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합계출산율에는 취업률이나 주택매매가격이 중요한 영향인자로 작용했던 반면 조출생률에는 공공임대주택비율이나 사회복지예산, 의료시설 개소 수가 상관되는 식으로 회귀식의 분석결과가 크게 엇갈렸다. 반면, 본 연구의 분석에서는 합계출산율과 조출생률의 설명요인이 대동소이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박관태, 전희정(2020)의 분석결과 중에서 합계출산율에 대한 주택매매가격 효과가 농촌에서는 유의하지 않고 대도시·중소도시에서만 유의했다는 점은 유사 변수가 수도권에서만 유의한 것으로 추정된 본 연구의 결과와 비슷한 추세를 드러내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기타 변수들의

효과가 다르게 추정된 점은 시점 등 분석조건 차이도 개입되었겠으나, 횡단면 회귀분석과 종단자료 고정효과모형이라는 분석기법의 차이에서 말미암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표 3-8 | 조출생률을 설명하는 고정효과모형 분석결과의 수도권·비수도권 비교**

| 변수명 | | 수도권 | 비수도권 |
|---|---|---|---|
| 인구 부문 관련 변수 | 인구밀도 | -1.248***<br>(0.434) | -2.035***<br>(0.345) |
| | 청년인구 비중 | 0.853***<br>(0.053) | 0.774***<br>(0.032) |
| | 청년인구 순유입률 | 0.112**<br>(0.044) | 0.201***<br>(0.032) |
| 고용안정 관련 변수 | 직전 3개년 고용증가율 | 0.006<br>(0.005) | 0.011***<br>(0.003) |
| | 구인율 | 0.583***<br>(0.112) | 0.516***<br>(0.065) |
| | 이직율 | 0.054<br>(0.040) | -0.067***<br>(0.016) |
| | 상용직 비중 | 0.002<br>(0.016) | 0.001<br>(0.009) |
| | 공공일자리 비중 | -0.084<br>(0.081) | -0.012<br>(0.028) |
| 주거안정 관련 변수 | 아파트 평균매매가격(로그값) | -0.225***<br>(0.074) | 0.071<br>(0.047) |
| | 아파트 평균전세가격(로그값) | -0.882***<br>(0.138) | -0.110**<br>(0.044) |
| 기타 통제변수 | 재정자립도 | 0.010<br>(0.012) | 0.040***<br>(0.010) |
| | 사회복지예산비율 | 0.018<br>(0.012) | -0.039***<br>(0.010) |
| | 지역내총생산(로그값) | -44.850***<br>(6.316) | -11.919***<br>(3.530) |
| 지역 수 | | 65 | 159 |
| 관측점 | | 585 | 1,258 |
| F-test | | 107.65*** | 125.33*** |

주: 1) 괄호 안의 값은 표준오차 의미
2) 고용증가율(직전 3개년)을 제외한 모든 설명변수는 종속변수의 전년도 값을 사용
자료: 시군구 단위의 통계청 자료를 활용해 연구진 직접 분석.

### (3) 청년인구 순유입률에 대한 추가 분석결과

본 장에서 제시된 분석결과들은 앞서 2장의 결론부에서 제시했던 인과순환지도의 주요 경로 중 다수를 실증하고 있다(<그림 2-4> 참조). 그러나 인과순환지도의 핵심적인 동인이었던 청년인구 유출의 지역 수준 요인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이에 <표 3-10>에서는 비슷한 모형명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종속변수를 청년인구 순유입률로 삼는 고정효과모형을 수도권 여부를 구분해 추정하였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우선 수도권 지역에서는 공공일자리 비중이 낮은 지자체에 청년인구 순유입이 몰렸다는 결과 외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가 없음을 알 수 있다. 반면, 대체로 청년인구의 순유출을 경험하고 있는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다수 변수가 이론적으로 가정할 수 있는 방향대로 유의도가 높은 효과를 기록하였다. 이하는 모두 비수도권 분석모형에 대한 해석이다.

먼저 인구 부문 변수들은 모두 비수도권의 청년인구 순유입률을 의미 있게 설명하고 있다. 이를 해석하면, 비수도권 시군구 중에서도 인구밀도가 높고 청년인구 비중이 높은 지역일수록 추가적인 청년인구의 순유입이 높은 수치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관찰된다. 역으로 해석하면 인구밀도가 낮고 청년인구가 부족한 지역에서 추가적인 청년인구 이탈이 지속되고 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어서 고용 관련 변수 중에는 고용증가율, 구인율, 상용직 비중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효과를 기록했다. 즉, **일자리가 빠르게 증가하며, 진입 가능한 빈 일자리 규모가 크고, 안정적인 상용직 비중이 높은 지역일수록 청년인구의 유입 규모가 높다. 반면, 지역고용의 기반이 축소되고 있거나 불안정한 일자리 비중이 높은 지역에서는 청년인구가 유입되기보다는 유출되는 규모가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해석**된다.

주거안정과 관련해서는 아파트 평균매매가격의 로그값이 신뢰수준 95% 구간에서 유의한 부(−)의 효과를 기록했다. 즉,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지역일수록 청년인구의 유입보다는 순유출 규모가 증가**하게 된다. 반면, 합계출산율과 조출생률에 대한 설명모형과는 달리 아파트 평균전세가격의 로그값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를 기록하지 못했다.

**표 3-9 | 청년인구 순유입률을 설명하는 고정효과모형 분석결과의 수도권·비수도권 비교**

| 변수명 | | 수도권 | 비수도권 |
|---|---|---|---|
| 인구 부문 관련 변수 | 인구밀도 | 0.642<br>(0.431) | 1.818***<br>(0.328) |
| | 청년인구 비중 | -0.009<br>(0.055) | 0.102***<br>(0.029) |
| 고용안정 관련 변수 | 직전 3개년 고용증가율 | 0.003<br>(0.005) | 0.013***<br>(0.003) |
| | 구인율 | 0.043<br>(0.117) | 0.188***<br>(0.062) |
| | 이직률 | -0.008<br>(0.042) | -0.010<br>(0.015) |
| | 상용직 비중 | 0.026<br>(0.017) | 0.027***<br>(0.009) |
| | 공공일자리 비중 | -0.297***<br>(0.084) | 0.029<br>(0.027) |
| 주거안정 관련 변수 | 아파트 평균매매가격(로그값) | -0.026<br>(0.078) | -0.110**<br>(0.044) |
| | 아파트 평균전세가격(로그값) | 0.076<br>(0.143) | 0.043<br>(0.041) |
| 기타 통제변수 | 재정자립도 | 0.015<br>(0.013) | -0.023**<br>(0.009) |
| | 사회복지예산비율 | -0.009<br>(0.013) | -0.037***<br>(0.009) |
| | 지역내총생산(로그값) | 14.187<br>(6.577) | 5.551*<br>(3.359) |
| 지역 수 | | 65 | 159 |
| 관측점 | | 585 | 1,258 |
| F-test | | 3.12*** | 16.12*** |

주: 1) 괄호 안의 값은 표준오차 의미
2) 고용증가율(직전 3개년)을 제외한 모든 설명변수는 종속변수의 전년도 값을 사용
자료: 시군구 단위의 통계청 자료를 활용해 연구진 직접 분석.

## 3. 분석결과의 종합

본 장에서는 전국 시군구 단위의 패널자료에 기초한 분석을 통해서 고용과 주거상태의 불안정성이 합계출산율, 조출생률, 청년인구 순유입률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하였다.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저출생 관련 지표의 지역 간 격차와 시계열 추세를 비교하였고 주요 지표 간의 상관관계를 점검하였다. 이어서 통계청 인구동향조사(합계출산율), 주민등록연앙인구(조출생률) 등의 통계를 활용해 연도별 패널자료를 구축하고 지역 간 출생지표의 격차를 설명하는 고정효과모형을 추정하였다.

본 장의 분석결과는 앞서 2장에서 이론적으로 논의했던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시스템적인 인과순환관계를 모형화하지는 못한다. 여기서 제시된 분석결과는 변수 양자 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을 검정할 뿐이다. 그럼에도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구분해 추정된 합계출산율, 조출생률, 청년인구 순유입률의 분석결과는 이론적인 가정과 일치하는 방향의 인과적 추론을 시사**하고 있다. 특히 수도권에서는 일자리의 불안정성보다는 주택가격의 상승으로 인한 주거환경의 불안정이 출산율을 제약하는 주된 요인으로 작동한다는 실증결과는 2장에서 구축한 이론적 논리를 그대로 뒷받침하고 있다. 반면, 비수도권의 경우는 주거불안정과 관련된 효과들이 일관되지 못했던 반면, 고용불안정이나 고용증가가 합계출산율을 낮추고 청년인구의 순유출을 부추겨 결과적으로 실질적인 출생아 수(조출생률)의 하락에도 기여하게 된다는 점이 각각의 분석모형을 통해 실증되었다. 이 같은 인과관계를 구조적으로 모형화하기 위해서는 시스템 다이내믹스 같은 대안적인 방법론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나, 본 장의 분석결과는 그 자체로 균형발전과 저출생의 관계에 대한 시사점을 풍부하게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CHAPTER 4

# 청년의 출산의향과 주거·고용 안정의 관계


1. 개인 수준 분석의 필요성 ····· 67
2. 청년의 기대 자녀 수를 설명하는 분석모형 ····· 68
3. 개인 수준 회귀분석의 주요 결과 ····· 73
4. 소결 및 향후 연구방향 ····· 77

# 04 청년의 출산의향과 주거·고용 안정의 관계

본 장은 주거·고용 불안정이 출산을 제약한다는 2장의 이론적 가설과 3장의 실증모형 틀을 계승하는 가운데, 거시적인 변수가 개인 수준의 출산의향에 미치는 인과경로를 추가적으로 탐구하고자 개인·지역 수준 변수를 교차하는 분석모형을 설계하였다. 분석에는 청년패널조사 자료(YP2007)의 14차 표본인 2020년도 기준자료가 활용되었다. 오차항을 시군구 단위에서 군집화한 회귀분석모형을 통해 개인 수준과 지역 수준의 주거·고용 관련 변수가 청년 응답자의 향후 출산계획(희망하는 총 자녀의 수)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였다. 분석결과, 개인·가구 수준에서는 주거비 부담 비중, 정규직 여부 등이 출산의향에 영향을 미쳤다. 반면, 지역 수준에서는 아파트 평균거래가격, 고용증가율, 이직률, 상용직 비중 등의 변수가 출산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1. 개인 수준 분석의 필요성

앞 장의 분석은 고정효과모형을 통해 지역별 합계출산율과 조출생률의 증감을 설명하는 주거안정성과 고용안정성의 효과를 실증하였다. 이 같은 결과는 횡단면자료에서 지역별 차이(between-variation)를 설명한 것이 아니라, 종단자료에서 지역 내 차이(within-variation)에 기초한 결과이기 때문에 기존 연구보다 더욱 확정적인 인과적 추론을 이끌어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시적인 통계치에 기초한 분석만으로는 인과경로의 종합적인 그림을 완성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어디까지나 출산은 미시적인 의사결정에 따른 행위다. 따라서 지역 수준 변수보다는 개인이나 가구 수준의 특성이 우선적인 설명력을 갖기 마련이다. 3장의 분석은 부동산가격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거나, 고용 수준

이 급격히 축소되고 있는 지역들에서 출산율의 감소도 연쇄되고 있으리라는 자료상의 추세를 엄격한 통계조건에서 확증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효과가 과연 모든 청년가구에게 보편적으로 파급될 것인지, 혹은 개인이나 가구 수준의 특성에 따라 조절될 것인지에 대해 3장의 분석은 시사하는 바가 없다. 더 나아가, 거시지표 간의 상관관계가 실제로 미시적 단위에서 어떠한 메커니즘을 통해 저출산의 현상으로 귀결되는지 해석하기 위해서는 개인 수준 자료에 기초한 추가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장에서는 청년패널조사 자료(YP2007)에 포함된 청년 응답자의 출산의향(향후 희망하는 추가적인 자녀의 숫자) 조사결과를 종속변수로 삼는 회귀분석을 추가적으로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3장에서 그 효과가 이미 실증되었던 지역 수준의 고용증가율이나 아파트 평균매매가격 로그값, 이직률 등의 변수는 개인 수준의 출산의향을 설명함에 있어서도 여전히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를 갖는다고 확인되었다. 더불어, 거시자료에서 확인하기 어려웠던 개별청년의 정규직 여부나 가구 총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 비중의 효과가 출산의향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변수로 작용함을 관찰할 수 있었다.

## 2. 청년의 기대 자녀 수를 설명하는 분석모형

### 1) 분석자료 및 변수 구성

본 장의 분석은 출산의향에 대한 주거·고용 안정성의 영향을 탐구하기 위해 한국고용정보원의 청년패널조사(Youth Panel Survey) 자료(YP2007)를 활용한다. 2007년에 10,206명의 청년집단을 표집해 조사를 시작한 청년패널조사 자료는 2020년까지 14차에 걸친 추적조사 결과를 축적하고 있다. 2007년 초기년도 기준으로는 만 15세에서 29세까지의 청년층이 조사에 참여했으나, 조사가 지속된 현재는 20대부터 40대 초반까지의 연령대를 포괄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14차까지의 패널자료 전체를 활용하지 않고 2020년도 기준자료인 14차 조사자료만을 분석에 활용하기로 한다.

**(종속변수)** 본 장의 분석모형에서 공통된 종속변수는 출산의향이다. 청년패널조사 자료(YP2007)는 다양한 문항을 통해 청년층의 출산의향을 조사하고 있다. 향후 출산의향이 있는지 여부부터 시작해, 1년 이내 출산의향, 2년 이내 출산의향, 2년 이후 출산의향 등의 시차를 구분해 출산의향을 묻고 있고 출산의향이 없거나 2년 이후로 미루는 사유를 묻기도 한다. 그러나 **본 장에서 종속변수로서 활용하는 지표는 향후 희망하는 출산자녀의 숫자**이다. 구체적으로 조사지에서의 질문은 '_____님께서는 현재 생활과 앞으로의 계획을 모두 고려하여, 자녀는 모두 몇 명 두실 생각이십니까? (자녀가 있으신 분은 현재 자녀 수를 포함하여 응답해 주십시오.'라 제시되어 있다. 이를 통해 연속형 변수로 집계된 기대희망 자녀 숫자에서 현재 자녀가 있는 경우 그 자녀 수를 감한 값을 종속변수로 활용하였다. 출산의향 변수가 아니라 희망하는 자녀 숫자를 종속변수로 사용한 까닭은 전자의 경우 사회적인 규범을 따라 막연하게 응답하는 경우가 섞일 수 있다고 가정했기 때문이다. 그보다는 구체적인 희망 자녀의 숫자를 묻는 질문이 좀 더 현실적인 고려가 반영된 출산의향을 조사 가능할 것이라 기대하였다. 또한 현재 자녀가 있는 응답자의 여건을 반영하기 용이하다는 점도 고려하였다.

**(개인 수준 통제변수)** 개인 수준의 통제변수에는 **나이, 결혼 여부, 현재 자녀 수, 가구 총소득, 주당 총근로시간, 최종학력 수준** 등이 포함되었다. 나이의 제곱항이나 결혼 기간을 포함하는 것도 고려했으나 다중공선성의 우려가 높은 수준으로 존재해 분석모형에 포함하지는 않았다. 가구 총소득 변수는 가구 구성원의 근로소득, 금융소득, 부동산소득, 기타소득을 모두 합한 연간 소득변수로서 만원을 단위로 하는 연속형 변수 형태로 모형에 포함되었다. 다음으로 학력 수준에 대해 청년패널조사는 응답자의 최종학력을 고등학교 졸업 미만, 고등학교 졸업, 전문대 졸업, 대학 졸업, 대학원 이상의 다섯 가지 범주로 조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교 졸업 이하를 준거집단으로 설정했고, 전문대 졸업, 대학 졸업, 대학원 이상의 학력을 각각의 더미변수로 코딩해 통제하였다.

**(고용안정 관련 변수)** 청년패널조사 자료(YP2007)에서 활용할 수 있는 고용안정성과 관련된 변수로서 정규직 여부, 근속년수, 전일제 근로 여부, 이직준비 상태 여부, 실업 여부 등의 다섯 가지 변수를 모형에 포함시켰다. 이 중에서 정규직 여부와 한 직장에서의 근속년수는 각각 고용의 안전성(security)과 안정성(stability)을 대변하는 지표라 해석될 수 있다. 이를 보완하는 추가적인 지표로서 시간제 근로를 0으로, 전일제 근로를 1로 코딩하는 '전일제 근로 여부' 변수를 모형에 함께 포함시켰다. 다음으로 '이직준비상태 여부'는 현재 이직을 준비하고 있는지를 묻는 조사지 질문에 대해 그렇다고 응답한 경우를 1로 코딩한 이항변수이다. 청년패널조사에서는 추가적으로 이직을 준비한 지 몇 개월이나 되었는지를 묻고 있으나 해당 문항을 분석에서 활용하지는 않았다. 마지막으로 '실업 여부'는 현재 미취업 상태이며 구직 중인지를 묻는 질문을 교차해 실업인 경우를 1로 코딩하는 이항변수로 생성하였다.

**(주거안정 관련 변수)** 주거상태와 관련해서는 **주거비 부담 비중, 자가소유 여부, 동일주택 거주 기간, 아파트 거주 여부** 등의 변수를 모형에 포함하였다. 주거비 부담 비중의 경우, 청년패널조사에서 제공하는 가구 총소득 변수와 주거비 관련 지출액 변수를 활용해 가구 총소득 대비 주거비 비중을 계산하였다. 다음으로 청년패널조사에서는 현재 살고 있는 집의 점유형태를 자가, 전세, 월세 등의 보기로 조사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자가라 응답한 경우를 1로 코딩하고 그 밖의 경우를 0으로 코딩하는 이항변수를 생성하였다. 동일주택 거주 기간은 현 주택에서의 거주 기간을 월 단위로 묻는 질문을 활용해 연속형 변수로 구성하였다. 마지막으로 청년패널조사에서는 현 거주지가 아파트인지, 단독주택인지, 오피스텔인지 등의 질문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만을 1로 코딩하는 이항변수를 생성하였다.

**(지역 수준 설명변수)** 청년패널조사 자료(YP2007)에서는 응답자의 주거지 기준으로는 광역시·도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으며, 근무지 기준으로만 시군구 정보를 제공한다. 이 때문에 본 연구의 분석에서는 근무지를 기준으로 시군구 단위의 설명변수를 개

인 수준 자료에 매칭하였다. 시군구 단위에서 개인의 근무지와 주거지가 불일치하는 상황은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거지와 근무지의 시군구 소재지 정보를 모두 확보할 수 없었다는 점은 분석적인 한계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가설하는 고용안정성의 효과는 근무지 기준의 지역정보를 통해 추정하는 것이 더 적절하지만, 주거안정성의 효과는 거주지 기준의 지역정보를 활용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청년패널조사를 활용해 개인·지역 수준의 분석을 시도한 송창현, 임업(2023)은 근무지 기준의 시군구 정보를 도시통근권 단위로 통합해 분석에 적용하기도 했다. 이 같은 방법은 직주 불일치의 문제를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겠으나, 분석 대상이 되는 지역의 다양성을 큰 폭으로 제약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채택하지 않았다.

시군구 단위에서의 설명변수는 앞 장에서 분석한 지역 수준 고정효과모형의 설명변수를 대부분 포함시켰다. 먼저 인구 부문의 통제변수로서 **인구밀도, 주민등록인구 수 로그값, 청년인구 비중, 청년인구 순유입률 변수**가 모형에 포함되었다. 다음으로 지역 수준의 고용안정 관련 변수로서 **직전 3개년 고용증가율, 이직률, 상용직 비중, 유효구인배율** 등의 변수가 포함되었다. 이 중에서 유효구인배율은 앞 장의 분석에서는 포함되지 않았던 변수다. 횡단면 자료를 기준으로 하는 본 장의 분석에서는 시군구 단위의 실업률을 추정하는 것이 가능했기 때문에 구인율을 실업률로 나누는 유효구인배율을 계산해 지역노동시장의 구인·구직 수급 여건을 더 정확하게 포착하고자 했다. 유효구인배율이 1의 값을 넘으면 구직보다 구인이 많다는 의미를 갖게 되며, 1의 값에 미치지 못하면 일자리를 찾는 사람이 비어 있는 일자리에 비해 많다는 의미를 갖는다.

마지막으로 시군구 단위의 주거안정 관련 변수는 **로그값을 취한 아파트 평균매매가격**만이 포함되었다. 앞 장의 분석에서 함께 포함되었던 아파트 평균전세가격 역시 고려되었으나 다중공선성을 진단하기 위한 분산팽창인수(Variance Inflation Factor: VIF, 이하 VIF)분석에서 매매가격과 전세가격 간의 높은 상관관계가 관찰되어 매매가격만을 분석모형에 포함시켰다. 이어지는 회귀분석에서 각 설명변수는 다중공선성(Multicollnearity)을 판별하는 일반적인 기준인 10의 값에 미치지 않는 VIF 값을 기록했다. 후술할 <표 4-1>의 분석결과에서 모든 설명변수의 평균적인 VIF 값은 1.98이다.

## 2) 분석모형

본 연구의 자료는 개인 수준 속성정보와 지역 수준 속성정보가 섞여 있는 다층적 구조(nested structure)를 갖고 있다. 이 같은 구조의 모형을 일반적인 개인 수준 회귀식으로 추정할 경우, 회귀분석의 기본 가정의 하나인 독립성(independence)이 위배됨에 따라 계수의 표준오차 추정이 왜곡될 수 있다. 다시 말해, 지역 수준에서 관측되기 어려운 정보가 모형에 적절히 포함되지 못하는 경우 개인 수준 오차항에 포함되는데, 이 같은 속성은 동일지역에 소속되어 있는 개인들이 공유하는 속성이기 때문에 개인 수준의 선형분석에서 개별 오차항이 집단 내 상관관계를 갖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회귀분석에서 독립성 가정이 위배되는 경우 계수의 분산값이 과다하게 추정됨으로써 표준오차와 t 값의 과대추정을 야기할 수 있다.

잔차항의 상관관계로 인한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상관성이 존재하는 집합 단위로 군집화된 강건표준오차(clustered robust standard errors)**를 추정하고 이에 근거해 변수효과의 통계적 유의도를 해석하는 것이다. 이는 시계열이나 지역 수준을 포함하는 자료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군집 간의 자기상관성을 보정하기 위해 각 분야의 실증문헌에서 보편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방법이다. Cameron and Miller(2015)는 개인-마을, 개인-지역, 개인-산업 등과 같은 다양한 다층구조 설정에서 군집화된 표준오차의 적용을 통해 오차항의 자기상관성 문제가 의미 있게 해소될 수 있음을 보여준 바 있다.

위계화된 속성의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 널리 사용되는 접근은 다층모형 혹은 위계적 선형모형(Hierarchical Linear Model; HLM)이다(Raudenbush and Bryk 2001). 다층모형은 집단 내(개인) 모형과 집단 간(지역) 모형을 별개로 명세화하고 오차항을 수준별로 구분함으로써 잔차항의 집단 내 상관관계로 인한 통계적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소할 수 있다. 단, 다층모형이 효율적으로 추정되려면 몇 가지 조건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특히 각 지역에 소속된 개체들이 지역 특성을 어느 정도 대표할 수 있을 만큼의 규모와 구성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따른다. 본 장에서 분석하는 청년패널조사 자료

(YP2007)의 경우 14차 조사자료의 전체 표본인 9,539인 중에서 시군구 소재지 정보 등의 핵심정보가 없는 표본을 제외하면 유효표본 숫자가 6,142개뿐이다. 따라서 213개에 달하는 소속 시군구별로 표본을 배정하면 인구과소지역의 경우 10인이 채 되지 않는 소수의 표본만이 할당된다. 이 때문에 다층모형을 실행하더라도 지역에 소속된 개체값들에 기초해 추정되는 지역별 종속변수값이 저조한 신뢰도(reliability)를 기록할 수밖에 없었다. 이 같은 구조에서 다층모형을 실행하는 것은 오히려 원자료의 속성을 왜곡할 수 있는 무리수라 판단되기 때문에, 본 장의 분석에서는 **일반적인 회귀분석(OLS)에 시군구 단위로 군집화된 표준오차를 추정하는 것으로 자료의 위계적 속성을 보정**하기로 결정하였다.

## 3. 개인 수준 회귀분석의 주요 결과

먼저 <표 4-1>에서는 지역 수준의 변수를 포함시키지 않은 채, 개인 수준의 변수만을 통제한 회귀분석결과를 보고하였다. 다만, 전술한 바와 같이 215개 시군구 지역 소속에 대해 군집화된 표준오차를 적용하였다.

개인 수준의 고용 관련 변수에서는 정규직 여부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효과를 기록하였다. 즉, 제반조건을 통제한 조건에서 **정규직 근로자는 비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더 많은 자녀출산을 희망**했다. 반면, 고용안정을 대변하는 또 다른 지표인 근속년수는 그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고, 전일제 근로 여부의 경우는 오히려 자녀 희망숫자와 강한 부(-)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전일제 근로자의 기대출산 자녀 수가 적다는 것은 자녀양육과 출산에 할애할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한 여건을 반영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시간제 근로자의 다수가 여성 근로자로 구성되어 있는 성별 차이를 반영한 결과일 수도 있다. 비슷하게 청년패널조사를 분석했던 김영아, 곽은혜, 김근태(2022)에서도 전일제 근로자보다 시간제 근로자의 결혼의향이 통계적으로 의미 있게 높다는 결과가 도출된 바 있다.

개인 수준의 주거안정 관련 변수에서는 가구 총소득에서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신뢰수준 95% 구간에서 유의한 부(-)의 효과를 기록했다. 따라서 **주거비 부담이 높을수록 무자녀 가구의 출산의향 혹은 추가적인 출산계획에 제약이 따른다**는 본 연구의 가설이 확인되었다. 반면, 자가점유 여부는 유의도 수준이 높지는 않았으나 희망자녀 숫자와 부정적으로 상관되었고, 주거안정과 관련된 또 다른 변수인 동일주택 거주 기간 역시 희망자녀 숫자를 낮추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는 첫째 출산이 집중되는 20대 후반에서 30대 중반까지의 청년집단 다수가 자가보다는 전세·월세 형태의 주거형태를 갖고 있는 점에서 기인한 결과라 파악된다. 반면, 청년패널조사 표본에서 동일주택에 장기간 거주하고 있는 자가보유자는 이미 연령대가 높거나 양육하고 있는 자녀의 수가 많아 추가적인 출산계획이 없는 경우가 많았다.

**표 4-1 | 희망하는 자녀 숫자에 대한 개인 수준 영향요인의 회귀분석결과**

| 변수명 | | 계수값 | 강건표준오차 | p-value |
|---|---|---|---|---|
| 개인 수준 통제변수 | 여성 여부 | -0.036 * | 0.019 | 0.065 |
| | 나이 | -0.003 | 0.002 | 0.171 |
| | 결혼 여부 | 0.542 *** | 0.035 | 0.000 |
| | 현재 자녀 수 | -0.311 *** | 0.022 | 0.000 |
| | 가구 총소득 | -0.000 | 0.000 | 0.171 |
| | 주당 총근로시간 | 0.005 *** | 0.002 | 0.004 |
| | 전문대학 졸업 여부 | 0.050 * | 0.029 | 0.086 |
| | 대학 졸업 여부 | 0.087 *** | 0.026 | 0.001 |
| | 대학원 이상 학력 | 0.046 | 0.052 | 0.375 |
| 개인 수준 고용안정 관련 변수 | 정규직 여부 | 0.126 *** | 0.027 | 0.000 |
| | 근속년수 | -0.002 | 0.003 | 0.427 |
| | 전일제 근로 여부 | -0.138 *** | 0.052 | 0.009 |
| | 이직준비상태 여부 | 0.062 | 0.041 | 0.133 |
| | 실업상태 여부 | 0.037 | 0.162 | 0.818 |
| 개인 수준 주거안정 관련 변수 | 가구 총소득 대비 주거비 비중 | -0.014 ** | 0.007 | 0.033 |
| | 자가소유 여부 | -0.041 * | 0.023 | 0.071 |
| | 동일주택 거주 기간(월) | -0.0003 ** | 0.0001 | 0.024 |
| | 아파트 거주 여부 | -0.002 | 0.022 | 0.930 |
| 상수항 | | 0.218 | 0.092 | 0.019 |
| 표본 수 | | 4,739 | | |
| R2 | | 0.099 | | |
| F-statistic | | 25.25*** | | |

주: 1) * P-value 〈 10%, ** P-value 〈 5%, *** P-value 〈 1%
2) 추정치의 표준오차는 시군구 단위에서의 군집표준오차(clustered standard errors)로 계산되었음.
자료: 청년패널조사 자료(YP2007) 2020년 조사자료를 활용해 연구진 직접 분석.

이어서 <표 4-2>는 개인 수준의 모형명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지역 수준의 변수를 추가적으로 회귀식에 포함한 분석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우선, 지역 수준 변수를 포함시켰을 때에도 개인 수준 변수의 효과는 그 부호의 방향이나 통계적 유의도에서 큰 변화가 없었다.

시군구 수준의 고용 관련 변수들은 적어도 신뢰수준 90% 구간에서는 모두 통계적인 유의도를 확보하고 있으나 희망 자녀 수에 대한 부호의 방향은 상이했다. 일단 직전 3개년 고용증가율은 정(+)의 방향으로, 이직률은 부(-)의 방향으로 출산의향과 상관관계를 이루고 있다. 이는 지역 수준 고정효과모형으로 추정된 앞 장의 분석결과와도 일치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표 4-1>의 모형에서 양 변수는 모두 신뢰수준 95%에서 통계적인 유의도를 획득하였다. 한편, 3장의 지역 수준 분석에서 효과가 유의하지 못했던 상용직 비중은 개인 수준의 출산의향을 설명함에 있어서는 신뢰수준 90% 구간에서 유의한 정(+)의 효과를 기록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주거안정과 관련한 지역 수준 변수로서 **아파트 평균매매가격의 로그값은 기대된 바와 같이 뚜렷한 유의도를 가진 부(-)의 효과를 기록**했다. 즉, **높은 부동산가격은 앞 장의 분석과 마찬가지로 청년들의 출산의향을 제약**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이 다시금 확인되었다. 이 같은 결과는 Dettling, Kearney(2014)를 비롯한 해외 연구의 실증결과와도 흐름을 같이 한다. 미국을 사례로 한 Dettling and Kearney(2014)의 분석에서는 주택가격이 1만 달러 증가할 때 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2.1%,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자는 0.4%의 출산율 감소가 유발된다고 추정한 바 있다.[2] Lovenheim and Mumford(2013)의 분석에서는 자가소유자의 주택가격이 10만 달러 증가할 때마다 출산확률은 16%에서 최대 18%까지 증가한다고 관찰되었다. 국내 맥락에서도 부동산가격 상승이 출산율에 미치는 효과가 자가소유 여부에 따라 조절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연구 역시 자가소유 여부와 아파트 매매가격 간의 교차항(interaction term)을 검정해보았으나 통계적 유의도가 매우 낮아 최종적인 모형에서 선택되지 않았다.

2) 부동산가격 상승이 출산율 하락에 미치는 효과가 주택소유자에게 더 크게 전가되었다는 점은 다소 의아한 결과다.

**표 4-2 | 희망하는 자녀 숫자에 대한 개인·지역 수준 영향요인의 회귀분석결과**

| 변수명 | | 계수값 | 강건표준오차 | p-value |
|---|---|---|---|---|
| 개인 수준 통제변수 | 여성 여부 | -0.033 * | 0.020 | 0.094 |
| | 나이 | -0.003 | 0.002 | 0.158 |
| | 결혼 여부 | 0.540 *** | 0.035 | 0.000 |
| | 현재 자녀 수 | -0.310 *** | 0.022 | 0.000 |
| | 가구 총소득 | -0.000 | 0.000 | 0.171 |
| | 주당 총근로시간 | 0.005 *** | 0.002 | 0.003 |
| | 전문대학 졸업 여부 | 0.050 * | 0.028 | 0.080 |
| | 대학 졸업 여부 | 0.088 *** | 0.026 | 0.001 |
| | 대학원 이상 학력 | 0.046 | 0.053 | 0.384 |
| 개인 수준 고용안정 관련 변수 | 정규직 여부 | 0.127 *** | 0.028 | 0.000 |
| | 근속년수 | -0.002 | 0.003 | 0.487 |
| | 전일제 근로 여부 | -0.139 *** | 0.052 | 0.008 |
| | 이직준비상태 여부 | 0.058 | 0.041 | 0.162 |
| | 실업상태 여부 | 0.068 | 0.175 | 0.696 |
| 개인 수준 주거안정 관련 변수 | 가구 총소득 대비 주거비 비중 | -0.014 ** | 0.007 | 0.034 |
| | 자가소유 여부 | -0.042 * | 0.023 | 0.070 |
| | 동일주택 거주 기간(월) | -0.0003 ** | 0.0001 | 0.036 |
| | 아파트 거주 여부 | -0.002 | 0.023 | 0.937 |
| 지역 수준 통제변수 | 인구밀도 | -0.025 | 0.027 | 0.347 |
| | 인구수 로그값 | 0.512 | 0.383 | 0.182 |
| | 청년 비중 | 0.002 | 0.005 | 0.710 |
| | 청년 순유입률 | -0.007 | 0.010 | 0.440 |
| 지역 수준 고용안정 관련 변수 | 직전 3개년 고용증가율 | 0.002 ** | 0.001 | 0.041 |
| | 이직률 | -0.013 ** | 0.006 | 0.026 |
| | 상용직 비중 | 0.005 * | 0.002 | 0.063 |
| | 유효구인배율 | -0.097 * | 0.050 | 0.054 |
| 아파트 평균매매가격 로그값 | | -0.045 ** | 0.022 | 0.041 |
| 상수항 | | -0.751 | 0.839 | 0.371 |
| 표본 수 | | 4,737 | | |
| R2 | | 0.103 | | |
| F-statistic | | 21.30*** | | |

주: 1) * P-value 〈 10%, ** P-value 〈 5%, *** P-value 〈 1%

2) 추정치의 표준오차는 시군구 단위에서의 군집표준오차(clustered standard errors)로 계산되었음.

자료: 청년패널조사 자료(YP2007) 2020년 조사자료를 활용해 연구진 직접 분석.

## 4. 소결 및 향후 연구방향

본 장은 개인 수준과 지역 수준 요인을 함께 설명하는 회귀분석을 통해 주거·고용 안정성과 출산의향의 관계를 탐구하였다. 분석에는 청년패널조사 자료(YP2007)의 2020년 자료가 사용되었으며 회귀분석을 통해 '희망하는 자녀 숫자'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수준과 지역 수준의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는 앞서 3장에서 제시된 지역 수준 실증분석의 결과와 큰 흐름을 같이 하고 있다. 3장의 지역 수준 고정효과 모형에서 통계적 유의성이 확인되었던 고용증가율, 이직률, 아파트 평균매매가격 등의 주거·고용 안정 관련 변수들은 본 장의 분석에서도 동일한 부호 방향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를 기록하였다. 더 나아가, 본 장의 분석은 정규직 여부로 대표되는 고용안정 관련 변수나 주거비 부담 비중으로 대표되었던 주거안정 관련 변수가 개인 수준에서 출산의향을 제약하는 요소로서 작용한다는 추가적인 인과경로를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3장과 4장의 실증분석결과를 종합할 경우, 거시적인 변수가 미시적인 출산행위에 미치는 인과경로를 좀 더 입체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지역 수준의 부동산가격 상승으로 인한 주거불안정은 청년가구의 출산의향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지역의 합계출산율 저하 혹은 조출생률 저하에 기여하게 된다는 점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다. 또한 본 장의 분석은 고용증가율이나 이직률이 출산에 미치는 효과가 청년 개인의 출산의향을 매개로 구현될 수 있다는 점을 반복해서 확인하고 있다. 한편, 지역 수준에서는 통계적 유의도가 높지 못했던 상용직 비중 변수는 개인 수준에서 정규직 여부 변수를 통해 더 직접적으로 인과관계를 확인할 때 통계적 유의도를 획득하게 된다는 점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처럼 4장의 분석은 출산행위에 대한 청년 개인의 미시적인 의향을 보다 직접적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여전히 주거안정이나 고용안정이 어떠한 경제적 혹은 사회심리적 과정을 통해 청년들의 출산의향을 제약하게 되는지 설명하지는 못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본론의 마지막 장인 5장에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청년 18인을 대상으로 하는 초점집단인터뷰를 수행하였다.

CHAPTER 5

# 심층면접조사를 통한 저출산의 영향요인 탐구


1. 저출산 관련 정성적 연구문헌 고찰 ····· 81
2. 심층면접조사의 추진방법 및 조사내용 ····· 84
3. 수도권 청년 대상 인터뷰 결과 ····· 87
4. 비수도권 청년가구 대상 인터뷰 결과 ····· 96
5. 심층 인터뷰 결과의 종합 및 시사점 ····· 109

# 05 심층면접조사를 통한 저출산의 영향요인 탐구

본 장에서는 앞서 수행된 정량적 분석의 결과에 대한 해석을 심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유형별 청년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심층면접조사(Focus Group Interview: FGI)를 진행하였다. 본 자료에서는 출산의향이나 출산이행의 요인·제약조건 등을 조사했던 기존 정성연구의 주요 결과와 방법론을 비교·고찰하였다. 이어서 기존 연구의 방법론에 대한 검토 결과에 기초해 본 연구의 심층면접조사 추진방안 및 세부 조사내용을 구상하였다.

## 1. 저출산 관련 정성적 연구문헌 고찰

앞 장까지의 분석은 정량적인 분석방법에 기초해 지역 혹은 개인 수준에서 저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요소를 탐구하였다. 그러나 출산의향이라든지 고용·주거 측면의 불안정성이라는 주제는 그 자체로 다분히 심리적이며 주관적인 속성을 갖고 있어 객관적인 지표로 정량화하기 어려운 특징이 있다. 예를 들어, 본 연구의 정량적인 분석에서는 주거비용이 상승하거나 지역경기가 냉각되는 상황이 출산과 관련된 변수에 어떻게 상관되는지를 관찰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같은 환경의 변화 속에서 청년가구의 자기인식이나 결혼·자녀에 대한 생각이 실제로 어떻게 변화되는지 관찰하기 위해서는 실제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정성적인 연구방법의 보완이 필요하다. 이 같은 고려에서 본 장에서는 지역별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심층면접조사를 수행하였다.

본격적인 연구진행에 앞서 심층면접조사를 통해 출산의향이나 무자녀의향 요인을 조사한 기존 연구의 동향을 살펴보았다. 대표적으로, 이수현(2012)은 기혼여성의 무자녀 결정에 관한 시기와 요인을 연구하기 위해 기혼여성 21명을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을 수행하였다(이수현 2012, 43). 동 연구는 질적 연구방법론을 택한 이유로 "무자녀의 결정은 일상적 경험에 부여하는 자기인식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증주의적 차원에서 진행되는 조작적 정의나 통계적 수치로 해결될 성향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점을 밝혔다(이수현 2012, 51). 심층면접 대상은 "혼인 기간, 연령, 무자녀 지향성, 무자녀 결정의 확정성 정도를 고려해 '혼인 기간 3년[3] 이상의 무자녀 여성'으로 한정"하였다(이수현 2012, 51). 주요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첫째로 무자녀 결정 시기는 불임요인이 없는 경우 결혼 전·후로 구분되었고 불임요인이 있는 경우는 불임치료 전·후로 나누어졌다(이수현 2012, 78). 또한 비출산을 결정하게 된 요인은 '개인의 내생적 성향', '자신에게 충실한 삶의 추구', '주위의 영향', '양육자원의 부족', '높은 부모됨의 책무성', '인위적 임신에 대한 부담감'이라는 6개의 영역으로 범주화하였다(이수현 2012, 78).

비슷하게, 이민아(2012)는 현재 자녀계획이 없는 기혼남녀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조사를 수행하였다. 동 연구는 2011년 기준 만 29세에서 45세 사이의 기혼 남녀 11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수행했는데, "무자녀 계획은 단순히 삶을 즐기거나 자아실현을 위한 개인주의적 가치관의 발현이 아니라 한국의 양육현실과 가족주의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문제"라는 해석이 주된 결론이었다(이민아, 2012, 571). 연구대상자는 "면접에 참여한 사람들의 소개를 통해 대상자를 다시 소개받는 눈덩이표집방법을 이용해 모집(이민아 2012, 577)" 하였다. 동 연구는 심층면접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아이 갖지 않기에 대한 결정과정", "한국사회에서 아이 키우기", "자아상, 독립적인 개인으로서의 욕망: 개인화? ", "가족의 의미와 부모의 책임성: 가족주의의 역설"을 탐색·해석하였다(이민아 2012).

3) 이수현(2012)은 첫째 자녀 출산의 90% 이상이 동거 3년 이내에 이뤄지는 통계청(2010)의 「2009 사회조사」를 인용함

조성호, 문승현(2021)은 출산의향이 없는 19명의 기혼남녀를 대상으로 무자녀 계획을 선택하게 된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심층조사면접을 진행하였다. 심층조사면접의 틀은 <표 5-1>에서 보는 바와 같이 6개 조사항목과 항목별 조사목적을 기본으로 하였다. 또한 심층면접조사 대상을 '자연임신 가능 여부'와 '무자녀 선택 이유' 그리고 '무자녀 유형(비자발/자발-사회경제/자발-가치관)'으로 분류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분류한 조사 대상별(유형별)로 심층면접조사 항목을 별도로 구성하여 유형별 조사·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5-1 | 조성호, 이지나, 김근태(2021)의 심층면접조사 질의사항 개요**

| 조사항목 | | 조사목적 |
|---|---|---|
| 1 | 유소년기 경험과 가족관계 | • 원가정에서의 경험과 성장과정이 무자녀 결정에 미치는 영향 |
| 2 | 무자녀 선택의 자발성 여부 | • 출산의향이 처음으로 형성된 시기부터 현재까지의 변화 양상 파악 |
| 3 | 평소 아이에 대한 생각 | • 아이의 유무에 따른 일상의 변화에 대한 생각 및 간접경험 등이 무자녀 선택에 미치는 연관성 파악<br>• 무자녀 선택에 대한 주변의 반응 조사 |
| 4 | 일과 부부생활에 대한 조사 | • 일터에서 무자녀라는 이유로 편견이나 불이익을 경험한 유무 조사<br>• 배우자와의 소통 수준과 관계의 만족도 조사 |
| 5 | 노후와 죽음에 대한 생각 | • 노후나 죽음에 대한 기대나 걱정 등 조사<br>• 노후나 죽음에 대한 계획 유무와 내용 |
| 6 | 무자녀 유형별 조사 | • 유형별 분석 진행 |

자료: 조성호, 이지나, 김근태(2021, 123)의 내용 재구성.

한편, 조성호, 이지나, 김근태(2021, 191-192)는 심층조사면접의 결과를 동 연구의 실증분석과 연계해 해석하며 정책적 해결과제를 모색하였다. 정책과제는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인해 무자녀를 선택한 부부와 비자발적으로 무자녀를 선택한 부부를 대상으로 하였고, 무자녀 부부를 대상으로 한 조세 관련 혜택과 난임검사 지원체계 확립을 제안하였다(조성호, 이지나, 김근태 2021, 193-207).

## 2. 심층면접조사의 추진방법 및 조사내용

이상 선행연구를 살펴본 결과, 기존 정성연구들은 무자녀 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으로 경제적 여건과 사회문화적 가치관에 초점을 맞췄고, 신체적 불임요인이나 자연임신 가능 여부 등을 고려하였다. 반면 이들 연구에서는 해당가구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맥락적 요인은 크게 고려되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앞 장까지의 실증분석을 통해 검증되었던 바와 같이, 개인·지역 수준의 주거·고용 불안정이 출산의향이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심층조사함으로써 추가적인 정책적 시사점을 발굴하고자 한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저출산 관련 맥락과 영향요인이 크게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 심층면접조사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구분해 진행하였다. 수도권의 경우 서울 시내에서 재직 중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총 10명의 인터뷰가 진행되었다. 비수도권에서는 부산광역시와 창원특례시에서 재직 중인 청년을 대상으로 총 8명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각 지역에서의 인터뷰는 2024년 1월에서 3월 사이에 2개월에 걸쳐 진행되었다.

비수도권 조사 대상 지역으로 부산광역시와 창원특례시를 선정한 것은 3장의 실증분석결과와 연계된 시사점을 도출하기에 유리한 배경조건을 갖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부산광역시는 2023년 3분기 기준으로 합계출산율 0.64명을 기록해 전국 광역시·도 중에서 서울특별시 다음으로 낮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는 지역이다(국제신문 2023.11.29.). 더불어, 2023년 기준 청년인구 순유출 규모가 11,432명으로 집계되고 있어 비수도권 14개 광역시·도 중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기도 했다(아주경제 2024.1.31.). 이처럼 서울 못지 않은 저출산 추세를 나타내는 지역이자 청년인구의 가파른 지역이탈을 겪고 있는 지역이라는 점이 부산광역시를 조사 대상 지역의 하나로 선정한 배경이다.

창원특례시는 비수도권의 대표적인 산업도시로서 2000년대 후반까지는 전국 평균 대비 월등하게 높은 소득 수준과 함께 양호한 출산율을 기록했으나, 2010년대 이후 주력산업의 부침과 청년고용의 감소가 맞물려 저출산 현상의 심화를 경험하고 있다. 창원특례시에서는 출산율의 하락도 두드러졌지만 절대적인 출생아 수의 감소를 의미하는 조출생률의 하락이 더욱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는 청년인구의 순유출이 가중

된 결과라 해석할 수 있다. 2012년 기준 창원특례시의 연간 출생아 수는 11,627명이었으나 2022년에는 5,213명을 기록해 10년 전에 비해 55% 이상이 감소하였다. 같은 기간 합계출산율은 2012년 기준 1.462에서 2022년 기준 0.824를 기록해 약 44% 하락하였다. 이 같은 맥락에서 창원특례시는 구조조정을 겪고 있는 지방 산업도시들의 저출산 현상을 탐구하는 데 적절한 대상 지역이라 판단하였다.

각 권역 내에서 대상자 섭외 시 우선 연령대, 성별, 혼인 여부의 균형 있는 안배를 고려하였다. 출산의향이나 이행 여부 등에 대한 질문을 포함하기 때문에 30대 초반에서 30대 후반의 비중을 높이려 했으나, 20대 후반과 40대 초반도 권역별로 1~2명씩은 포함되도록 섭외하였다. 한편, 고용안정성이 출산의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사하기 위해서 되도록 재직자를 중심으로 섭외하고자 했다. 혼인 여부나 성별에 대해서는 기혼자·미혼자와 남성·여성 중 어느 한 집단에 대상자가 쏠리지 않도록 섭외하였다. 기타 학력조건, 전공계열, 직종, 자가소유 여부 등에 대해서도 대상자 섭외 시 사전조사해 고려하였으나, 잠재적인 인터뷰 희망자 집단을 다수 확보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다양한 조건을 균형 있게 배정하기는 어려웠다.

수도권·비수도권 심층면접조사에 공통적으로 적용되었던 주요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집단 인터뷰에 앞서 개별 면담조사를 통해 소득 수준이나 유산경험 등의 민감한 정보를 수집했으며, 인터뷰 초반에는 가족배경이나 통근시간 등에 대한 가벼운 질문을 진행하였다. 이어서 각 참여자의 출산의향 및 그것에 주요하게 영향을 미친 제반요인에 대해 질의를 진행했다. 다음으로 자신의 가구가 얼마나 안정된 주거환경을 누리고 있는지에 대해 질의한 뒤 그 배경이 되는 주관적·객관적 요인을 조사하였고, 살고 있는 지역의 주거비용이나 정주환경이 주거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질의했다. 또한 주거안정성의 수준이 각자의 출산의향이나 가족계획 실천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고용안정과 관련해서는 직업 만족도, 고용환경, 향후 경력에 대한 전망이나 이직 의사에 대해 질의한 뒤 각자가 체감하는 고용안정성의 수준과 그 근거를 문의하였다. 더 나아가, 고용안정의 수준이 출산의향과 가족계획 실행에 미치는 영향을 질의했다. 지역 전체의 고용안정 수준이나 일자리 전망이 가구의 출산의향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하기도 하였다.

추가적으로 수도권·비수도권 조사집단을 구분해 강조했던 조사내용이 있었다. 먼저 수도권 지역의 경우, 비수도권에서 유소년기를 보내다가 청년기 이후 대학진학 혹은 구직활동을 위해 수도권으로 이주한 참여자가 여럿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수도권 이주가 출산의향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질의했다. 구체적으로, 지방과 수도권의 생활환경 차이나 주거비용의 격차를 논의하기도 하였고 이 같은 차이가 결혼이나 출산이행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각자의 경험을 공유하였다. 더 나아가, 수도권 지역에서는 과밀화된 경쟁환경에서 비롯된 사회적 스트레스의 체감 수준을 질의하였고, 그것이 출산의향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논의하기도 했다. 반면, 비수도권 조사에서는 살고 있는 지역의 일자리 여건과 장기적인 전망이 자신의 가족계획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논의했다. 더불어, 여성 참여자에게는 지방 도시에서 여성의 일자리 탐색 여건 등을 추가적으로 질의하기도 했다.

**표 5-2 | 심층면접조사의 주요 질의내용**

| 조사항목 | | 조사목적 |
|---|---|---|
| 일반사항 | | • 가구소득 수준, 고용상태(정규직 여부 등), 유산경험 등(개별 인터뷰)<br>• 가족배경, 아이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br>• 직업, 통근시간, 가사분업 여건(배우자 및 조부모) |
| 출산의향 | | • 출산의향, 출산의향의 변화 여부 및 계기, 출산 후 삶의 변화<br>• 자녀출산의 현실적인 제약조건<br>• (출산의향이 없다면) 무자녀 계획의 영향요인 |
| 주거안정 | | • 주거안정에 대한 체감 수준 및 근거<br>• 주거비 부담, 자가소유 여부, 지가변동 등 주거안정 관련 요소의 중요도<br>• 살고 있는 지역의 주거안정 수준 및 그 영향요인<br>• 살고 있는 지역의 출산·보육 여건 및 정주환경<br>• 주거안정 수준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 |
| 고용안정 | | • 직업 만족도, 고용환경, 향후 경력에 대한 전망, 이직 의사<br>• 고용안정에 대한 체감 수준 및 근거(정규직 여부 등)<br>• 근무하고 있는 지역의 일자리 전망과 고용안정 수준 및 그 영향요인<br>• 고용안정성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 |
| 지역별 조사 문항 | 수도권 | • 비수도권에서 살다가 수도권으로 이주한 이후 출산의향의 변화, 지방과 수도권의 생활 여건 격차 등(해당 조건 참여자 한정)<br>• 수도권 혹은 서울의 경쟁환경과 인구과밀이 야기하는 사회적 스트레스, 그것이 출산의향 혹은 가족계획에 미치는 영향 등 |
| | 비수도권 | • 살고 있는 지역에서의 일자리 탐색 여건 및 타 지역으로의 이주 의사<br>• 지역산업의 장기적인 전망과 발전 가능성이 출산의향에 미치는 영향<br>• 지방 도시에서의 여성 일자리 문제 등 |

자료: 연구진 작성.

## 3. 수도권 청년 대상 인터뷰 결과

### 1) 인터뷰 응답자 특징

본 소절에서는 수도권 청년 인터뷰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였다. 인터뷰에 참여한 대상자는 총 10명이었으며 5명씩 두 차례에 걸쳐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1차 인터뷰는 강남역 인근 회의실에서 2024년 1월 11일 저녁 7시에 진행했고, 2차 인터뷰는 영등포역 인근 회의실에서 2024년 2월 16일 저녁 7시에 진행했다. 각 인터뷰에 소요된 시간은 약 2시간이었다.

인터뷰 대상자는 인터넷 게시글을 통한 공개모집을 통해 기본적인 정보와 의사를 사전에 확인해 섭외되었다. 집단 인터뷰를 진행하기에 앞서 1:1로 각 응답자를 만나 소득 수준이나 주거 여건, 고용상태, 출산이력 등 민감한 개인정보에 대해 질의·응답하는 별도의 인터뷰를 거쳤으며, 전체 응답자 중 3인에 대해서는 집단 인터뷰가 진행된 이후 추가적인 전화 인터뷰를 진행하기도 했다.

대상자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엄밀한 표집 틀을 적용하기는 어려워지만 성별과 연령대, 혼인 여부에 있어서는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안배하였다. 직종이나 주거 여건 등의 기타 조건에 있어서는 다양한 조건의 참여자를 섭외하고자 하였다. 결과적으로 섭외된 수도권 인터뷰 참여자 중에서는 남성이 4명, 여성이 6명을 차지해 여성 응답자의 비중이 소폭 높았다. 연령대는 20대 후반에 2명의 응답자가 해당하였고(28세), 30대 참여자 8인은 31세부터 39세까지 고르게 섞여 있었다. 전체 참여자 중에서 기혼자는 6인이었는데, 이 중에서 출산가구는 각각 1명과 2명의 자녀를 가진 2인뿐이었다. 자가를 보유한 가구는 모두 4명이었으며, 나머지 응답자 중에는 월세를 내고 있는 응답자 2명과 전세살이를 하고 있는 응답자 4명이 포함되었다.

응답자 10명 중에서 9명은 상용직 고용형태를 유지하고 있었고, 1명만 구직 중인 상태였다. 응답자 9명 모두 직장은 서울에 위치하고 있었으나, 거주지는 6명만이 서울에서 거주했고 나머지 4명은 인천광역시와 경기도(수원시, 고양시)에 거주하고 있었

다. 연평균 가구소득에 대한 응답 결과는 1,500만 원에서 1억 7,000만 원까지 매우 다양한 분포를 이뤘다.

**표 5-3 | 수도권 청년가구 대상 인터뷰의 응답자 특징**

| 이름 | 성별 | 나이 | 혼인 여부 | 자녀 수 | 주거지 | 자가소유 여부 | 가구소득(연) |
|---|---|---|---|---|---|---|---|
| 윤○희 | 여 | 37 | 기혼 | 1명 | 고양 | 자가 | 7,000만 원 |
| 양○정 | 여 | 33 | 기혼 | X | 서울 | 전세 | 1억 원 |
| 김○정 | 여 | 31 | 기혼 | X | 서울 | 자가 | 1억 7,000만 원 |
| 최○정 | 여 | 31 | 기혼 | 2명 | 서울 | 자가 | 1,500만 원 |
| 임○운 | 남 | 38 | 미혼 | X | 인천 | 월세 | 8,000~9,000만 원 |
| 이○규 | 남 | 35 | 기혼 | X | 서울 | 전세 | 1억 5,000만 원 |
| 김○량 | 여 | 28 | 기혼 | X | 서울 | 전세 | 1억 3,500만 원 |
| 김○아 | 여 | 33 | 미혼 | X | 수원 | 자가 | 2,500만 원 |
| 박○철 | 남 | 28 | 미혼 | X | 서울 | 월세 | 3,300만 원(작년) |
| 안○규 | 남 | 39 | 미혼 | X | 수원 | 전세 | 6,000~7,000만 원 |

자료: 연구진 작성.

## 2) 주요 인터뷰 내용

### (1) 출산의향 여부와 맥락

인터뷰 참여자 중에는 강한 무자녀계획을 갖고 있는 경우부터 적극적인 출산계획을 갖고 있는 응답자까지 출산의향에 대해 다양한 입장이 존재했다. 출산의향을 갖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유소년기의 경험을 연관 짓는 응답자가 여럿 있었다. 한 응답자는 형제자매가 많은 집안에서 화목하게 자란 배경 탓에 자신의 자녀에게도 적어도 둘 이상의 동생을 갖게 해주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흥미로운 응답 중에는 출산의향이 전혀 없었다가 최근 출산을 계획하게 되었다는 응답자가 한 명 있었는데, 자신과 배우자가 좋아하는 유튜버가 출산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출산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갖게 되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적극적인 무자녀계획을 갖고 있는 응답자는 총 3명이었다. 이 중에서 여성 응답자 2명은 무자녀를 선호하는 일차적인 이유가 자신이 지향하는 경력과 라이프스타일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이라 밝혔다. 반면, 자녀출산 의사가 전혀 없다고 밝힌 남성 응답자 1인은 자기 삶의 현재 조건이나 전망이 긍정적이지 못한 탓에 결혼이나 출산 자체를 단념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미혼이거나 신혼인 응답자 중에는 출산의향이 불명확하다고 밝힌 경우도 많았다. 이들은 막연하게 출산에 대한 희망이나 선호를 갖고 있기는 하지만, 당장의 현실적인 제약이나 주거·고용 안정을 확보해야 한다는 압박감 탓에 구체적인 가족계획을 그리지 못하겠다고 응답한 경우였다. 출산을 망설이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도 유소년기의 경험을 언급하는 응답자가 두 명 있었다. 한 응답자는 자신의 학창 시절이 행복하지 못했던 탓에 잠재적으로 자녀에게 비슷한 삶을 경험하게 하고 싶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다른 응답자는 넉넉하지 못했던 자신의 유년기를 회상하며, 자신도 자기 자녀에게 만족스러운 환경과 기회를 제공해주지 못할 것 같아 출산을 망설이게 된다고 응답했다.

*결혼과 출산 자체가 힘든 부분도 있겠지만 … 가난을 되물림하고 싶지 않은 심리가 있거든요. (응답자 임O운)*

### (2) 주거불안정과 출산의향

자신의 주거상태가 안정되어 있는지 물었을 때, 인터뷰 대상자의 절반 이상은 여러 이유에서 불안정함을 느낀다고 응답했다. 주택을 임차해 살고 있는 응답자들은 가파르게 오르는 주변 지역의 월세나 보증금 추세에서 불안감을 느낀다고 응답했다. 특히 주거비용의 상승으로 인해 직장에서 먼 곳으로 이사해야 한다거나 치안이 보장되지 않는 불안정한 환경에 거처를 확보해야 하는 등 실제적으로 삶의 안정성이 위협받게 되는 경우를 보고하기도 했다. 주택을 보유해 살고 있는 응답자 중에서도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기 위한 비용이 전체 소득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탓에 생활비용을 확보하는 데 많은 압박감을 느낀다고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다.

종합적인 정주환경 측면에서 자신의 주거환경이 얼마나 안정적인지를 평가해달라고 물었을 때에는 **소아과 등 의료기관에 대한 접근성이 열악**해 자녀 돌봄에 어려움이 많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다만, 응답자들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수도권 내에서도 의료기관 접근성의 지역 간 격차가 크다는 점을 짐작할 수 있었다. 더불어, 인천광역시나 경기도 신도시 등에서 서울 시내로 통근하고 있는 응답자들은 **직주거리가 너무 먼 탓에 가족계획에 마음을 쓸 여유시간 자체가 빈곤**하다는 점을 호소했다. 이 때문에 거주지를 직장 근처로 옮기거나, 현재 살고 있는 곳 주변에서 직장을 잡아야 하는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지만 어느 쪽도 여건이 긍정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의 주거상태를 안정적이라 여기기 어렵다고 진단하기도 했다.

응답자 다수는 **수도권의 높은 주거·생활 비용이 가족계획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데 공감**했다. 1·2차 인터뷰 모두에서 비수도권에서 유소년기를 보내다가 대학진학·취직 등의 사유로 수도권에 이주한 응답자들이 여럿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들 중 일부는 수도권 이주 이후 급격히 증가한 주거비용 탓에 가족계획을 달리 설계하게 되었다고 응답하기도 했다.

*서울에 올라오자마자 집 주거에 나가는 비용이 너무 커서 '돈을 절대로 모을 수가 없는 구조구나'라는 것을 느꼈죠. 그러고 나서부터 '결혼을 준비하는 것조차 쉽지 않겠구나'라고 생각을 했고요. (응답자 김O량)*

*지방에 있었다면 사실 이미 결혼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릴 때 20대 초반에는 좀 일찍 결혼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도 분명 했었거든요. (응답자 박O철)*

*서울의 주거비용은… 가족계획에 절대적인 영향을 줬다고 생각해요. 아예 선택지가 없어지게 만든 거죠. 주거비용을 유지하느라 계속 돈을 벌어야 하고 많은 비용에 매몰되다 보니 안정적으로 삶을 꾸려서 자녀계획을 갖고 하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는 여유가 없었다고 생각해요. (응답자 임O운)*

*서울 바깥에서 살 적에는 당연히 아이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고… 첫 아이를 가졌죠. 그런데 이제 서울에 들어와서 엄청난 주거비용을 부담하다 보니, 처음부터 서울에 살았으면 아이를 안 가졌을 수도 있겠다는 상상을 하게 되요. (응답자 최O정)*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이주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은 **지방에 살고 있는 자신의 지인들이 서울에서 만난 지인들보다 결혼·출산 등의 가족계획을 빨리 이행**하더라는 생각을 밝히기도 했다. 수도권에서는 집을 마련하는 등의 주거·생활 비용이 지방보다 크게 지출되기 때문에 결혼·출산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기간이 평균적으로 5년은 더 소요되는 것 같다는 주장도 있었다.

*지방에서 이 정도 나이에 차를 산다고 하면 서울살이를 하면 5년은 더 걸리게 되는 것 같아요. 지방 친구들이 28살, 30살 정도에 결혼을 할 때 서울살이를 하는 친구들은 서른 중반은 되어야 착실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결혼할 기반을 갖추게 되다 보니… 자녀 출산도 자연스레 힘들어지는 거죠. (응답자 임O윤)*

비금전적인 측면에서 주거환경이 출산의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의했을 때, 일부 응답자는 현재 살고 있는 주거의 생활환경이 장차 아이를 키우기에 부적절해 고민스럽다고 응답했다. 이들은 소득 수준에 맞춰 서울에서 집을 찾다 보면 안전하지 못하거나 낡고 쾌적하지 못한 주거환경을 택해야 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자녀가 없다면 감내할 수 있는 주거환경이지만, 아이를 키우기에는 매우 부적합해 출산계획을 세우기가 어렵다는 응답**이었다. 현재는 직장 때문에 서울로 통근하고 있지만, 경기도 혹은 충청남도까지만 내려가도 훨씬 전용면적이 넓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확보할 수 있어 자녀 양육에 유리할 것 같다는 응답자도 있었다.

*지금은 여자친구와 딱 둘만 들어갈 공간에 살고 있는데… 저는 아이 한 명마다 방 하나씩은 있어야 할 것 같거든요. 욕심일 수 있겠지만 둘을 원하기 때문에 아들·딸이었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그러면 방이 3개가 필요해지는 것인데, 언제 서울에서 이러한 집을 마련해서 아이를 낳을 수 있을지 계산하다 보면 아이를 못 낳겠다는 계산이 되는 거에요. (응답자 박O철)*

*제가 제주에서 자란 탓일 수도 있지만 서울의 환경은 아이를 키우기에는 너무 꽉 막히고 답답하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응답자 김O량)*

반면, 교육환경이나 문화·편의 시설의 질이 상대적으로 우수하기 때문에 서울에서 아이를 키우길 선호한다는 응답도 있었다. 응답자 중 출산가구 대부분은 유·초등학교까지의 어린 자녀를 보육하고 있었는데, 자녀가 더 성장할 경우 사는 곳의 교육 여건이 현재보다 더 중요하게 고려될 것 같다는 의견을 공통적으로 밝혔다. 지방에서 서울로 이주한 한 응답자는 지방 도시의 돌봄 인프라 수준이 질적인 수준이나 다양성 측면에서 서울과 비교해 열악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수원에 거주한다는 한 응답자는 수도권에는 아이들과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대형 쇼핑몰이 많아 아이 키우는 데 장점이 있다고 응답했다.

### (3) 고용불안정과 수도권의 경쟁환경

수도권 인터뷰 참여자들은 고용상태가 출산의향이나 가족계획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공감했다. 다만, 다수 참여자가 민간기업에서 재직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고용 여건이 안정적이더라도 격무나 불규칙한 근무형태로 인해 자녀계획을 세우는 데 제약이 많다고 응답하기도 했다.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는 부부 중 한 사람이 오히려 불안정하지만 근무형태가 느슨한 파트타임 일자리로 빠지게 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된다는 응답도 있었다. 한편, 지역 혹은 업종 차원에서의 고용전망에 대해서도 질의했으나, 인터뷰 참여자 다수가 큰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의미 있는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특정한 업종이나 대기업 네트워크에 집중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 지방 산업도시와 달리, 수도권의 노동시장은 높은 다양성을 갖고 있고 새로운 일자리가 활발하게 창출되고 있기 때문에 지역 단위의 고용전망에 문제의식을 갖는 경우가 적었다. 다만, 지방에 비해 전반적인 경쟁의 밀도가 높고 시장이 역동적으로 변화하다 보니 이를 따라잡기 위한 노력이 버겁게 느껴진다는 응답도 있었다.

자연스레 **수도권의 높은 밀도로 인한 사회적 스트레스나 지나친 경쟁이 청년가구의**

**출산의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질문했다. 이에 대해서는 특히 지방에서 유소년기를 보내다가 서울에 올라온 응답자 그룹에서 서울의 경쟁환경에서 느끼는 압박감을 토로하는 경우가 많았다. 직장에서의 경쟁이 치열할 뿐만 아니라, 통근시간이나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투입해야 할 시간이 많기 때문에 가족을 챙길 수 있는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이었다. 이들은 치열한 서울살이가 가족계획이나 출산의향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데 동의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바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다보니 나 혼자 여유롭게 지내기가 참 힘든 것 같아요. … 취업의 기회가 더 다양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만큼 경쟁도 많은 것이고요. … 제주에서 교사를 할 때랑 서울에서 교사를 하는 것은 경쟁률부터가 너무 다르고 분위기도 너무 다른 게 현실로 느껴졌을 때 진짜 많이 압박을 받았어요. (응답자 김O량)*

*저도 서울이 지방보다는 훨씬 경쟁이 심하다고 생각하고, 이게 삶의 패턴에도 나타나는 것 같아요. 일단 서울에서는 1시간씩 통근은 기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한정된 시간을 더 치열하게 살려고 노력해야 할 것 같죠. (응답자 안O규)*

*나 혼자를 건사하는 것도 힘든데 내 자식까지 건사해야 되면 2배 이상의 압박감을 가지게 되는 거잖아요? (응답자 양O정)*

서울에서 느끼는 압박은 **일터에서의 경쟁만이 아니라 소비경쟁으로 이어진다는 의견**도 있었다. 특히 사교육비 지출의 경우, 설령 부모가 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해당 지역에서 보편화된 기준처럼 여겨지는 사교육의 수준이 있다 보니 아이가 소외감을 느끼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경쟁적인 지출에 동참해야 하는 분위기가 존재했다. 아파트, 자동차, 해외여행 등 주변 이웃들의 생활 수준과 비교해 평균은 따라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낀다는 응답자도 있었다. 한 응답자는 서울살이 자체를 일종의 투쟁으로 묘사했는데 그 속에서 살아남으려 애쓰다 보면 자연스레 결혼이나 출산 같은 장기과제를 계획할 여유가 없어진다고 응답했다.

*아무래도 서울 혹은 경기권에라도 남고자 버티는 것 자체가 경쟁이거든요. 그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다 보면 출산이나 결혼을 생각할 역량이 없어지기도 하고… 출산이나 결혼을 하려는 연령대가 점점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응답자 박O철)*

다만, 서울에서 나고 자란 응답자 그룹에서는 서울의 경쟁환경이 치열하다는 점에 공감하면서도 그것이 출산의향에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는 응답 비중이 높았다. 대중교통 이용 시의 혼잡 등에 대해서는 모든 응답자가 불만을 토로했다. 그러나 서울 출신의 응답자들은 **서울의 인재 집약도에서 누릴 수 있는 다양한 편익**을 언급하기도 했다. 특히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쉽게 만날 수 있다든지, 자기계발이나 취미활동을 조직할 수 있는 기회가 풍부하다는 등의 장점이 자신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한다는 응답자가 있었다.

*(서울을 벗어나서 산다고 생각해보면) 나 자신을 디벨롭시키고 내 커리어를 유지하고 좋은 영향과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전부 서울에 모여 있기 때문에, 특히 홍대와 강남 2호선 라인을 중심으로 몰려 있어서 그게 저에게 주는 압박이 있는 것 같아요. … 제가 50~60대가 되어서 정말 후학 양성에만 매진한다면 제 고향인 전주 같은 데 내려가도 괜찮겠죠. … 지금은 현역으로서 활동해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 생존 경쟁에서 날카로운 감을 살려야 하고 트렌드가 무엇인지 체크해야 하기 때문에 그 경쟁을 저는 민감하게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응답자 임O운)*

### (4) 출산을 지원하는 제도적 환경

마지막으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방향을 물었을 때, 우선은 지역 단위로 아이 돌봄을 지원하는 시설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특히 서울 시내의 인구과밀지역에서는 초등학교 저학년생을 대상으로 방과 후 수업을 제공하는 초등돌봄교실이나 늘봄학교의 자리를 얻는 것이 대단히 어렵고 대기인원 적체가 심하다고 했다. 유년기 보육은 출산휴가와 보육시설, 그리고 조부모의 도움 등을 통해 어떻게든 버틸 수 있었지만, 초등학교 입학 후의 돌봄 공백은 여성의 경력 유지에 더 결정적인 위협을

가하게 된다는 의견이 있었다.

*둘 다 맞벌이를 할 수 있는 때는 아이들이 가장 어릴 때라 하더라고요. 유치원, 초등학교 가기 시작하면 학교가 너무 빨리 마친대요. … 애프터반도 운이 좋아야 걸린다고 하던데 벌써부터 걱정이 돼요. (응답자 최O정)*

*… 직장을 다니는 저는 1시 하원하는 아이를 맞이할 수가 없죠. 그러면 학원을 뺑뺑이를 돌려야 되는 거에요. (응답자 양O정)*

출산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국가 정책의 소득·자산 기준**이 수도권 맞벌이 부부 입장에서는 적용되기 어렵도록 낮게 설정되어 있어 실효적이지 못하다는 불만이 많았다. 또한 행복주택 같은 공공임대주택의 평형이 출산가구의 수요에 비해 지나치게 작은 탓에 선호가 높지 못할뿐더러 실제로 아이를 보육하기에 무리라는 의견도 여럿 제기되었다.

*맞벌이를 하는 부부는 금융지원을 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라 해요. 재산세를 내는 부자도 아니고 자가도 없는데 이런 지원을 하나도 못 받는 어정쩡한 중위금액의 연봉대에 들어와 있는 거에요. 세금은 세금대로 다 내고 지원은 하나도 못 받는 거죠. (응답자 양O정)*

*행복주택 같은 경우도… 신혼부부형 평수라 해도 굉장히 작아서 아이를 키우기에는 무리가 있는 그런 구조더라고요. (응답자 김O아)*

마지막으로 미혼이었던 응답자 1명은 **결혼관계 속에서만 출산을 허용하는 사회적 관습과 제도적 환경**도 장기적으로는 개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해당 응답자는 문화예술 관련 직종에 종사하고 있었는데, 결혼이라는 사회적 관습에 대해 저항하면서도 가족을 꾸리거나 자녀를 낳고 싶은 의향은 갖고 있는 청년들을 많이 만나게 된다고 응답했다. 다만, 아직까지는 전체적인 사회의 인식이나 해외 선진국 같은 복지환경이 준비되어 있지 못하지만, 비혈연가구와 그 자녀에 대한 지원을 단계적으로 국가적인 체계에 포섭하는 것이 사회적인 인식을 개선하는 데에도 기여하리라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지금 한국에는 출산이 결혼과 꽁꽁 묶여 있지만 이걸 조금 분리시켜 놓고 젊은 청년들에게 어떤 선택의 여지를 줄 수 있다면 좋겠거든요. … 꼭 결혼이라는 울타리 안에서만 혜택이 있다고 한정하지 않는다면, 굳이 결혼을 하지 않아도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만들 수 있는 여지가 생기지 않을까요. … 좀 더 유연한 복지제도가 만들어지면 사회적인 인식도 따라갈 수 있겠다 생각해봐요. (응답자 임O운)*

## 4. 비수도권 청년가구 대상 인터뷰 결과

### 1) 인터뷰 응답자 특징

본 소절은 비수도권 청년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의 주요 내용을 정리했다. 이번 인터뷰는 비수도권 청년 중 창원특례시와 부산광역시 출신이거나 현재 거주자인 응답자를 중심으로 수행되었다. 인터뷰에 참여한 대상자는 모두 8명이었는데, 이들을 대상으로 1~2명씩 다섯 차례의 인터뷰가 진행되었다. 창원특례시에서의 인터뷰는 구도심 번화가인 성산구 상남동과 신도심 번화가인 의창구 중동에서 진행되었고, 부산광역시에서의 인터뷰는 구도심 번화가인 서면 인근에서 수행되었다. 각 인터뷰는 1시간에서 2시간가량으로 진행되었다. 인터뷰 시간은 연구 참여자의 숫자에 따른 누적 응답시간의 차이로 인해 다소간 차이가 있었으나, 대체로 연구 참여자들 모두가 충분하게 응답할 수 있게 진행되었다.

연구 참여자는 창원의 경우 연구자의 지인을 통해 기본적인 인적사항을 파악한 상태에서 섭외되었고, 부산의 경우 전문 사회조사 기관에 의해 섭외되었다. 비수도권 청년 인터뷰를 진행할 때는 다수의 초점집단인터뷰가 아니었기 때문에, 사전 1:1 인터뷰 없이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주의점을 설명하는 과정을 선행함으로써 곧바로 본 인터뷰에서 연구 참여자의 소득 수준, 주거 여건, 고용상태, 출산이력 등의 개인정보를 질의하고 응답받을 수 있었다.

**표 5-4 | 비수도권 청년가구 대상 인터뷰의 응답자 특징**

| 이름 | 성별 | 나이 | 혼인 여부 | 자녀 수 | 주거지 | 자가소유 여부 | 가구소득(연) |
|---|---|---|---|---|---|---|---|
| 김○철 | 남 | 28 | 미혼 | X | 창원 | 자가(부모) | 3,800만 원 |
| 김○욱 | 남 | 38 | 기혼 | 1명 | 김해 | 자가 | 8,200만 원 |
| 김○아 | 여 | 36 | 기혼 | X | 창원 | 자가 | 5,300만 원 |
| 이○년 | 여 | 34 | 미혼 | X | 창원 | 전세 | - |
| 설○희 | 여 | 31 | 미혼 | X | 부산 | 자가(부모) | 3,500만 원 |
| 오○우 | 여 | 38 | 미혼 | X | 부산 | 자가(부모) | 2,700만 원 |
| 김○은 | 여 | 30 | 기혼 | 1명 | 부산 | 전세 | - |
| 서○민 | 남 | 38 | 미혼 | X | 부산 | 자가 | 9,000만 원 |

자료: 연구진 작성.

수도권 청년 대상 인터뷰와 마찬가지로 대상자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엄밀한 표집 틀을 적용하지 않았지만, 성별과 연령대, 혼인 여부에 있어서는 결과적으로 균형을 이룰 수 있었다. 직종이나 주거 여건의 기타 조건 역시 다양한 조건의 참여자를 섭외하고자 노력했다. 결과적으로 섭외된 비수도권 인터뷰 참여자 중에서는 남성이 3명, 여성이 5명을 차지해 여성 응답자의 비중이 소폭 높았다. 이 중 창원에서는 남성과 여성이 각각 2명으로 동수였으며, 부산에서는 남성과 여성이 각각 1명과 3명으로 구성되어 여성 응답자가 다수였다. 창원에서는 산업도시의 특성을 고려해 남성을 한 명 더 배정할까 고려하였으나, 여성을 인터뷰하더라도 많은 경우 산업도시에서 근무하는 남성과 교재하거나 유배우 상태인 경우가 많아 전반적인 사정을 이해할 수 있으므로 인위적으로 남성 연구 참여자를 추가 배정하지는 않았다. 부산에서는 전문 사회조사 기관의 섭외 방식을 그대로 수용하였다. 연령대는 20대 후반 1명, 나머지는 30~38세로 모두 30대에 속했다. 전체 참여자 중 기혼자는 3명이었는데, 이 중에서 출산가구에 해당하는 응답자는 각각 1명의 자녀를 가진 2인이었다. 자가를 보유한 가구는 모두 3명이었다. 나머지 응답자 중 미혼인 3명은 부모의 자가에서 거주했고, 2명은 모두 전세살이를 하고 있었다.

응답자 8명 중 4명은 상용직, 2명은 개인사업자, 2명은 프리랜서 형태의 고용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응답자 8명은 모두 각자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창원과 부산에 직

장이 위치하고 있었고, 1명은 직장이 창원에 있으나 김해(진영)에 거주하고 있었다. 연평균 가구소득에 대한 응답결과는 2,700만 원에서 9,000만 원까지 매우 다양한 분포를 이뤘다.

## 2) 주요 인터뷰 내용

### (1) 출산의향 여부와 맥락

비수도권 인터뷰 참여자 중에서도 무자녀계획을 갖고 있는 경우부터 적극적인 출산계획을 갖고 있는 응답자까지 출산의향에 대해 다양한 입장이 존재했다. 출산의향을 갖게 되거나 무자녀를 희망하는 동기 역시 다양했으나, 이러한 의향은 지역의 산업적 특성과 개인들의 직군적 특성에서 기인하는 경우가 많았다.

우선 미혼자의 경우를 살펴보면, 창원의 미혼자들은 출산에 대해서 긍정적인 경우가 많았다. 창원시 제조기업의 정규직 연구원인 응답자(미혼, 남성, 20대)는 현재 근무하는 직장의 수입과 향후 반려자를 만나 맞벌이할 것을 고려할 때, 창원의 인프라 정도면 아이를 키우는 데 크게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하고 있었다. 최근 근무시간의 유연성이 생기면서 퇴근 후 시간을 활용하면 어느 정도 수준의 육아 참여가 가능하리라 판단했다. 경제적 부양이 가능하면 육아가 큰 문제가 아니라는 다소 전통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것이다. 창원에서 자산관리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인 응답자(미혼, 여성, 30대)는 성장기에는 아이를 좋아하진 않았지만, 20대 후반 이후부터는 시간과 업무량을 조절할 수 있는 직무 특성으로 인해 결혼하고 아이 낳는 문제에 대해 열린 생각을 갖게 되었다고 응답했다. 발달장애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면서, 부업으로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고 있는 무자녀 기혼 응답자(여성, 30대)도 마찬가지로 직무적 특성 때문에 업무적으로 시간 조절이 가능하여 출산의향이 있고 현재 지병 치료를 마쳐서 적극적으로 출산을 시도하고 있다고 전했다.

적극적인 무자녀계획을 갖고 있는 경우는 창원시 응답자 중에 없었으나, 부산의 경우에는 총 응답자 4명 중에서 2명을 차지했다. 이에 해당하는 음악 관련 레슨을 하는

프리랜서인 남성 응답자(미혼, 30대)는 결혼에 대한 의향 자체가 없었는데, 이는 애초 비혼주의적 성향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연애 과정에서 직업적인 예민함과 소득의 불안정함 때문에 실패를 많이 겪었기 때문이라고 전한다. 더불어 부모의 부부사이가 좋지 않아 생긴 유년기의 상처도 영향을 끼쳤다고 전한다. 이러한 생애과정 속에서 본인의 행복을 우선시하는 가치관이 형성됨으로써 결혼과 출산은 고려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다. 반면, 유년기 가정환경과는 별개로 비혼과 무자녀계획을 갖는 응답자도 있었다. 그 응답자(미혼, 30대, 여성)는 연애과정에서도 특별히 만족하지 못했고, 부모와 동생들과 함께 살면서 특별히 외로움이나 추가적인 가족 형성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향후에도 결혼을 하거나 아이를 가질 계획이 없는 상태라고 전했다.

이번 인터뷰에서 기혼 유자녀 응답자의 경우에는 모두 애초부터 자녀를 희망하는 입장이었다. 기혼남성 응답자(30대, 유자녀)는 결혼을 계획했던 당시 시점부터 자녀를 가지겠다는 계획에 대해 합의가 있었고, 원하는 시점에 출산을 하지는 않았으나 이에 대한 불만은 없는 상태였다. 직무적으로는 방송계통 외주제작을 담당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사업 수주 등에 대한 부담과 불안함이 있었지만, 배우자(교사)의 안정적인 소득을 고려할 때 남성이 좀 더 육아에 참여하면 어려움이 없으리라 판단하고 있었고 현재 5세 자녀를 양육하는 것에 대한 만족감이 컸다. 외려, 부부가 둘째 자녀를 희망하고 있으나 아이가 잘 생기지 않아 고민이 많다고 전했다. 기혼여성 응답자 중 유자녀인 여성 응답자(30대)는 국공립 어린이집 교사로 재직 중인데 어릴 적부터 아이를 좋아했으며 나이가 많은 어린이집 교사의 경력직 지원을 직장에서 선호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 결혼과 동시가 가능한 한 빨리 출산하기를 희망하고 있었다. 마찬가지 이유에서 둘째 자녀 또한 터울이 크지 않은 시점에 출산하여, 향후 이직이나 승진 등에서 '나이 먹은 고연차 교사'로서의 페널티를 최소화하겠다는 경력개발 전략을 가지고 있었다. 다만, 초등학교에 아이가 진학할 때의 경력단절 상황과 관련해서는 우려를 갖고 있는 상태였다.

*응답자 김O은: 육아휴직을 써본 선생님들 말에 의하면 아이가 초등학교 갈 때가 더 문제예요. 초등학교 가면 12시에 마치잖아요? 그럼 그 뒤부터는 누가 봐줘*

*요? 그때 되면 친정엄마, 시어머니 다 나이 드셨고, 이제 엄마[든] 아빠든 한 명이 무조건 포기를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선생님들도 아이를 낳으면, 보통 이제 7살 졸업할 때 같이 그만둬요. 그게 왜냐, 아이를 케어해야 되니까.*

*연구진: 다시 복귀는 안 되나요?*

*응답자 김O은: 하기가 어렵죠.*

*연구진: 예, 이 경력인정이 생각보다 잘 안 되는 거네요? 이게.*

*응답자 김O은: 어, 고경력자는 돈을 많이 줘야 되기 때문에, 네. 잘… 원장님들이 오히려 그때 되면 그냥 초임 교사를 뽑지 뭐하러 경력자를 뽑아, 이렇게 하는 분위기가 돼요.*

### (2) 주거불안정과 출산의향

자신의 주거상태가 안정되어 있는지 물었을 때, 비수도권 인터뷰 대상자의 대다수는 선호에 대한 비용 문제를 제기할 뿐 주거의 불안전성을 제기하지는 않았다. 이 점에서 비수도권 응답자들의 인식은 수도권 응답자들과 큰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부산과 창원의 주거환경은 전철망 구축 여부라는 측면에서 큰 차이를 갖고 있긴 하지만, 다양한 가격대의 주택과 주거형태(전세, 매매)의 선택지가 있기 때문에 결혼과 출산을 고민할 때 주거불안정이 큰 쟁점이 되지는 않는다는 응답이 주를 이뤘다.

창원의 응답자들은 산업도시 계획 초기인 1980~1990년대에 건설한 창원 시내(성산구) 5층 아파트를 선택하여 살 경우, 1억 원에서 최대 2억 원 내외의 비용으로 전세 임차를 할 수 있다고 응답했다. 창원 외곽 김해시 북서부의 진영읍이나 남단의 장유, 혹은 같은 도시 안의 마산이나 진해를 입지로 선택하더라도 비슷한 비용을 가지고 전셋집을 확보할 수 있다고 했다. 주택을 매매하길 희망하는 경우에도 30년 만기 신혼부부 특례 대출을 받을 경우, 시내 신축(5년 이내) 아파트를 희망하지 않는 이상 저리로 3억~5억 원대 아파트를 구할 수 있으므로 주거불안정 자체가 결혼과 출산의 문제 자체는 아니라는 응답이 많았다. 단, 아파트의 노후 수준, '초품아'(초등학교의 근접성) 여부, 주변 학군의 수준 등을 고려해서 아파트의 가격이 편성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입지요소 중에서 본인 가구의 선호를 결정하는 것이 보다 중요한 문제라고 전했다.

부산의 경우도 선호하는 신도심(해운대, 수영, 기장 등)의 신축 아파트는 비싸지만, 도심 내 구도심과 신도심의 개발 격차로 인해 초품아와 학군을 갖춘 적절한 구도심의 입지를 선택하면 전세와 매매 중 현재의 여건에 맞게 주거를 안정적으로 영위할 수 있다고 한다. 게다가 전철망이 잘 구축되어 있고, 응답자들의 일자리가 대개 시내 구도심 근처에 입지해 있기 때문에 통근과 아이 돌봄에 있어서 큰 제약은 없다고 조사되었다. 부산 토박이인 기혼여성 응답자의 경우 현재 주거지와 직장, 친정이 모두 10분 이내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응답이 많았다. 대체로 부부 합산 5,000만 원 이상의 소득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창원이든 부산이든 주거환경과 출산 여부를 선택함에 있어서 경제적 제약을 크게 느끼지는 않았다. 물론, 창원의 노후 아파트들은 주차공간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이동의 어려움 때문에 외곽이라도 신축 아파트를 선호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응답자 김O은: 어, 네, 부모님 도움 없이 그래서 저는 구축에 들어가가지고요. 네, 그래서 엄청 옛날, 엄청 오래된 아파트에 들어가서 그렇게 크게 비싸진 않았어요.*

*연구진: 지금 아까 어디. 어디 쪽에 사신다고 하셨죠?*

*응답자 김O은: 저 동래구.*

*연구진: 동래구. 동래는 싼 데가 좀 있어요?*

*응답자 김O은: 근데 저 찾아보니까 싼 데가 있더라고요. 저도 저희 주변 아파트… 그, 메이커 있는 아파트들은 매매가 7억 8억 해가지고…(웃음).*

*… …*

*응답자 김O욱: 그죠. 신형 저기 살면 여기 구축을 살 수가 있어. 근데 뭐라 해야지 어차피 인테리어 비용이 또 들어가니까. 또 들어가고 그런데 구축을 들어가게 되면 단점이 뭐냐면 아까 말했듯이 주차난. 주차난. 예, 그런 것 때문에 보수하고 뭐 하고 그 스트레스를 받느냐, 아니면은 저기 가면은 2억 원에서 3억 원이면은 그나마 10살 된 아파트 아니면 5살 된 아파트고 거기서 살 수 있는 거죠. 그게 차이인 것 같아요.*

종합적인 정주환경 측면에서 주거환경에 대한 평가를 물었을 때는 수도권과 마찬가지로 소아청소년과 등 의료기관에 대한 접근성을 언급하는 응답자가 많았다. 창원 시내 근처에 주거할 경우에는 의료기관 접근성에 큰 문제가 없으나, 주차가 용이하고 초등학교가 인접해 있는 외곽의 신축 아파트 단지로 이사할 경우에는 의료기관 접근성을 확보하기가 여의치 않아 큰 문제가 된다. 신축 아파트 단지가 많은 김해시 진영읍 지역 전체에는 소아청소년과 병원이 1개밖에 운영되고 있지 않아 '대기표'를 뽑으며 시간을 보내야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응답자는 전한다.

*가면은 또 가잖아요. 가면 번호표 뽑아도 한참 걸려요. 1시간, 2시간. 그러면 와이프든 나든 누구는 반차를 내야 되고 해야 되고 가야 되고 또 뭐 하면 또 애네들이 아 그냥 주사 맞히고 가면 될 것 같은데 또 입원을 시켜요. 그게 돈이 되니까 제가 볼 때는 그게 돈이 되니까. (응답자 김O욱)*

*저희 동생이 여기 창원 살다가 지금 남편 직장 때문에 사천으로 이사를 갔거든요. 근데 사천에서도 병원에서 좀 심하면 창원 가라 그래요. 1시간 차를 타고 창원에 와서 병원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병원을 보통 오픈런 해서 이렇게 했는데도 안 되면 이제 창원 와야 되니까 애를 태우고 1시간 와서 또 접수를 하고. (응답자 김O아)*

창원의 외곽지역이나 부산의 구도심에서 거주하고 있는 기혼 출산희망 혹은 유자녀 여성 응답자들의 직군은 상용직인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주변 생활권에 의료기관 등 지원 인프라가 부족하더라도 그럭저럭 대응이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창원시 인근에서 1시간 이상의 자차 운전을 수반하는 육아 생활은 친족을 비롯한 다양한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부부 모두가 상용직으로 종사하는 가정일 경우 긴급상황에서 다양한 위기가 발생될 있는 환경이라 할 수 있다. 이와 달리, 부산의 도시철도망은 맞벌이를 가정했을 때 주거와 생활의 안정성을 가져올 수 있는 요소라 할 수 있다. 앞서, 결혼과 출산에 대해 긍정적인 부산의 미혼여성 응답자의 경우도 이러한 모빌리티의 도움이 필요한 대상임을 시사하는 경우라 볼 수 있다.

보육 인프라 측면에서는 응답자 대부분이 창원이나 부산 지역 자체의 문제를 크게 지적하지는 않았다. 어린이집 교사인 부산의 기혼 유자녀 여성 응답자는 비수도권 인구의 수도권 유출과 저출산으로 인해, 영유아 인구과밀로 인한 국공립 어린이집 추첨 경쟁이 최근에는 크게 완화되었음을 전한다.

*사립 어린이집은 이제 많이 없어지는 추세고, 국가에서 많이 사가지고, 국공립화시키고 있거든요.*

*올해, 제가 그때 작년이었나 재작년이었나 참석했었는데, 올해 낳은 애가 천 명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어… 진짜 좀 심각하고, 저희 어린이집도 원래는 대기가 천 명 가까이 되는 어린이집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애들이 다 없잖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저희도 반을 없애기도 했거든요. (응답자 김O은)*

문화적인 측면에서는 주로 창원시 응답자에게서 **매력적인 장소나 즐길 거리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창원시 역시 단조로운 산업도시의 경관을 극복하고자 용지호수공원 인근 지역 등에 경관조성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그럴듯한 인프라가 놓였을 뿐 그것을 중심으로 젊은 세대의 문화와 창작활동이 활발하게 조직되고 있는 분위기는 전혀 아니라 전한다. 창원시 응답자 한 명은 부산과 창원의 문화적 경관을 비교했다. 그에 따르면 부산만 하더라도 로컬 브랜드를 가진 독립적인 상점들이 많고 방문할 때마다 새로운 트렌드가 생기는 느낌이 확실히 있다고 한다. 반면, 창원은 젊은 사람 자체가 줄어들고 있어 문화적으로 활력이 떨어지고 있는 동시에, 젊은 사람들이 즐길 만한 장소가 부족하고 타 지역의 트렌드를 '베껴온' 듯한 시설물만 늘어나는 것 같다는 인상이라고 전했다. 창원시 응답자는 이 같은 문화적인 밋밋함이 젊은 세대, 특히 젊은 여성들이 지역을 떠나게 되는 주된 이유 중 하나라 연관짓고 있다.

*홍대에 가면 진짜 애들이 다 자유롭잖아요. 자유롭고 그것에 대해서 자기네들끼리 같이 의사소통을 하는 그런 느낌인데 여기(창원)에 있는 용지호수 같은 곳에 가면 딱, 딱 그 느낌이에요, 홍대에 있는 건물들만 베껴 온… 그 문화를 베껴 온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애들이 버스킹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은 없죠. (응답자 김O철)*

### (3) 고용불안정과 비수도권 청년들의 일 전망

고용안정성에 대해서 질문했을 때, 응답자 다수는 현재 개인의 고용상태가 크게 불안정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수도권 응답자들과 달리, 비수도권의 응답자들은 **자기가 일하고 있는 지역과 업계의 장기적인 전망이 밝지 못하다는 데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처럼 지역의 기존 일자리와 산업이 저물고 있다는 인식에 있어서는 각 지역의 맥락적 차이는 있었으나 부산과 창원 모두 크게 다르지 않은 위기감이 존재했다.

부산에 거주하고 있는 한 기혼여성 응답자는 **신생아 수가 급격히 줄어드는 인구추세가 이어지면서 부산의 유아교육 전공자들이 '노인 유치원'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부산의 경우 최근 10년 동안 신생아 숫자가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었는데, 이에 따라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휴·폐원이 이어지고 있어 유아교육 관련 전공을 가진 청년들이 직종이나 업종 변경을 고민하게 되는 상황인 것이다. 특히 고령화가 상당 수준 진행되어 있는 부산광역시 구도심 지역의 경우에는, 실제로 노인 유치원 인력에 대한 수요가 높다고 한다.

음악 레슨을 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한 미혼남성 응답자는, **인구감소 추세에 따라 점차 레슨 수요가 감소할 것을 대비해서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을 준비**하며 소득보전을 계획하고 있다고 전했다.

>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보컬 레슨을 좀 많이 하다가. 그 사실 저는 성악적인 수요보다 사실 보컬 수요가 더 많아서, 보컬 레슨하다가 코로나 딱 터지고 나서, 이제 인원수가 서른 명에서 한 여덟 명으로 확 줄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동요 쪽에 레슨을 지금은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상황인데, 애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잖아요. 현실상 저도 그것 때문에 대비해서 사회복지사 자격증 지금 따려고… 지금 따려고. (웃음). 왜냐하면, 그것도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제가 지역아동센터 수업을 나가요. 근데 거기의 성향이 저랑 좀 많이 잘 맞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제가 월급이 한 300만 원정도 떨어지면? 그때는 조금 턴을 해서 이제, 제가 아이들을 [케어]할 수 있는 복지 쪽에 관심이 좀 있어서, 좀 해보려고요. (응답자 서O민)*

창원의 기혼여성 응답자 한 명은 중소 제조기업에 다니는 남편과 자신의 소득을 합산했을 때 연간소득이 약 5,000만 원 수준인데, 남편과 본인의 일자리(발달장애 아동 교육)의 전망이 지역 안에서 밝지 못하기 때문에 비대면으로 유연하게 일할 수 있는 '사이드 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으면서 저도 이제 신랑이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다 보니까 그렇게 벌이가 그렇게 세지도 않고 일은 진짜 많이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 뭔가 안정적인 사이드가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트워크 마케팅을 이제 약간 그걸로 하고 있어요. 저의 노후 대책으로 조금씩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응답자 김O아)*

연구직으로 종사하고 있는 창원의 제조기업 정규직 미혼남성 응답자는 향후의 직업 전망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이는 직장 내 본인의 전망이 나쁘지 않다는 판단에 힘입어서다. **그러나 지역인재의 유출에 대해서는 큰 우려를 표현했는데, 근본적인 원인은 '일의 판도'가 바뀌고 있기 때문이라 진단**했다. 다시 말해, 전통적인 제조업의 경쟁력이 쇠퇴하고 있는 반면, 서비스업이나 IT 산업의 부가가치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들 업종은 수도권에 경쟁력 있는 사업체가 몰려 있기 때문에 젊은 인재들이 수도권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다는 진단이었다. 자신과 함께 대학을 나온 친구들은 모두 경기권으로 옮겨가 취업했는데, 수도권에서 살기 위해 추가적인 비용이 들겠지만 그만큼 사람이 몰려 있고 좋은 일자리가 많아 메리트가 있다고 전했다. 그 응답자는 창원에서 젊은 사람들이 너무 빠르게 줄고 있어서 교제할 사람을 지역 안에서 소개받기 어려운 상황이라 전하기도 했다.

*(왜 젊은 인재들이 창원을 많이 떠나는지 물었을 때)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일의 판도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실제 제조업은 돈이 안 된다는 것을 또 이제 사업자들도 거의 다 알고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약간 IT나 서비스 쪽이 많이 높아졌잖아요. 카카오나 그런 것들도, 싹 다 IT나 서비스업은 저기 수도권에 몰려 있고… 사람이 많고 그다음에 그게 기회가 많은 거죠. (응답자 김O철)*

방송콘텐츠 제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창원의 한 응답자 역시 지역에서 자기가 종사하는 업종의 전망을 매우 어둡게 평가했다. 2~3년 안에 다른 일자리를 찾아봐야 할 것 같다는 의견을 전하기도 했다. 지역에서의 영상제작 수요 자체가 부족한 것도 문제이지만, 소위 단가를 후려치는 식의 관행이 만연해 쓸 만한 영상제작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주된 불만이었다. **제대로 된 가격을 쳐주는 발주업체가 없어 수준 낮은 콘텐츠를 제작해야 하는 환경**이기 때문에, 응답자는 주변에 미디어를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지역을 떠나 수도권으로 올라갈 것을 권한다고 했다. 반면, 수도권에서는 일감이 많은 데 비해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 적당한 숙련을 가진 학생이라도 창원에서 올려보내 달라는 연락이 자주 온다고 전했다.

*경남대에서도 오고 이러는데 애들 보고 그냥 그냥 얘기해요. 어쩔 수 없다. 올라가라. 올라가라. 여기서 너희 꿈을 펼 수가 없다.(응답자 김O욱)*

한편, 인터뷰에 참여한 여성 응답자 다수는 **지역노동시장 전반에 걸쳐 여성들을 위한 일자리가 매우 제한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여성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의견은 창원시 인터뷰 참여자에게서 강하게 제기되었다. 과거처럼 남성들의 제조업체 일자리가 안정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맞벌이 비중이 늘어나고 있지만,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일자리는 일부 교직이나 공무원 직종을 제외하면 단기적인 파트타임 일자리에 쏠려 있다고 전했다. 공장에서 채용하는 경리직·사무직 등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장기근속이 어려운 경우가 많고 고용상태가 매우 불안정하기 때문에 출산이나 결혼 같은 장기적인 인생 경로를 구상하는 데 큰 제약이 따르는 상황이다.

*(여성 일자리에 대한 질문에서) 없어요. 여기는 이제 여성 일자리 하면 진짜 딱 경리직, 사무직 아니면은 프리랜서로 단기 알바 같은 거나 아니면 서비스직 이게 다인 것 같아요. … 20살 때 아예 공순이로 입사한 친구들은 그게 보장이 되어서 쭉 가는데 그게 아닌 어중떠중한 계약직인 친구들 그리고 요즘은 예전처럼 2년 계약도 안 하잖아요. 보통 1년 계약이 많다 보니까 언제 회사의 그 계약이 끝날지 모르는 불안감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근데 그걸 그만두고 실업급여를 타먹는다 해*

*도 이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지, 뭐 해야 되지? (응답자 이O년)*

또한 상용직이나 개인사업자 지위에 있는 여성 응답자들은 혼인 여부, 유자녀 여부와 상관없이 '성장'과 '자기 시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대학원 학위를 취득하거나 직업에 대해 탐색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다만, 거기 소요되어야 할 시간과 출산–육아의 시간이 서로 경합관계에 있는 것을 큰 부담으로 느끼고 있었다. 기혼 유자녀 여성 응답자의 육아휴직 기간 연장이나 남성 육아휴직 기간 확대 혹은 현실화에 대한 요구는 '자기 시간'에 대한 요구와 포개진다. 달리 말해, 비수도권 응답자 중 종사상 지위에서의 안전성이 높거나 고학력인 여성 응답자들은 혼인 유무, 유자녀 여부와 관계없이 개인의 '시간'을 중시한다. 그리고 '시간'에 대한 중시는 때때로 결혼 및 출산의향과 경합하게 된다. 반면,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로 종사하는 여성 응답자들은 자신의 고용유연성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출산의향을 고용형태와 명확하게 연결짓지는 않는 경우가 많았다. 이 같은 상황을 고려했을 때, 부부 양자의 관계에서 시간에 대한 가치부여와 남성의 역할부여가 어떻게 조직되는 지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혼인 및 출산을 유도할 수 있는 적절한 방식의 정책설계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비수도권 응답자들의 경우 서울에 비해 '경쟁 압력'은 높지 않으나, 지역노동시장이 가지고 있는 특징에 따라 혼인 및 출산의향이 조율되는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원하청 임금 격차, 중소대기업의 임금 격차, 커리어 패스(career path) 잡의 부재와 핑크칼라 직종의 편재라는 맥락 안에서 이들은 변화하는 가치관과 자신의 고용 지위, 남성의 역할에 대해 고려하며 혼인 및 출산의향을 조율하고 있다. 부산의 남성 응답자나 창원의 비제조업 종사자 응답자 역시 안정적인 직업전망에 의지해 가족형성을 고려하기보다는 본인 일의 전망과 적성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며 변화를 모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 (4) 출산을 지원하는 제도적 환경

마지막으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방향을 물었을 때, 다수의 응답자는 남편 육아휴직의 현실화를 언급했다. 제도로는 구축이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활용하는 경우가 저조함을 언급했다.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스스로의 시간을 통해 아이 돌봄을 위한 여유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이로 인한 소득의 감소 등을 제도적으로 어떻게 보조할 수 있을지가 고민으로 남는 상황이다.

창원의 미혼 응답자들은 지인 또는 친구의 경험을 빌어 출산과 육아에 소요되는 다양한 비용을 언급했고, 이를 보전하기 위한 복지가 실질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이 필요한지 명료하게 언급하지는 않았다. 출산 준비 및 출산을 이행해 본 응답자와 그렇지 않은 응답자 간의 '정보 공유'가 제한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응답 결과를 종합하면, 비수도권의 경우 출산의향을 결정함에 있어 '주거' 문제가 비교적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앞서 3장과 4장의 실증분석결과를 다시금 확인하는 것이다. 대신, '고용' 문제와 관련해 '사회적 경쟁'보다는 유연성의 실현과 임금 격차의 해소가 더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미혼 청년들을 위해서는 출산에 대한 두려움을 낮추기 위해 제도적인 뒷받침을 통해 노동시장 내부의 고용환경을 질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고, 기혼 청년들을 위해서는 실질적인 출산과 육아에 대한 보조를 가시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다.

한편, 창원의 경우 신규 청년 주거지로 개발되는 곳들이 마산이나 진해 등 기존의 낙후된 도심인 경우가 많은데, 대중교통 연결이 원활하지 않다는 문제라는 지적이 많았다. 버스, 택시, 자가용 등 모두 도로를 활용하는 상황에서 교통 체증과 배차 간격, 비용 관점이 문제가 된다.

궁극적으로 창원과 부산의 경우를 종합할 때, 비수도권 청년들의 출산의향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제도적 보완으로는 '누구'를 위해 제도를 설계하는지의 문제가 중요해 보인다. '남아 있는 청년'의 이해관계는 '떠나려는 청년'의 이해관계와 다르다. 예컨대 비수도권 청년 응답자들은 서울의 문화예술 인프라나 네트워킹할 수 있는 여건을 부러

워하지만, 이를 항구적인 본인들 삶의 조건과 직접적으로 연결해 판단하지는 않는다. 광역 철도망(KTX 등)의 발전으로 2~3시간이면 수도권의 문화예술 인프라를 '관광' 하듯 즐길 수 있고, 직무적 필요의 네트워킹 역시 반드시 필요하다면 수행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들은 현재 있는 위치에서 주거, 고용, 육아, 일과 삶의 균형 관점에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대안을 요구한다.

더불어 응답자 모두를 비추어 보건대, 동남권 여성의 일자리, 더 나아가 비수도권 여성의 일자리는 교원과 공공 부문 일자리를 제외하면 '정규직'이 극도로 희소한 상황임을 파악할 수 있었다. 따라서 수도권의 2인 정규직/상용직 부부를 준거로 한 출산 및 육아 지원책이 비수도권에서도 균질되게 작동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비수도권 거주 여성 청년들은 서울과는 다른 방식으로 커리어 패스를 설계하고 있다. 이 점을 고려한 제도 입안과 운영이 필요하다는 점이 본 소절의 조사가 남기는 또 하나의 시사점이다.

## 5. 심층 인터뷰 결과의 종합 및 시사점

본 장에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구분한 초점집단인터뷰를 수행함으로써 저출산의 요인과 맥락에 대한 정성적인 정보를 수집하고자 했다. 총 18명의 인터뷰이가 참여한 가운데, 수도권에서는 서울에 직장 소재지를 가진 10명의 응답자가 2차례의 인터뷰에 참여했고 비수도권에서는 창원과 부산에 직장 소재지를 가진 8명의 응답자가 5차례의 인터뷰에 참여하였다. 인터뷰 참여자들은 출산의향과 관련한 개인·가구의 배경부터 시작해 개인 및 지역 수준에서 체감하는 고용과 주거의 안정성이 출산의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저마다의 경험을 전달하였다.

본 장에 기록된 인터뷰 결과는 대체로 **본 보고서 2장의 이론적 가설 및 3·4장에 걸친 실증분석의 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즉, 수도권 인터뷰 참여자 다수가 고용불안정보다는 주거불안정의 요소가 출산의향 및 가족계획을 제약하는 데 중요하다고 응답한 반

면, 비수도권 인터뷰 참여자들은 지역 일자리의 장기적인 미래와 안정성에 대해 불안감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다. 수도권의 높은 집값과 생활비용은 출산의향에 영향을 미치기 앞서 결혼 등 가족계획 자체를 지연시키거나 좌절시키는 요소로 작용했다. 특히 지방에서 유소년기를 보내다가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이주한 응답자들은 지방에서 살 때와 비교해 결혼이나 출산에 대해 주저하는 태도를 갖게 되었다고 응답하기도 했다.

반면, 비수도권 참여자들은 지역의 주거비용이 출산의향에 영향을 미칠 만큼 큰 제약조건은 아니라고 평하는 경우가 많았던 대신, 자신이 종사하는 직종과 업종이 장기적으로 얼마나 지속가능한 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 같은 고민이 가족계획이나 출산계획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많았다. 특히 **전통적인 제조업뿐만 아니라 유아교육, 방송콘텐츠 제작업, 음악강사 등 다양한 서비스 직종에 종사하는 응답자들 역시 지역의 인구감소가 야기하게 될 일자리의 위기를 체감하며 새로운 소득원을 찾아 이직이나 이주를 고민**하고 있는 모습이 관찰되기도 했다. 이 같은 인터뷰 결과는 **본 보고서의 3·4장에서 실증적으로 확인된 주거·고용 안정성과 저출산의 관계를 정성적으로, 또한 심층적으로 확인하며 해석**할 수 있게 해준다.

한편, 인터뷰 결과 중에는 **양적연구를 통해 확인하기 어려웠던 차원의 이슈들을 조명**하는 내용도 있었다. 예를 들어, 수도권 응답자들은 서울살이의 주거불안정이 단순히 주거비용의 문제만이 아니라 좁고 쾌적하지 못하며 안전성이 확보되기 어려운 '환경적' 측면에서도 강하게 기인한다는 점을 전해주고 있다. 특히 미혼이거나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중에는 현재 주거비용을 아끼느라 쾌적하지 못한 주거환경에서 삶을 꾸리고 있는데, 이 집에서 둘은 살 수 있어도 아이를 낳고 키운다는 상상을 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반면, 종합적인 정주환경에 대해 논의할 때 비수도권 응답자 중에는 문화적인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점과 교통 여건의 제약으로 인한 불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다. 창원시의 한 응답자는 문화적으로 밋밋하고 활력이 없는 지방도시의 환경이 젊은 여성인구가 빠르게 지역을 이탈하는 현상의 원인 중 하나라 관련짓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수도권 인터뷰 참여자 다수는 수도권의 과밀경쟁으로

인한 사회적 스트레스에 대해 각자의 경험을 전달하고 있는데, 이는 앞 장들의 실증분석에서 제반조건을 통제했을 때에도 저출산 현상에 일정한 설명력을 가졌던 인구밀도 변수의 효과를 설명하는 정성적 정보가 될 수 있다.

본 장의 인터뷰 내용 중 일부는 **앞 장까지의 이론적 논의 및 실증분석에서 다루지 못했던 이슈들을 여럿 포괄**하고 있다. 예를 들어, 비수도권 응답자 다수가 제기했던 여성 일자리 공백의 문제는 여성 근로자의 지역유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침으로써 지방 도시의 조혼인율을 낮출 뿐 아니라 사회적 활력과 다양성을 저하시키는 데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맥락이라 평가된다. 또한 수도권 인터뷰 참여자들이 제기했던 주거복지 정책의 대상 자격 문제나 초등학교 이상의 자녀까지를 포괄하는 사회적 돌봄체계의 문제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CHAPTER 6

#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 주요 분석결과의 요약 ····· 115
2. 저출산 정책에 대한 시사점 ····· 118
3. 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시사점 ····· 122
4. 연구의 성과와 향후 연구방향 ····· 125

# 06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본 장에서는 보고서 전체의 분석결과를 요약하고 그것이 함의하는 정책적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크게 기존 저출산 정책에 대한 함의와 그간의 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함의로 구분해 논의할 수 있었다. 이어서 마지막 소절에서는 본 연구가 갖고 있는 잠재적인 기대효과와 함께 한계를 고찰함으로써 향후 연구의 방향성을 제안하였다.

## 1. 주요 분석결과의 요약

본 연구는 고용과 주거의 불안정이 저출산 현상의 원인이라는 가설을 수립하고 실증분석과 인터뷰를 통해 가설을 검증하였다. 기존 연구에서도 주거 여건의 불안정이 출산의향을 저해한다는 논의가 여러 차례 제기된 바 있고, 일부 연구는 불안정한 고용상태가 가족계획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실증하기도 했다. 다만, 그간의 연구에서 주거·고용 상태의 불안정함이 대개 개인과 가구 수준의 문제로 다뤄졌던 것과 달리 본 연구에서는 지역의 문제로서 주거·고용 안정과 저출산의 문제를 관찰하고자 했다는 점에 차별성이 있다.

본 보고서의 2장에서는 연구 전체를 관통하는 이론적 관점을 구성하였다. 주거불안정과 고용불안정이 저출산에 미치는 효과는 개인 수준과 지역 수준 모두에서 이론적으로 가설될 수 있었다. 개인 수준에서의 주거불안정은 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 비중이나 자가소유 여부 같은 주거상태에 기준할 수도 있지만, 통근에 소요되는 평균시간이나 생활필수시설과의 접근성처럼 주거환경 측면에서 정의될 수도 있다. 지역 수준에서의

주거불안정은 부동산가격 상승률이나 주택공급 여건 같은 거시지표를 통해 측정되는 것이 기본이지만 종합적인 정주환경의 측면에서도 조명되어야 한다는 논의가 존재하기도 했다. 이 지점에서 본 연구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맥락을 구분해 논의했다. 인구밀도가 높은 수도권의 경우는 부동산의 가격 상승 같은 주거비용의 문제가 주거안정을 침해하는 주된 요소로 작동하겠으나,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비수도권 다수 지역에서는 기본적인 정주환경의 수준이 주거안정을 결정하는 핵심변수가 되리라 논의하였다.

고용안정성 역시 개인 수준과 지역 수준 모두에서 청년가구의 출산의향에 영향을 미친다고 가설되었다. 정규직 여부 같은 고용상태나 장기근속 가능성 같은 고용전망은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의사결정뿐만 아니라 이행 시기에 영향을 미친다. 반면, 지역 수준에서는 중장기적인 노동시장의 전망이나 불확실성이 지역노동시장에 소속된 개인의 고용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특정 업종에 전문화된 경향이 강한 비수도권 산업도시의 맥락에서 지역 수준 고용불안정의 효과가 두드러지게 관찰되리라 가설하였다.

이론적 가설의 검증은 지역 수준의 분석(3장)과 개인 수준의 분석(4장)을 통해 단계적으로 전개되었으며, 양적연구를 통해 관찰하기 어려운 맥락과 동기를 파악하기 위해 정성적인 인터뷰 연구(5장)가 진행되었다. 먼저 3장에서는 시군구 단위의 고정효과 패널자료분석을 통해 저출산 현상의 지역별 격차를 설명하는 요인들을 식별하고자 했다. 특히 고용안정 및 주거안정과 관련된 지역 수준 변수들을 조작화해 모형에 포함함으로써 2장에서 구축된 이론적 가설이 지역별 출산율과 출생률의 격차에 대해 설명력을 갖는지 검증하였다. 실증분석결과는 고용·주거 불안정의 효과가 지역마다 상이하게 나타난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특히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구분해 실증분석을 수행했을 때, 주거안정 관련 변수와 고용안정 관련 변수의 효과가 엇갈리게 나타났다. 수도권에서는 주택매매가격이나 주택전세가격의 증가율과 같은 주거불안정 변수의 효과가 합계출산율·조출생률 모두를 설명하는 데 주요한 효과를 보였다. 반면, 비수도권에서는 주거안정과 관련된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못했거나 효과의 강도가 낮았던 데 비해 고용증가율과 같은 고용안정 관련 변수가 지역별 저출산 현상의 격차를 설명하는 데 높은

설명력을 나타냈다.

이상의 분석결과는 2장에서 논의했던 이론적 가설과 방향을 일치하고 있다. 주거비 부담 비중이 높고 주택가격 상승 폭이 큰 수도권에서는 주거상태의 불안정이 저출산을 심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비수도권에서는 주거불안정 이상으로 고용불안정의 효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 특히 좋은 일자리가 부족하거나 최근 3년간 고용실적이 양호하지 못했던 지역일수록 합계출산율과 조출생률 모두가 악화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4장에서는 개인 수준의 통계분석을 통해 청년들의 출산의향에 대한 미시적·거시적 요인의 효과를 검증하였다. 시군구 단위에서 총량화된 지표의 상관관계를 밝히는 3장의 분석과 달리, 청년패널조사에 기초하는 4장의 분석은 개인의 출산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가구·지역의 속성을 보다 직접적으로 규명할 수 있다는 점에서 3장의 분석결과를 확대·심화할 수 있다. 개인 수준 회귀분석의 결과는 큰 방향에서 2장의 이론적 가설 및 3장의 지역 수준 실증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개인 수준의 제반 특징을 통제했을 때에도, 아파트 평균매매가격이나 고용증가율 같은 지역 수준의 주거·고용 안정 변수들은 개인의 출산의향을 설명하는 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한편, 가구의 주거비 부담 비중이나 정규직 여부 같은 개인 수준의 주거·고용 안정 속성들이 출산의향을 설명하는 데 의미 있게 기여한다는 점을 실증할 수 있었다.

본론의 마지막 장인 5장에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집단을 구분해 저출산 요인에 대한 초점집단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대체로 인터뷰의 내용들은 고용·주거 안정과 출산의향에 대한 본 연구의 이론적 가설 및 실증분석결과와 방향성을 일치하는 가운데 정성적인 논의를 확장하고 있다. 즉, 수도권 응답자들에게서는 주거비용과 출산의향의 관계에 대한 다양한 맥락에서의 논의가 이어졌던 반면, 비수도권 응답자들에게서는 지역의 장기적인 일자리 전망 속에서 본인 삶의 경로와 가족계획을 고민하는 청년들의 경험을 관찰할 수 있었다. 다만, 인터뷰 내용 중에서 일부는 이론적 논의 및 실증분석에서 다루지 못했던 이슈들을 환기하고 있어 주목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수도권에서는 주거의 불안정이 단순히 비용의 문제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환경이 양육 친화적이지 못한

탓에 기인하는 측면도 강하다는 점을 청취할 수 있었다. 또한 비수도권에서는 도시 외곽으로만 나가도 소아청소년과를 찾아보기 어려운 정주환경의 문제가 반복해서 제기되었고, 실증분석에서 계량화하기 어려웠던 문화적인 활력과 다양성의 문제 역시 청년들의 지역유출을 가속화하는 요인의 하나로 지적되었다. 마지막으로, 인터뷰 내용 중에는 정책적인 함의를 강하게 시사하는 논의도 포함되어 있었다. 특히 수도권 인터뷰에서 강조되었던 주거복지의 대상 자격 문제나 초등학교 이후 단계의 사회적 돌봄체계 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또한 비수도권 인터뷰에서 제기되었던 여성 일자리의 공백 문제나 청년이 선호하는 커리어 패스가 부재하다는 이슈에 대해서도 정책적인 관심이 기울여질 필요가 있다.

## 2. 저출산 정책에 대한 시사점

본 연구의 분석결과가 시사하듯이,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악화되고 있는 저출산 현상의 기저에는 주거불안정의 문제가 자리한다. 이미 저출산에 대한 국가 정책에도 주거복지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본 연구의 단계적인 실증분석은 이 같은 정책기조가 향후에도 일관성 있게 추진되어야 할 것을 뒷받침한다. 동시에, 본 연구에서 수행한 초점집단인터뷰의 결과는 몇 가지 제도개선의 방향성을 시사하고 있는데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출산 이후 양육과정 전반을 포괄하는 저출산 대책이 구상**되어야 한다. 청년가구의 출산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주거금융 대책이 잇따라 발표되고 있지만, 그에 반해 실제 아이를 키우는 가구를 위한 지원대책에는 무게가 실리지 못하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본 연구의 초점집단인터뷰 결과에서도 드러난 바와 같이, 청년가구의 출산결정에는 출산 직후의 단기적인 비용만이 아니라, 자녀를 책임감 있게 양육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비중 있게 개입된다. 따라서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나 예비부부에게 집중하는 예산지원은 출산의향이 있는 이들의 실제 이행을 지원하는 효과를 거

둘 수 있겠으나, 자녀 출산의향이 불투명한 다수 청년에게는 의미 있는 효과를 전달하지 못할 수 있다.

출산결정에 집중하는 예산구조는 자녀를 낳고 돌보는 가구에 대한 실제 지원규모를 왜곡시킬 수 있다. 저출산 현상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은 크게 출산 '결정'을 지원하는 예산과 출산 이후 양육 '행위'를 지원하는 예산으로 구분되어 있다. 특히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부터는 '결정'을 지원하는 예산을 간접지원 예산, '행위'를 지원하는 예산을 직접지원 예산이라 분류하고 있다(관계부처합동 2020). 2020년 기준으로 연간 예산의 85%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는 간접지원 예산에는 청년가구의 출산의향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보편적인 사회보장제도 확대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여기에는 청년의 정주 여건을 지원하기 위한 공공임대주택 사업처럼 어느 정도 저출산 대책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사업이 포함되기도 하지만, 학교시설의 리모델링이나 포괄적인 노후보장 대책처럼 인과적인 거리가 멀다고 느껴지는 사업군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반면, 부모의 직접적인 양육활동을 지원하는 직접지원예산 비중은 2020년 기준 15.2%에 불과하다(정재훈, 김수완, 김영미 2017). 즉, 보육비 지원이나 직장 어린이집 확충, 영유아 의료지원 등 실제 아이를 낳고 기르는 데 투입되는 비용·시간을 보상하기 위한 재정은 저출산 대응예산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지 못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 대비 가족복지 지출비율은 여전히 OECD 국가 중에서 하위 20% 그룹 수준에 머물러 있다(정재훈 2024). 2006년부터 200조 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저출산 예산이 집행되었음에도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는 지적이 다수 매체에 보도된 바 있으나, 그렇게 회자되는 예산 규모에서 출산과 육아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예산 규모는 전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 못하는 것이다(KBS뉴스 2021.2.16.).

저출산 대책의 효과성을 의심하게 만드는 착시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아이를 낳고 돌보는 행위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에 집중해 저출산 예산을 재편**할 필요가 있다. 간접적인 지원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은 보편적인 사회복지 예산의 영역으로 분리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동시에, **임신·출산·자녀돌봄 및 의료·교육지원 전반을 포괄하는 전 주기적인 양육비용에 대한 지원이 현행 수준보다 파격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늘봄학교를 비롯해 초등학교까지의 사회적 돌봄체계가 보편적으로 확대되기 위

한 인프라 및 운영비용 지원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미 국가적으로 '돌봄 국가책임제' 등의 정책방향이 발표된 바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예산지원이 뒤따르지 못한 탓에 일선학교 교사의 부담이 가중되거나 원활한 운영이 이뤄지지 못하는 혼선을 빚었다. 늘봄학교 지원센터 등 아동의 성장주기에 대응한 다양한 지역 단위 지원센터를 구축·운영함으로써 일과 돌봄의 양립이 가능한 사회적 환경을 만드는 데 국가적인 우선순위가 배치되어야 한다.

**둘째, 전술한 문제의식과 관련해, 주거지원 정책의 대상 범위 확대가** 필요하다. 현재 신혼희망타운 등 각종 공공임대주택이나 주택담보대출 금융지원 정책은 그 수혜 범위를 청년 및 신혼부부에 집중시키고 있다. 그러나 저출산과 연계한 주거지원 정책의 목표가 양육 친화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다면 자녀양육비용이 집중적으로 소요되는 유소년기 자녀를 가진 가구까지는 주거지원 정책의 대상 범위에 포함되도록 확대해야 할 것이다(김지혜, 이재춘, 이길제, 김정인 외 2019).

이와 함께, 저출산 대책과 연계한 주거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대상 가구의 소득한도나 자산한도 기준을 완화함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초점집단인터뷰에서도 지적되었듯이, 수도권 가구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 중위소득 기준의 대상자 선정 소득 기준 탓에 주거지원 사업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잦았다. 국가적인 저출산 위기대응을 위해서는 취약계층 중심으로 설계되었던 기존의 주거복지 지원체계를 개편해 자녀를 키우는 가구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혜택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주거복지 정책뿐만 아니라,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사업 등 마찬가지로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한정하고 있는 지원사업 역시 아이를 돌보는 가구 전체를 대상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양육친화적인 주거환경을 반영한 공공임대 주택공급**이 이뤄져야 한다. 보고서 5장의 인터뷰 결과에서 드러나듯, 수도권 청년가구의 주거불안정은 위험하고 쾌적하지 못하거나 아이를 키우기 불리한 주거환경의 측면에서 기인하는 부분 역시 크다. 인터뷰 결과에 따르면, 높은 주거비용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쾌적하지 못한 주거환경을 택

하게 된 가구들은 자녀를 양육할 수 있을 만큼 만족스러운 주거환경을 마련하기까지 출산계획을 미루기도 했다. 국가에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은 이 같은 수요를 충족해야 할 사업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아이를 키우기에 지나치게 공급평수가 협소하거나 역세권·교육시설 등 아동양육에 필수적인 인프라와의 접근성이 불량해 아이를 키우는 가구에 오히려 선호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김지혜, 이재춘, 이길제, 김정인 외 2019).

우선은 공공임대주택사업의 입지 기준을 개선해 교육시설 및 역세권과의 접근성이 양호한 곳을 중심으로 공급 물량을 확대해야 한다. 공공임대주택의 공급물량에 집중하기보다는 매입임대 등 다양한 공급방식을 활용해 실제 아이를 키우는 가구의 선호를 반영한 주택공급이 이뤄지도록 함이 중요하다. 더불어, 공급평수와 방의 숫자 등의 공급형태에 있어서도 아이를 쾌적하게 키울 수 있는 환경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급·설계 기준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커뮤니티 기반의 돌봄 서비스와 공공임대 주택사업의 연계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공동육아나눔터 등의 육아지원 인프라가 신규 공급되는 단지를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보편화 단계에 이르지는 못한 상태다. 특히 영유아 단계의 인프라에 관련 사업이 집중되어 있어 초등학교 이후의 돌봄공백을 지원하는 인프라 공급은 취약하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현재 「주택법」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선해 일정 세대수 이상의 공동주택에 필수적으로 공급되어야 하는 주민공동시설의 범위에 돌봄 인프라를 추가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현재는 어린이집이나 놀이터의 의무설치가 규정에 포함되어 있다. 여기에 방과 후 보육을 지원하는 초등학생 대상의 돌봄시설을 의무화하고, 이를 물리적 기반으로 삼는 커뮤니티 기반의 양육 서비스를 확대하는 지원사업이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김지혜, 이재춘, 이길제, 김정인 외 2019).

## 3. 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시사점

본 연구의 분석들이 시사하는 바와 같이, 저출산 현상은 국토공간의 불균형과 얽혀 있는 문제다. 수도권으로 쏠린 일자리와 인구의 불균형은 주거비와 사회적 경쟁 수준을 증가시켜 수도권 청년들의 출산의향을 좌절시키는 맥락으로 작용하고 있다. 반면, 비수도권 다수 지역에서는 일자리와 인구의 이탈로 인해 경제기반과 정주환경이 부실해지면서 청년들이 미래를 꿈꾸며 안정적인 가정을 꾸릴 수 있는 기반이 좁아지고 있다. 이처럼 인구와 일자리가 이동하는 방향은 지역마다 엇갈리지만, 국토의 불균형이라는 구조적 문제는 수도권과 지방 모두에서 합계출산율과 조출생률을 낮추는 결과를 빚고 있다.

실증분석과 초점집단인터뷰의 결과는 **비수도권 저출산 심화의 주된 요인으로 고용불안정의 문제를 조명**하고 있다. 비수도권, 특히 주요 산업도시들이 안고 있는 고용불안정은 많은 부분 주력산업의 구조 변화에서 비롯된 결과다. 주력산업의 경쟁력이 건재하던 시절에는 구미, 울산, 창원, 거제, 영암, 목포, 군산을 비롯한 산업도시마다 장기근속이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었다. 여기서 발생하는 높은 소득은 지역 내 로컬 서비스 업종이나 주변 도시까지 흘러가는 성장의 낙수효과를 발생시키기도 했다. 이 같은 고용의 안정성은 젊은 청년인구를 지역으로 붙잡는 힘이었을 뿐 아니라, 지방산업도시에서 전국 최고 수준의 조혼인율과 출산율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기반이기도 했다.

그러나 후발산업국가의 기술 고도화로 인한 무역구조의 변화, 자동화 기술의 심화, 그리고 적대적인 노사관계가 맞물려 전통적인 산업도시의 고용기반은 빠르게 침식되고 있는 상태다. 경직된 노사관계로 인한 인건비 상승에 반응해 주요 기업들은 자동화와 모듈화를 확대하는 숙련 절약적인 기술 변화를 채택했다(양승훈, 2024). 즉, 현장노동자의 숙련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대신, 산업용 로봇과 엔지니어의 중요도를 높이는 기술 변화가 생산현장에 광범위하게 도입되면서 정규직 숙련 노동장의 고용 규모는 크게 줄어든 상태다. 정규직 숙련공 일자리가 줄어든 대신, 신규 일자리는 비정규직

하청기업이 조직하는 저숙련 생산직에 집중되고 있고 이마저도 해외 생산기지로의 이전 탓에 규모가 감소하고 있다(양승훈, 2024). 더불어, 산업도시들의 주요 R&D·엔지니어링 센터가 화성·판교·마곡 등 수도권으로 이동하면서, 지역산업의 쇄신과 고도화를 이끌어낼 엔지니어 집단의 대규모 유출도 진행되었다(양승훈, 2024).

이 같은 상황은 지방의 청년들을 나고 자란 지역 안에서 미래를 꿈꿀 수 없는 상황으로 내몰고 있다. 과거의 부모세대처럼 남성 가장이 제조업체에 정규직으로 취직해 외벌이로 가정을 부양하는 모델은 작동하지 않는다. 지방 도시에서도 맞벌이는 당연한 규범이 되었다. 그러나 저숙련·저임금 블루칼라 일자리는 대졸자가 다수인 지방 청년에게 선호되는 일자리가 아닐뿐더러 저숙련 서비스 직종과 비교해도 고용조건의 장점이 적다. 오랜 기간 제조업에 의존했던 지방 도시에는 청년들이 선호하는 화이트칼라 일자리의 규모가 부족할 뿐 아니라 청년들이 대학에서 획득한 숙련들을 효율적으로 매칭할 만한 다양성이 제한되기 때문에 원하는 직종·직무에서 경쟁력 있게 경력을 개발하기 어려운 조건이다(양승훈, 2019; 2024).

10년 뒤, 20년 뒤 자신의 경력이 지역 안에서 그려지지 않는 청년들에게 결혼이나 출산의 문제는 인생의 후순위일 수밖에 없다. 부모세대가 물려준 일터가 빠르게 침식되고 있는 상황에서 청년 다수가 맞닥뜨린 더 긴박한 질문은 지역에 남을 것인지, 떠날 것인지의 문제일 것이다. 단순히 기업을 유치하고 단지를 조성하는 것만으로는 희망을 줄 수 없다. 이미 '생산도시'로 전락해버린 '산업도시'에 새로운 생산기지를 유치한다 해서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터가 늘어나리라 기대할 수 없는 까닭이다(양승훈, 2024).

그보다는 지역산업기반의 다양성과 혁신성을 강화하기 위한 광역적인 공간구상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초광역권계획의 구도 안에서 산업생태계에 부재한 기능들을 식별하고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새로운 일자리 생태계를 육성해야 한다. 거기에는 젊고 창의적인 인재들이 진입해 학습하고 성장할 수 있는 교류환경과 정주환경이 결합되어야 하며, 이를 뒷받침하는 지역대학의 인력양성체계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전문직·서비스 직군과 고숙련 직종의 일자리가 창출될 때에야 저출산과 저출산의 문제를 함께 겪고 있는 지방의 인구감소 추세에 대응할

세력권이 형성될 수 있다.

강조되어야 할 또 다른 이슈는 **여성 일자리의 문제**다. 지방의 산업도시 다수는 제조업체에서 일하는 외벌이 가장을 중심으로 하는 노동시장이 형성되어 여성이 진입할 수 있는 일자리의 다양성이 크게 제한적이다. 공무원, 교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매우 한정된 영역의 일자리를 제외하면, 여성이 전문성을 발휘하며 장기적으로 경력을 밟아 나갈 수 있는 직종이 빈곤한 경우가 많다(양승훈, 2019). 그나마 존재하는 일자리는 대체로 저숙련·저임금 일자리에 국한되어 있어 여성 청년들이 장기적인 경력개발을 그려낼 수 없는 직종들이다. 이 때문에 지방 산업도시의 여성 청년 중 절대다수가 대학 진학이나 일자리 탐색, 그리고 결혼을 위해 타 지역, 특히 수도권으로 이주하게 된다(조성철, 강호제, 박정은, 김다윗 외 2019). 여성 청년들의 지역 이탈은 지방 도시의 조혼인율에 영향을 미쳐 저출산 현상을 부추길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문화적인 활력과 다양성을 저해하게 된다.

서정현(2018)의 분석은 20세에서 39세까지의 여성 청년 일자리가 전국 대비 인구소멸 위기지역에서 두드러지게 감소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2008년에서 2016년까지 전국적으로는 여성 청년 고용이 64,004명 증가했던 것과 달리, 인구소멸 위기지역에서는 29,689명이 오히려 감소하였다. 감소한 고용의 약 72%는 로컬 서비스, 의료보건교육공공 서비스, 사회기반 서비스 직종에서 발생했다. 반면, 같은 기간 전국적으로 여성 청년의 비즈니스 서비스 고용이 101,737명 증가한 것과 달리 인구소멸 위기지역에서는 증가분이 198명에 지나지 않았다. 이처럼 청년들의 선호도가 높은 고숙련 전문직 일자리가 특정 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구조 탓에 여성 근로자의 지방 도시 이탈은 사실상 강제되고 있다고 진단할 수 있다.

지방 도시의 여성 일자리 빈곤은 제조업에 편중되어 왔던 지역산업 육성 정책에 일정 부분 기인하는 것이다. 이 같은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젊은 여성 근로자를 대상으로 삼는 다양한 서비스직 일자리의 육성 정책이 지방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규모 있게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청년몰이나 청년창업 등의 일자리 사업도 유효할 수 있겠으나, 그보다 넓은 범위의 여성 청년인구를 유입시키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커리어 패스를 설

계할 수 있는 전문직, 기술직, 사무직 일자리가 지방 도시의 노동시장에서도 확대될 수 있어야 한다(양승훈, 2024).

최근 추진되고 있는 국토교통부의 도심융합특구는 입지적·기능적 측면에서 서비스업의 지방 클러스터 육성이라는 정책목표에 연계될 잠재력을 갖고 있다. 2023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대전·부산·대구에 잇따라 선도사업지구를 지정한 디지털 혁신거점이나 연구산업진흥단지 역시 지방 광역대도시를 중심으로 IT 및 연구개발 서비스 업종의 거점을 형성하기 위한 사업이라는 점에서 비슷한 취지를 갖고 있다. 이 같은 사업들을 광역대도시를 중심으로 연계해 장기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여성 청년들이 다양한 성장의 기회를 탐색하며 경력의 사다리를 올라갈 수 있는 일자리 생태계를 만드는 데 정책자원을 집중해야 한다.

## 4. 연구의 성과와 향후 연구방향

본 연구는 몇 가지 지점에서 기존 저출산 관련 문헌의 논의를 이론적·실증적으로 확장하고 있다. 첫째, 수도권과 대비되는 비수도권의 저출산 현황과 그 구조적인 요인을 조명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간의 논의가 수도권은 저출산, 비수도권은 청년유출의 단순한 이분법을 전제했던 것과 달리 본 연구는 비수도권 내부에서도 저출산의 추세가 심화되고 있는 지역들이 존재한다는 점을 관찰했으며 그 영향요인 역시 수도권과는 구별되는 메커니즘을 갖고 있다는 점을 실증하였다.

둘째, 청년의 출산의향을 제약하는 조건으로서 고용불안정의 문제를 조명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간 정규직 여부나 소득 수준 등 출산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고용상태의 역할을 실증한 연구는 더러 존재했으나 저출산 현상의 중심된 변수로 논의한 사례는 드물며, 특히 본 연구와 같이 지역 수준에서의 고용불안정 문제를 논의한 연구는 매우 희소하다. 반면, 본 연구는 실증분석을 통해 비수도권의 저출산 현상을 설명함에 있어서는 기존 문헌이 강조했던 주거불안정의 요소 이상으로 고용불안정의 요소가 주효하

게 작용함을 실증하였다. 더 나아가, 비수도권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초점집단인터뷰를 통해 지역의 노동시장 구조와 전망이 청년들의 결혼·출산 이행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고, 이에 기초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그럼에도, 특히 실증적인 측면에서는 본 연구의 분석방법을 개선해야 할 여지가 남아있다. 우선적인 한계는 **지역별 정주환경에 대한 지표 추가**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선행연구인 류승한, 조성철, 남기찬(2022)에서는 국토지리정보원의 생활SOC 관련 시설 접근성 지표를 활용해 지역별 정주환경을 추정함으로써 청년인구 유입에 대한 정주환경을 실증한 바 있다. 비슷한 방법론의 적용이 본 연구에서도 유효할 수 있겠으나, 국토지리정보원의 정주환경 관련 시설 공간정보를 시계열로 구축하는 작업에 어려움이 있어 작업이 반영되지 못했다.

아파트 매매·전세 가격을 기준으로 주거환경을 조작화한 현재의 분석 틀에서는 주거불안정의 효과가 수도권에서만 주로 확인된다는 실증이 도출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의 2장에서는 **비수도권의 주거불안정이 수도권처럼 주거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인구감소 및 지자체 재정악화에 맞물려 있는 정주환경의 문제**로 접근되어야 한다고 논의한 바 있다. 이를 실증모형에서 반영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지역과 비수도권 지역의 정주환경 격차를 의미 있게 정량화할 수 있는 지표를 확보해 모형에 반영**하는 노력이 추가적으로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장의 분석의 경우, 향후 연구에서는 개인 수준의 청년패널조사와 시군구 수준의 통계자료를 결합해 다층모형 분석을 수행해 통계치의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 시도한 바와 같이, 군집화된 강건표준오차를 적용하는 것만으로도 잔차항의 자기상관성 문제로 인한 우려는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다. 다만, 다층모형을 적용할 경우, 보다 엄격하고 보수적인 가정에서 자료의 위계적 구조를 다룰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층위 간의 상호작용을 유연하게 검정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예를 들어, 다층모형은 지역 수준 부동산가격 상승에 따른 출산율 제약효과가 개인의 자가소유 여부나 주거비 부담 비중에 따라 조절되는지를 검정하는 데 유리한 분석조건을 제공할 수 있다. 이 점을 고려해 향후 연구에서는 인구주택총조사 원시자료와 같은 대규모

표본자료를 추가적으로 확보해 유사한 모형명세를 가진 다층모형을 추정하고 분석결과를 비교할 수 있을 것이다.

또 다른 과제는 수도권 거주자와 비수도권 거주자 등의 집단을 구분해 분석결과의 차이를 비교하는 것이다. 4장의 분석에 활용된 청년패널조사의 경우 각 조사연도의 근무지 시군구 코드를 추적함이 가능할 뿐 아니라 만 14세 당시의 거주지, 고등학교·대학교 등의 소재지, 첫 직장의 소재지 등 삶의 이행과정에 따른 거주지·근무지 정보를 추적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수도권과 지방에서 나고 자란 집단뿐만 아니라 대학이나 취직 등의 시점에서 지역을 옮긴 집단을 각각 추출해 출산의향의 변화를 비교하거나 출산의향의 영향요인이 상이한지를 비교하는 작업을 수행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다. 그러나 본 보고서 4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청년패널조사 단일 조사연도 응답표본의 규모가 충분히 크지 못했던 탓에 집단을 세분화해 분석결과를 비교하는 작업이 추진되기 어려웠다. 특히 수도권에서 지방, 혹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거주지와 근무지를 옮긴 경우는 전체 표본에서 각각 10% 미만을 차지했기 때문에 다양한 변수의 효과를 검정하기에 무리가 따랐다. 그럼에도 향후 연구에서는 적어도 수도권·비수도권을 구분하거나 혹은 표본 수가 충분히 확보 가능한 기타 자료를 활용함으로써 청년 응답자의 지역 여건을 구분한 분석결과를 수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REFERENCE

**【 인용문헌 】**


관계부처합동. 2020.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감사원. 2021. 감사보고서: 인구구조변화 대응실태 I (지역).

강동우, 고영우, 김현지, 남수연, 전은하. 2018. 인구구조 변화 및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지역고용정책 사례 연구. 세종: 한국노동연구원.

강동익, 송경호. 2021. 주택가곡변동이 혼인율과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적 함의. 세종: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고우림. 2021. 출산력에 대응한 융합적 탐구: 인구밀도와 편중 분포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구형수. 2018. 생활SOC 정책의 주요 이슈와 전략적 추진방향. 국토정책 Brief No. 696. 세종: 국토연구원.

김동현, 전희정. 2021. 지역출산율의 공간적 상호의존성과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공간패널분석을 활용하여. 국토계획 56(4): 173-193. 서울: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김민영, 황진영. 2016. 주택가격과 출산의 시기와 수준: 우리나라 16개 시도의 실증분석. 보건사회연구 36(1): 118-142.

김영아, 곽은혜, 김근태. 2022. 노동과 출산 의향의 동태적 분석. 세종: 한국노동연구원.

김지운. 2017. 미스매치에 의한 실업에 대한 연구: 산업별 미스매치를 중심으로. KDI 정책연구시리즈 2017-15.

김지혜, 이재춘, 이길제, 김정인, 조한진. 2019. 저출산 시대에 대응한 양육친화적 주거정책 연구. 세종: 국토연구원.

국토교통부. 2023. 대도시권 광역 통행량 전년 대비 7.0% 증가: '22년 대도시권 광역교통조사 결과 발표…대중교통 이용 11.1% 증가. 6월 27일. 보도자료.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https://rt.molit.go.kr/ (2023년 11월 10일 검색).
류승한, 조성철, 남기찬. 2022. 청년정책의 패러다임과 전략연구: 균형발전과 미래청년.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맬서스, 토머스. 이서행 역. 2011. 인구론. 서울: 동서문화사.
박관태, 전희정. 2020. 인구규모에 따른 지역 간 출산율 차이 및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대도시, 중소도시, 농촌 비교 분석. 한국지역개발학회지 32(4).
박종서, 임지영, 김은정, 변수정, 이소영, 장인수, 조성호, 최선영, 이혜정, 송지은. 2023. 2021년도 가족과 출산조사: (구)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진백, 권건우. 2023. 저출산 원인 진단과 부동산정책 방향 연구. 세종: 국토연구원.
배호중, 강시온, 한창근, 2020. 첫 일자리 특성이 혼인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복지학 72(4): 93-124.
배호중, 양은모. 2023. 통근이 직장만족도 및 이직의향에 미치는 영향: 대졸 신규입직자를 중심으로. 직업능력개발연구 26(1): 73-111.
배호중, 한창근. 2016. 신혼부부의 주택자산과 출산: 2000년 이후 혼인가구를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36(3). 203-238.
송창현, 임업. 2023. 지역노동시장 수준에서 청년층 임금근로자의 직업이동 패턴과 영향요인 분석. 지역연구 39(3): 49-63.
서정현. 2018. 젊은 여성 일자리의 지역별 특성과 시사점: 지방소멸위기지역을 중심으로. KIET 산업경제 232: 30-41.
안홍기. 2020. 균형발전과 지역일자리 창출 대안으로서 사회적경제와 과제. 국토연구원 워킹페이퍼 WP 20-10.
양승훈. 2019. 중공업 가족의 유토피아. 파주: 오월의 봄.
_____. 2021. “제가 그래도 대학을 나왔는데”: 동남권 지방대생의 일경험과 구직. 경제와 사회 131: 10-54.
_____. 2024. 울산 디스토피아, 제조업 강국의 불안한 미래. 서울: 부키.

우해봉, 장인수. 2019. 출산 계획과 출산 행위 간 연관성 분석과 시사점. 사회복지정책 46(2): 85-115.
원숙연, 최윤희. 2018. 우리나라 광역자치단체 출산율의 영향요인: 자녀에 대한 비용관련 요인을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27(3): 231-268.
이민아. 2012. 계획적 무자녀 가족.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571-591.
이삼식, 최효진. 2012. 주거행태와 결혼·출산 간 연관성 분석.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삼식, 이지혜. 2014. 초저출산현상 지속의 원인과 정책과제.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수현. 2012. 기혼여성의 무자녀 결정 시기와 요인에 관한 연구. 여성학연구 22(3): 43-88.
이승윤. 2019. 청년 불안정노동의 시대. 황해문화 103: 20-43.
이용만, 김현영, 이현진. 2015. 주거안정 정책 관련 실태조사. 서울: 국회예산정책처.
이진성, 이창현. 2014. 주택가격 변동률을 중심으로 한 불안정 주택시장 주택가격지수 결정요인 분석. 부동산학보 59: 203-216.
이훈, 성진욱. 2022. 공공임대주택이 신혼부부 출산간격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적 시사점. 국토계획 57(5): 136-156.
임병인, 서혜림. 2021. 여성의 가족가치관과 결혼 및 출산의향. 보건사회연구 41(2): 123-140.
장인수, 우해봉, 박종서, 정진우. 2021. 2021년 인구변동 모니터링과 정책과제: 지역인구 감소를 중심으로.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회.
정민수, 김의정, 이현서, 홍성주, 이동렬. 2023. 지역간 인구이동과 지역경제. BOK 이슈노트(제2023-29호). 서울: 한국은행.
정재훈, 김수완, 김영미. 2017.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세종: 여성가족부.
정재훈. 2024. 0.6의 공포. 사라지는 한국. 파주: ㈜북이십일 21세기 북스.
조성철, 강호제, 박정은, 김다윗, 탁혜영. 2019. 청년친화형 산업공간 육성전략 연구. 세종: 국토연구원.

조성호, 문승현, 김종훈. 2020. 일자리 안정과 저출산 대응 방안 연구. 연구보고서 2020-32.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성호, 문승현. 2021. 일자리 관련 요인과 출산 의향에 관한 연구. 보건사회연구 41(4): 262-279.

조성호, 이지나, 김근태. 2021. 기혼부부의 무자녀 선택과 정책과제. 연구보고서 2021-33.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영광. 2018. 빅데이터로 예측하는 대한민국 부동산의 미래. 서울: 미지biz.

조영태. 2021. 인구 미래 공존. 서울: 북스톤.

천현숙, 이길제, 김준형, 윤창원. 2016. 주택과 출산 간의 연계성에 관한 거시-미시 접근.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통계청. 2021.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표본 집계 결과(인구 특성항목). 11월 29일. 보도자료.

한지혜, 남진. 2023. 서울시 공공임대주택의 특성과 가구의 경제적 향상에 관한 연구. 국토계획 58(2): 104-115. 서울: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허문구, 이상호, 김윤수, 유이선, 조성민, 김진영, 조승국, 장인수, 박승규, 이용균, 한은주, 장재홍, 정성훈, 박경, 윤영모, 최예술, 이명종. 2022. 지방소멸 시대의 인구감소 위기 극복방안: 지역경제 선순환 메커니즘을 중심으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2-44-01. 세종: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홍석철. 2023. 인구위기의 지역경제 파급 영향과 정책 대응 방향. 2023 BOK 지역경제 심포지엄(2023.11.2) 발표자료.

Auer, P. and Cazes, S. 2000. The Resilience of the Long-Term Employment Relationship: Evidence from the Industrialized Countries. International Labour Review 139(4).

Cameron. C. A. and Miller, D. L. 2015. A practitioner's guide to cluster-robust inference. Journal of Human Resources 50(2): 317-372.

Erlinghagen, M. 2006. Job Stability, Mobility and Labour Market Restructuring. Evidence from German Microdata. management revue 17(4): 372-394.

Dasgupta, S. 2001. Employment Security: Conceptual and Statistical Issues (Vol. 10). Geneva: International Labour Office.

Dettling, L. and Kearney, M. S. 2014. House prices and birth rates: The impact of the real estate market on the decision to have a baby. Journal of Public Economics 110: 82-100.

Florida, R. 2017. *The New Urban Crisis: How Our Cities Are Increasing Inequality, Deepening Segregation, and Failing the Middle Class-and What We Can Do About It*. New York: Basic Books.

Lovenheim, M. F. and Mumford, K. J. 2013. Do Family Wealth Shocks Affect Fertility Choices? Evidence from the Housing Market Boom and Bust. Th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95(2): 464-475.

Raudenbush, S. W. and Bryk. A. S. 2001. Hierarchical Linear Models. California: SAGE Publications, Inc.

Simon, C. J. and Tamura, R. 2009. Do higher rents discourage fertility? Evidence from US cities, 1940-2020. Regional Science and Urban Economics 39(1): 33-42.

Yi, J. and Zhang, J. 2010. The effects of house price on fertility: Evidence from Hong Kong. Economic Inquiry 48(3): 635-650.

Hui, E. C., Zheng, X. and Hu, J. 2012. Housing price, elderly dependency and fertility behaviour, Habitat International 36(2): 304-311.

Liu, M. and Clark, J. 2016. The effects of the price of housing on family size: Theory and empirical analysis from New Zealand, New Zealand Economic Papers 51(3): 281-301.

**【 통계자료 】**

고용조사 분석시스템 청년패널조사 자료(YP2007). https://survey.keis.or.kr/yp/ypdownload/List.jsp (2023년 7월 25일 검색).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https://kosis.kr. 주민등록인구현황, 인구동향조사, 도시계획현황, 국내인구이동통계, 전국사업체조사, 사업체노동력조사, 지역소득. (2023년 11월 10일 검색).

행정안전부 지방재정365(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 https://www.lofin365.go.kr/ (2023년 11월 10일 검색).

**【 인터넷자료 】**

거제저널. 2023.4.3. "아이 울음소리가 사라지면.."...조선도시 거제, 진짜 위기는? . http://m.geojejournal.co.kr/news/articleView.html?idxno=82531 (2023년 6월 15일 검색).

국제신문. 2023.11.29. 부산 출산율 0.5명대 진입하나...3분기 0.64명 '역대 최저'. https://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200&key=20231129.99099009059 (2024년 3월 25일 검색).

아주경제. 2024.1.31. 부산시, '청년 유출' 심각...지난해 1만1226명 수도권행. https://www.ajunews.com/view/20240131102304974 (2024년 3월 25일 검색).

KBS뉴스. 2021.2.16. [취재후] 저출산 예산 200조 원 썼다는데…전문가들 "착시 효과".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5118584 (2024년 3월 25일 검색).

# SUMMARY

## Regional Disparities in Low Birth Rates and Their Causes: Focusing on Housing and Employment Instability

Cho Sungchul, Hong Saheum, Shin Suhkyung, Kim Seokyun, Yang Seunghoon

**Key words:** Low Birth Rates, Regional Disparities, Housing Instability, Employment Instability

This study hypothesizes that employment and housing insecurity contribute to the low fertility phenomenon and tests the hypothesis through empirical analysis and interviews. Previous studies have discussed the role of housing instability in reducing fertility, and some studies have documented the impact of unstable employment on family planning. However, this study differs from previous studies in that it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housing and employment insecurity and low fertility as a regional issue, whereas previous studies have generally focused on individual and household-level issues.

Chapter 2 of this report sets out the theoretical framework that runs throughout the study. The effects of housing and employment insecurity on low birth rates were theoretically hypothesized at both the individual and neighborhood levels. At the individual level, housing insecurity can be based on housing conditions, such as housing cost burden as a percentage of income or ownership status, but it can also be defined in terms of housing environment,

such as the average time spent commuting to work or access to basic amenities. While housing insecurity at the local level is typically measured through macro-indicators such as real estate price growth and housing supply conditions, there has been some discussion that it should also be examined in terms of the overall settlement environment. At this point, the study distinguishes between metropolitan and non-metropolitan contexts. In the case of densely populated metropolitan areas, housing costs, such as rising real estate prices, are likely to be the main factor affecting housing stability, but in many non-metropolitan areas with declining populations, the quality of the basic settlement environment is a key determinant of housing stability.

Employment stability was also hypothesized to affect the fertility intentions of young households at both the individual and regional levels. Employment status, such as full-time employment, and employment prospects, such as the likelihood of long-term employment, affect not only the decision to marry and have children, but also the timing of the transition. On the other hand, at the local level, medium- to long-term labor market prospects and uncertainties may affect the employment security of individuals in the local labor market. In this study, we hypothesize that the effect of local-level employment insecurity is more pronounced in the context of non-metropolitan industrial cities that tend to specialize in certain sectors.

The theoretical hypothesis is tested in two stages, through a region-level analysis (Chapter 3) and an individual-level analysis (Chapter 4), followed by a qualitative interview study (Chapter 5) to understand the context and motivations that are difficult to observe through quantitative research. In Chapter 3, we first identify factors that explain regional disparities in fertility through a fixed-effects panel data analysis at the municipality level to test

whether the theoretical hypotheses developed in Chapter 2 have explanatory power for regional disparities in fertility and birth rates by manipulating regional-level variables related to employment and housing insecurity and including them in the model. The empirical results show that the effects of employment and housing instability vary across regions. In particular, when the empirical analysis was conducted separately for metropolitan and non-metropolitan areas, the effects of housing and employment instability were mixed. In the metropolitan areas, the effects of housing instability variables such as the growth rate of home sales prices and rental prices were significant in explaining both the total fertility rate and crude birth rate. In contrast, in non-metropolitan areas, the effects of housing instability were either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or had low strength, while employment stability-related variables, such as employment growth, had high explanatory power in explaining regional differences in fertility.

These findings are consistent with the theoretical hypotheses discussed in Chapter 2. In metropolitan areas with high housing cost burdens and high house price growth, housing instability is a factor that exacerbates fertility decline. In non-metropolitan areas, however, the effect of employment insecurity is more pronounced than that of housing insecurity, with both total and crude fertility rates worsening in areas where there is a lack of good jobs or where employment has not performed well in the last three years.

Chapter 4 examines the effects of micro and macro factors on young people's fertility intentions through individual-level statistical analysis. Unlike the analysis in Chapter 3, which correlates aggregated indicators at the municipality level, the analysis in Chapter 4, which is based on the Youth Panel Survey, extends and deepens the findings of Chapter 3 in that it more directly identifies

individual, household, and neighborhood characteristics that influence fertility intentions. The results of the individual-level regressions are broadly supportive of the theoretical hypotheses in Chapter 2 and the region-level empirical results in Chapter 3. Even when controlling for individual-level characteristics, neighborhood-level housing and employment stability variables such as average apartment sales prices and employment growth rates are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explaining individual fertility. On the other hand, we are able to demonstrate that individual-level housing and employment security attributes, such as household housing cost burden and full-time employment, contribute significantly to explaining fertility.

In the final chapter, Chapter 5, we conduct focus group interviews on fertility factors in metropolitan and non-metropolitan areas. In general, the content of the interviews extends the qualitative discussion in a way that is consistent with the theoretical hypotheses and empirical findings of this study on employment and housing stability and fertility, i.e., respondents in the metropolitan areas discussed the relationship between housing costs and fertility in different contexts, while respondents in the non-metropolitan areas discussed the experiences of young people considering their life path and family planning in the context of long-term job prospects in the region. However, it is worth noting that some of the interviews shed light on issues that were not covered in the theoretical discussion and empirical analysis. For example, in the metropolitan areas, we heard that housing insecurity is not just a matter of cost, but also stems from the lack of a nurturing environment. In the non-metropolitan areas, the issue of settlement environment, where it is difficult to find a pediatrician even if you go outside the city, was repeatedly raised, and the issue of cultural vitality and diversity, which was difficult to quantify in the empirical analysis,

was also pointed out as a factor that accelerates the out-migration of young people. Finally, the interviews also contained discussions with strong policy implications, particularly on issues of eligibility for housing welfare and the post-primary social care system, which were highlighted in the metropolitan areas. Policy attention should also be paid to issues such as the lack of jobs for women and the absence of career paths favored by young people, which were raised in the non-metropolitan interviews.

기본 24-04

# 저출산 현상의 지역별 격차와 요인: 국토 불균형에 따른 주거·고용 불안정성을 중심으로


저　　자 조성철, 홍사흠, 신서경, 김석윤, 양승훈
발 행 인 심교언
발 행 처 국토연구원
출판등록 제2017-9호
발　　행 2024년 4월 30일
주　　소 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 5
전　　화 044-960-0114
팩　　스 044-211-4760
가　　격 7,000원

ISBN 979-11-5898-951-4
홈페이지 http://www.krihs.re.kr


ⓒ 2024, 국토연구원



이 연구보고서를 인용하실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재해주십시오.
조성철, 홍사흠, 신서경, 김석윤, 양승훈. 2024. 저출산 현상의 지역별 격차와 요인: 국토 불균형에 따른 주거·고용 불안정성을 중심으로. 세종: 국토연구원.



이 연구보고서는 연구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정부나 국토연구원의 공식적인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연구보고서는 한국출판인협회에서 제공한 KoPub 서체와 대한인쇄문화협회가 제공한 바른바탕체 등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제1장 서론
제2장 저출생과 균형발전의 이론적 관계
제3장 저출생 현상의 지역별 격차와 영향요인
제4장 청년의 출산의향과 주거·고용 안정의 관계
제5장 심층면접조사를 통한 저출산의 영향요인 탐구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저출산 현상의 지역별 격차와 요인 : 국토 불균형에 따른 주거·고용 불안정성을 중심으로**

**Regional Disparities in Low Birth Rates and Their Causes: Focusing on Housing and Employment Instability**

KRIHS 국토연구원
(30147) 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 5 (반곡동)
Tel. (044) 960-0114 | Fax. (044) 211-4760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값 7,000원
93300
9 791158 989514
ISBN 979-11-5898-951-4